

11-1352000-001572-01

정책보고서 2015-66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연구

이삼식 외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송민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선주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보육지원센터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태현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신손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통계팀장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여년간 출산율은 1.2 내외에서 지속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저출산 덩어리’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인구학적인 현상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개인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이 가져 올 미래 사회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상승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5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4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7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9
제2절 출산율 증가 시 사회경제적 편익	11
제3절 저출산대책 투자에 대한 합의	52
제3장 1·2차 기본계획 평가와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72
제1절 1·2차 기본계획 평가	92
제2절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93
제4장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94
제1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15
제2절 결혼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97
제3절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201
제5장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511
제1절 임신·출산 지원 강화	1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41
제3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751

제6장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7·6·1
제1절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	961
제2절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981
제3절 돌봄 지원 체계 확충	991
제7장 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7·3·2
제1절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932
제2절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932
제3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932
제8장 결론	279
제1절 정책 관리 방안	281
제2절 결론	285
참고문헌	291

표 목차

<표 2- 1>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1
<표 2- 2> 난임부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기여도 추정	3
<표 2- 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회복 경로	4
<표 2- 4> 인구추계 시나리오	5
<표 2- 5>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전망	7
<표 2- 6> 출산율 회복 시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비 전망	8
<표 2- 7> 출산율 회복 시 잠재성장률에의 편익	3
<표 3- 1> 저출산대책 예산 추이	9
<표 3- 2> 난임지원건수 및 성공한 출산이 전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0
<표 3-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 추이	1
<표 3- 4> 35세 이상 미혼남녀(35세 이상)의 비혼 이유	2
<표 3- 5>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자녀수	3
<표 3- 6>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3
<표 3- 7> 1자녀 출산 유배우여성(15~44세)의 추가 출산 중단 이유	4
<표 4- 1> 중소기업 위상지표 추이	2
<표 4- 2> 주요국의 임금10분위 배율	4
<표 4- 3> 공공부문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1
<표 4- 4> 지역우량임대주택의 정비기준	3
<표 4- 5>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 내용	3
<표 4- 6> 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	6
<표 4- 7> 공유형 모기지 비교	9
<표 4- 8> 근로자주택제도 개요	2
<표 4- 9> 근로자주택 공급 실적	2
<표 4-10>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분포	6
<표 4-11> 20대~30대 주택 점유형태	8
<표 4-12>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과 월임대료 (산출 예시)	9
<표 4-13> 출산문제의 책임에 대한 주요국 국민의 인식	5
<표 5- 1>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 분포	8
<표 5- 2> 각국의 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자 연령 범위	9
<표 5- 3> 한부모의 취업유무 및 유형에 따른 소득보장 및 양육지원서비스	5

<표 5- 4> 주요 다자녀 기본생활비용 감면제도 현황	5·5· 1
<표 5- 5>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9·5 1
<표 5- 6> 보호대상 아동 발생 현황	3·6 1
<표 6- 1>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 주요 내용	0·7· 1
<표 6- 2> 유형별 어린이집 시설수 및 이용인원	3·9· 1
<표 6- 3> 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5·1· 2
<표 6- 4> 2015년 시간제보육료 지원기준	9·1 2
<표 6- 5>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7·2· 2
<표 6- 6> 모의 퇴근시간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시각	7·2· 2
<표 7- 1> 기업규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 2014	0·4· 2
<표 7- 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1·4 2
<표 7- 3>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1·5· 2
<표 7- 4> 기업규모별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현황	7·5· 2
<표 7- 5>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3·6· 2
<표 7- 6>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분위기	4·6· 2
<표 7- 7> 주요국의 전체 출산관련 휴가기간 및 아빠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비교	4·6· 2
<표 7- 8> 주요국의 부성휴가제도 비교	5·6 2
<표 7-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및 급여 총액, 2011~2014	2·7· 2
<표 7-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방법	2·7· 2
<표 7-11> 유럽 15개국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여부	4·7· 2
<표 8- 1>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방안	8· 2

그림 목차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9
[그림 2-2]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
[그림 2-3]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측면에서의 편익	1
[그림 2-4]	출산율 회복 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편익	1
[그림 2-5]	출산율 회복 시 노동가능인구의 부양부담 측면에서의 편익	2
[그림 2-6]	출산율 회복 시 노동력 수급에의 편익	2
[그림 2-7]	출산율 회복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에의 편익(재정수지차)	2
[그림 3-1]	보육교육비 예산액 추이	3
[그림 3-2]	초혼연령(평균) 추이	3
[그림 3-3]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11	3
[그림 3-4]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
[그림 3-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3
[그림 3-6]	GDP대비 가족지출	3
[그림 3-7]	저출산대책 영역별 투자	3
[그림 3-8]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기본틀)	4
[그림 3-9]	돌봄지원체계 확충 모형도	4
[그림 4-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제조업)	5
[그림 4-2]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제조업 부문	5
[그림 4-3]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정규직 근로자의 상위 10% 임금/하위 10% 임금 변 화율	54
[그림 4-4]	15~29세 청년층 NEET비율(2013년 기준)	5
[그림 4-5]	능력중심사회와 NCS	7
[그림 4-6]	130개 공공기관 NCS 채용 도입 절차, 2015	7
[그림 4-7]	지역·산업계 주도 NCS 활용 확산 추진체계	7
[그림 4-8]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주택 공급 실적	1
[그림 4-9]	저출산극복 국민운동본부 구축(예시)	1
[그림 5-1]	임신중 당뇨병 진료 환자 및 진료비 추이	1
[그림 5-2]	임신성 당뇨관련 서비스 흐름도	1
[그림 6-1]	유치원 전경	791
[그림 6-2]	옥외 놀이공간	791

[그림 6- 3]	교실	791
[그림 6- 4]	식당 내 배식대	791
[그림 6- 5]	유치원 전경	891
[그림 6- 6]	옥외 놀이공간	891
[그림 6- 7]	쌓기놀이공간(Lego)	8·9 1
[그림 6- 8]	볼더링룸(암벽타기)	8·9 1
[그림 6- 9]	유치원 출입구(별도)	9·9 1
[그림 6-10]	옥외 놀이공간	991
[그림 6-11]	복도	991
[그림 6-12]	교실	991
[그림 7- 1]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사유, 2014	6·4· 2
[그림 7- 2]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 2013	6·5· 2
[그림 7- 3]	기업이 인식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긍정적 효과, 2013	6·5· 2
[그림 7- 4]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어려움, 2013	7·5· 2
[그림 7-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방안	7·7· 2

제 1 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32년간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가 동반되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개인의 삶의 질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및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최근 1.2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지 못한 실정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진할 계획
 -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및 세부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
- 본 연구는 출산율의 반등세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편익을 예측하여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 필요성 입증
 - 1·2차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모색
 -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전략별로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본 연구의 결과는 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2절 연구내용

-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다양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출산율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저출산대책 투자의 사회경제적 효용성 분석
- 현재의 아주 낮은 출산율 수준을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도출
-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 제 영역에서의 저출산 대응 방안 개발

제3절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외국사례 분석
-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 연구
 -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 고찰
- 인구통계학적 분석 실시

- 인구변동 분석

- 출산율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 전문가회의 개최

-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 시 수시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적극 반영

제 2 장

출산율 변동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제2절 출산율 증가 시 사회경제적 편익

제3절 저출산대책 투자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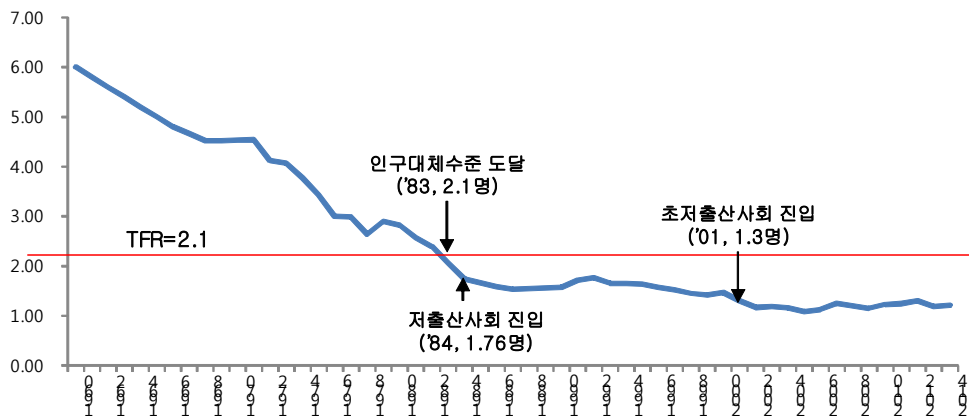
2

출산을 변동과 사회경제적 과급효과 <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 저출산현상이 1983년 이래 32년간 지속, 초저출산현상이 2001년 이래 15년간 지속
-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1983년 2.06명으로 인구대체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감소
-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0명 미만으로 감소한 이래 2005년에 1.08명까지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1.2 내외 수준 유지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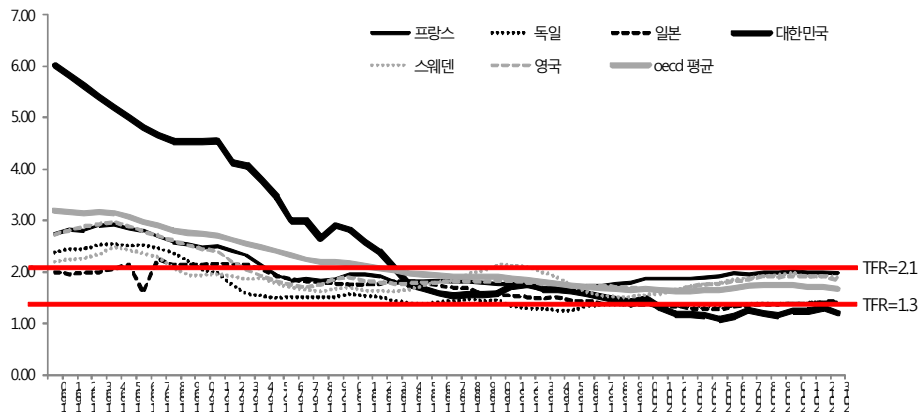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출생통계, 2015.08.13.일자 반출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 참고로 2014년을 기준으로 홍콩 1.23명, 싱가포르 1.25명, 포르투갈 1.23명으로 나타남.¹⁾
- 한국 출산율은 OECD국가 출산율 평균(1.7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

-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960년 3.65(1960)에서 2002년 1.63(최저)으로 감소하는데 42년 소요, 이후 반등하여 1.7수준 유지
- 개별 국가 중 프랑스의 경우 1964년 2.91명에서 1994년 1.66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2014년 1.98명 등 인구대체수준에서 지속
- 스웨덴은 1999년 1.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1.9명 유지

[그림 2-2]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 OECD (2015c),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우리나라 출산율 추이의 주된 특징으로는 단기간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 초저출산수준 장기화 등을 들 수 있음

○ (단기간 출산율 급감)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2005년 1.08로 약 5명이 감소하는데 45년 기간이 소요

-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출산율 평균은 1960년 3.65명에서 2002년 1.63명(최저)으로 2명이 감소하는데 42년 기간 소요

○ (초저출산현상 최장 지속)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명 미만(초저출산현상 기준)으로 낮아진 이래 2014년 현재까지 14년 동안 초저출산현상 지속

1) 홍콩 통계청(<http://www.censtatd.gov.hk>), 싱가포르 통계청(<http://www.singstat.gov.sg>), 포르투갈 통계청(<http://www.ine.pt>)

- － 현재까지 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한국 포함)이었으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초저출산현상 탈피

〈표 2-1〉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 경험 국가

국가	인구대체수준 도달 연도	TFR 1.3명 도달	TFR 1.3명 미만 지속기간 (누적 기준)	최저 수준 TFR (년도)	최근 TFR (년도)
한국	1983	2001	14년(2001~현재 2014)	1.08(2005)	1.21(2014)
체코	1980	1995	11년(1995~2005)	1.13(1999)	1.46(2013)
독일	1970	1992	4년(1992~1995)	1.24(1994)	1.41(2013)
그리스	1981	1996	8년(1996~2003)	1.24(1999)	1.30(2013)
헝가리	1978	2003	5년(1999, 2003~2004, 2010~2011)	1.24(2011)	1.41(2014)
이탈리아	1977	1993	11년(1993~2003)	1.19(1995)	1.39(2013)
일본	1960	2003	3년(2003~2005)	1.26(2005)	1.43(2013)
폴란드	1989	2002	6년(2002~2006, 2013)	1.22(2003)	1.26(2013)
슬로바키아	1989	2000	8년(2000~2007)	1.19(2002)	1.34(2013)
슬로베니아	1981	1995	11년(1995~2005)	1.20(2003)	1.55(2013)
스페인	1981	1994	10년(1994~2002, 2013)	1.16(1998)	1.27(2013)

자료 : OECD(2015c),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제2절 출산율 증가 시 사회경제적 편익

1. 개요

가. 개념

□ 기본적으로 출산율 증가 시와 출산율 현 수준 유지 시(또는 통계청 중위가정에 따른 출산율 변동) 간 비교를 하여 그 차이를 출산율 증가 시 편익으로 간주

○ 출산율 증가 시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인구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효과를 추정

나. 출산율 단기변동 가정 설정

(1) 고려 요소

□ 최근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합계출산율은 2005년 최저점(1.08명)을 벗어난 이래 1.1~1.3명 사이에서 가임여성인구 변동, 경제위기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등 2년째 계속 증가
 - 2015년도 월별 출생아수의 추이를 감안하면 2015년에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나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정책의 효과성

- 결혼의 주된 장애요인인 고용불안정(실업, 비정규직 등)과 주거비용 부담 해소를 통해 결혼률 감소추세의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
 - 참고로 2013년도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청년층 고용률 상승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성은 약 30% 수준
 - 2040년 기준으로 지역의 여성혼인율은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0.13%p 향상, 여성초혼연령은 0.4세 감소 효과 발생(천현숙 외, 2012)
 - 결혼 1년차 초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자가 단독주택 29.3세, 자가 아파트 28.95세, 무상 단독주택 및 월삭세 연립다세대 28.87세, 무상 아파트 27.78세로 나타남(박준오, 2014).
- 보육서비스 내실화, 일가정양립 제고, 난임부부 등 임신·출산 지원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유배우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
 - 영유아보육은 출산율 제고에 항상 효과적(은석, 2015)
 - 추가 출산계획이 2012년 14.2%에서 2013년 16.9%로 완전무상보육 실현(2013년) 전후로 상승(서문희·이혜민, 2014)

-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촉진 효과 (우석진, 2008)
- 육아휴직 강화(특히, 남성의 육아휴직)를 통해 출산율 제고 가능
 - 남편의 가사 및 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자녀 출산의향 증가(이삼식 외, 2009b)
 -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2006년 38천명에서 60천명으로 증가한 효과로 출생아수가 7% 증가(Institut de la statistique du Quebec, 2015)
- 2014년 난임부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를 이용하여 연령별출산율을 추정
한 결과 합계출산율을 0.03명 상승시키는 효과 발생

〈표 2-2〉 난임부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기여도 추정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난임부부의 출생아수	5,453	4,699	4,535	5,281	5,714	7,502	9,918	10,365	11,597
합계출산율(TFR)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난임지원효과(TFR증가분)	0.013	0.011	0.011	0.013	0.014	0.019	0.025	0.027	0.030

주: 1) 난임지원효과(TFR 증가분)은 본 연구에서 추정
 자료: 1) 난임부부의 출생아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 합계출산율(TFR): 통계청, KOSIS

(2) 출산율 단기변동 추정

□ 향후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만혼화 대책과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향후 5년 동안 가임기 여성(15~49세)의 연령별 결혼률과 유배우여성의 연령별출산율이 2015~2020년 기간 동안 각각 약 10%씩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합계출산율 산정한 결과 2020년 1.5명으로 추정

- 합계출산율 상승효과는 2014년 1.21명을 기준으로 유배우율 0.14, 유배우출산율 0.15로 추정

다. 출산율 중장기 변동 가정

- 저출산대책을 통한 결혼률 반등과 유배우출산율 제고를 통해 합계출산율은 2020년까지 1.5명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상으로 회복하였던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2020년 이후 장기적인 출산율 변동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율 회복을 경험한 OECD 국가들의 사례(출산율 회복속도)를 참조
 -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캐나다에서 합계출산율 1.5명 수준에서 1.7명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평균 10년 소요
 -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 1.7 수준이 1.9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평균 약 8년 정도 소요
 - 프랑스의 경우 합계출산율 1.71명에서 2.02명으로 증가하는데 15년 소요

〈표 2-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회복 경로

구분	OECD 국가 사례
1.5→1.7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덴마크 1987년 1.50 → 1992년 1.76 (5년) •룩셈부르크 1988년 1.51 → 1999년 1.71 (11년) •네덜란드 1985년 1.51 → 2000년 1.72 (15년) •캐나다 2001년 1.51 → 2009년 1.66 (8년)
1.7→1.9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2001년 1.73 → 2009년 1.90 (8년) •프랑스 1995년 1.71 → 2004년 1.90 (9년)
1.7→2.1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1995년 1.71 → 2010년 2.02 (15년) •스웨덴 2003년 1.72 → 2010년 1.98 (7년)

자료 : OECD(2015c),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를 참고하여 작성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회복 시나리오는 2014년 1.21에서 2045년 2.1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
 - 2014년 1.21 → 2020년 1.5 → 2030년 1.7 → 2045년 2.1(이후 유지)

라. 인구추계 가정

- 기본적으로 인구추계는 통계청(2011)에서 실시한 2010년도 기준 인구추계 시 적용한 중위가정(출산력, 사망력, 국제인구이동)을 그대로 적용
- 다만, 출산율 가정의 경우 앞서 설정한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를 추가
- 인구추계 기간은 2010~2100년이며, 이를 위하여 통계청 중위가정에서 설정한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은 2060년 수준이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사망력의 경우 평균수명이 20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 남성의 경우 89.27세, 여성의 경우 93.19세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

〈표 2-4〉 인구추계 시나리오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방법
합계 출산율 (명)	중위가정 (S1)	1.23	1.28	1.35	1.41	1.42 (2045)	1.42	1.42	로그감마모형, 시계열모형
	회복가정 (S2)	1.23	1.23	1.50	1.70	2.10 (2045)	2.10	2.10	앞의 내용 참조
기대 수명 (세)	남자	77.20	78.22	79.31	81.44	83.42	85.09	86.59	Li-Lee 모형
	여자	84.07	84.96	85.67	86.98	88.21	89.28	90.30	
국제순이동률 (인구천명당)		1.67	0.73	0.71	0.57	0.63	0.64	0.53	이동스케줄모형

주: 1) 출산율 회복 가정은 2014년까지 실측치를 적용하고 이후 연도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정

2) 출산율 회복 시 가정 이외 모든 가정은 통계청의 중위가정 적용

3) 2060년 이후에는 2060년 가정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단, 기대수명은 본 연구에서 Lee-Carter 방법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 후 적용)

자료: 통계청(2011a),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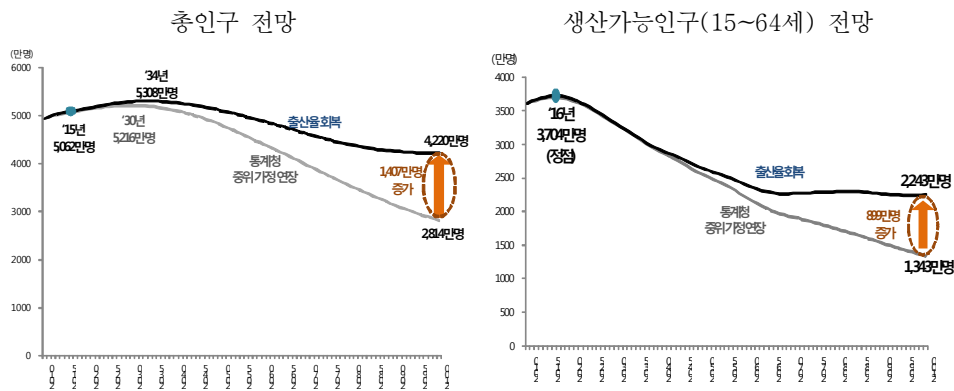
2. 인구학적 편익 분석

□ 인구규모 측면에서의 편익

- 출산율 회복 시 총인구 측면에서의 편익은 인구감소 시기가 2031년에서 2034년으로 3년 지연되며, 인구규모는 2050년 301만명, 2100년에는 1,407만명이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 규모는 2100년까지 4,200만명 수준에서 유지
 - 출산율 회복 시, 총인구는 2015년 5,062만명에서 2034년 5,30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5,113만명, 2100년 4,220만명으로 감소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50년 4,812만명, 2100년 2,814만명으로 감소 전망

[그림 2-3]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측면에서의 편익



자료: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중 2010~206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계한 결과임.

- 출산율 회복 시 유소년인구(0~14세) 측면에서의 편익으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부터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700만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출산율 회복 시, 유소년인구는 2050년 약 180만명, 2100년 약 416만명 덜 감소
 - 출산율 회복 시, 유소년인구는 2015년 698만명, 2050년 658만명, 2100년 699만명으로 큰 증감 없이 약 700만명 수준에서 유지 전망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유소년인구는 2050년 478만명, 2100년 283만명으로 감소 전망
- 출산율 회복 시 생산가능인구(15~64세) 측면에서의 편익으로 감소시기를 늦추지는 못하나 감소폭은 2050년 95만명, 2100년 899만명 덜 감소

- 출산율 회복 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50년 2,629만명, 2100년 2,243만명으로 감소 전망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535만명, 2100년 1,343만명으로 전망

〈표 2-5〉 출산율 회복 시 인구규모 전망

(단위 : 만명)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유소년인구 (0~14세)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2015	5,062	5,075	3,695	3,714	705	698
2020	5,144	5,158	3,656	3,675	680	672
2025	5,197	5,239	3,490	3,508	674	692
2030	5,216	5,295	3,289	3,301	658	715
2035	5,189	5,306	3,089	3,096	625	722
2040	5,109	5,272	2,887	2,916	572	689
2045	4,981	5,207	2,717	2,780	517	660
2050	4,812	5,113	2,535	2,629	478	658
2055	4,612	5,002	2,382	2,518	459	681
2060	4,396	4,883	2,187	2,380	447	706
2065	4,186	4,753	2,016	2,281	431	714
2070	3,963	4,617	1,915	2,267	407	697
2075	3,739	4,493	1,834	2,283	374	673
2080	3,523	4,391	1,743	2,292	344	664
2085	3,319	4,315	1,644	2,291	322	676
2090	3,131	4,263	1,537	2,264	308	694
2095	2,963	4,233	1,432	2,239	297	706
2100	2,814	4,220	1,343	2,243	283	699

자료: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중 2015~206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계한 결과임.

□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편익

- 출산율 회복 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고령화 수준)은 2050년 1.7%p, 2075년 6.7%p, 2100년 11.9%p를 낮추는 효과 발생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지속되어 유럽 국가(프랑스 등)의 장기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 유지 전망(프랑스의 경우 2100년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30.4%로 전망, UN, 2015)

- 출산율 회복 시, 노인인구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9%, 2050년 36.1%, 2064년 37.7%(정점)로 증가 후 2100년 30.3%로 감소 전망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7.4%, 2100년 42.2%로 전망

〈표 2-6〉 출산율 회복 시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비 전망

(단위 : %,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고령화 수준)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2015	13.1	13.1	19.0	18.8	17.9	17.9	37.0	36.7
2020	15.7	15.7	18.6	18.3	22.1	22.1	40.7	40.3
2025	19.9	19.8	19.3	19.7	29.6	29.6	48.9	49.3
2030	24.3	24.1	20.0	21.7	38.6	38.7	58.6	60.4
2035	28.4	28.1	20.2	23.3	47.8	48.1	68.0	71.4
2040	32.3	31.6	19.8	23.6	57.2	57.2	77.0	80.8
2045	35.1	33.9	19.0	23.8	64.3	63.6	83.3	87.3
2050	37.4	35.7	18.9	25.0	71.0	69.4	89.8	94.5
2055	38.4	36.0	19.3	27.1	74.4	71.6	93.7	98.7
2060	40.1	36.8	20.5	29.7	80.6	75.5	101.0	105.1
2065	41.5	37.0	21.4	31.3	86.3	77.1	107.7	108.3
2070	41.4	35.8	21.2	30.8	85.7	72.9	106.9	103.7
2075	40.9	34.2	20.4	29.5	83.5	67.3	103.9	96.8
2080	40.8	32.7	19.8	28.9	82.4	62.6	102.2	91.6
2085	40.8	31.3	19.6	29.5	82.3	58.9	101.9	88.3
2090	41.1	30.6	20.1	30.7	83.7	57.6	103.8	88.3
2095	41.6	30.4	20.7	31.5	86.2	57.5	106.9	89.0
2100	42.2	30.3	21.1	31.2	88.4	57.0	109.5	88.2

주: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임.

자료: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중 2015~206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계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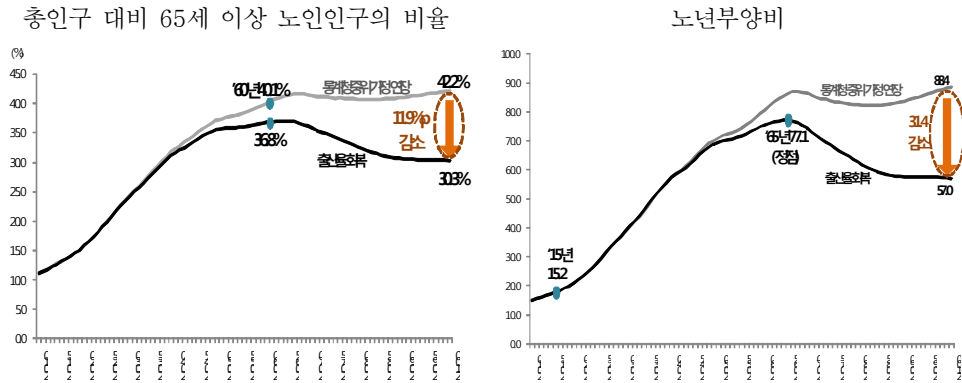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 시 노년부양비는 2050년 0.6, 2075년 13.8, 2100년 31.1가 감소하는 편익 발생(노동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하여야 할 노인인구 규모가 2100년 기준 31명이 감소함을 의미)

– 노동가능인구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출산율 회복 시 2015년 15.2에서 2050년 64.4, 2065년 78.9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100년 57.0으로 전망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노년부양비는 2050년 71.0, 2100년 88.4로 증가 전망

[그림 2-4] 출산율 회복 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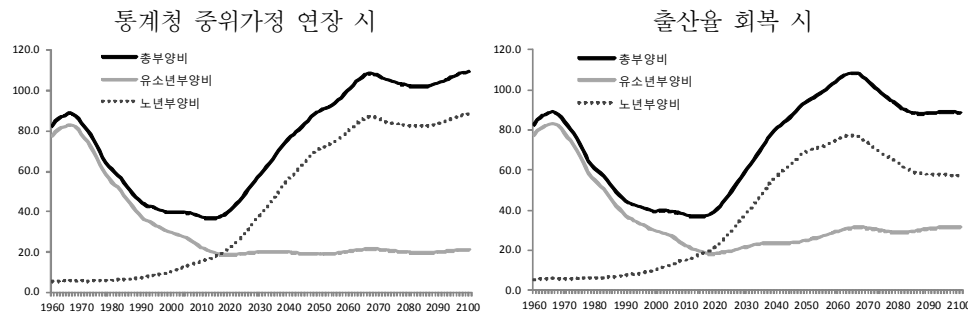


주: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자료: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중 2015~206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계한 결과임.

- 출산율 회복 시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2065년 108.3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70년 3.2, 2100년 21.3 감소하는 편익 발생(노동가능인구 100명당 부양부담 인구규모가 2100년 20명 이상이 줄어듦을 의미)
- 노동가능인구의 피부양인구(유소년인구+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출산율 회복 시 2015년 36.7에서 2050년 94.5, 2065년 108.3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100년 88.2로 전망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총부양비는 출산율 회복 시 2050년 89.8, 2075년 103.9, 2100년 109.5 등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

[그림 2-5] 출산율 회복 시 노동가능인구의 부양부담 측면에서의 편익



주: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임.
 자료: 통계청 중위연장 시나리오 중 2015~206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2060)의 결과이며, 나머지는 본 연구에서 별도 추계한 결과임.

3.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가. 노동력 수급에의 편익

□ 추정 모형

- 인력수급 전망은 미국 노동통계청(BLS)의 저량접근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신규 인력 부문의 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유량(flow)개념의 신규수요와 신규공급을 도출하여 양자 간의 차이를 통해 도출
- 위 모형에 출산율 회복 시와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추계 결과로서 인구 적용

□ 편익 추정

- 출산율 회복 시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에 비해 노동력 공급부족 폭이 완화되거나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11~2030년 간 노동력 순공급(공급-수요)이 13천명 증가하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31~2040년 간 노동력 순공급이 1천명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160천명)을 다소 완화시키는(159천명)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41~2050년 간에는 노동력 순공급이 186천명 증가하여 이 기간 동안 노동력 부족을 다소 완화시키는(428천명에서 242천명 부족으로 완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51~2060년 간에 노동력 공급부족(317천명 공급부족)을 노동력 공급초과(350천명 공급초과)로 전환하는 편익 발생
- 이와 같이 출산율 회복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편익이 초기에는 아주 미세하다가 점차 시간 경과에 따라 커지는 이유로는 인구학적 속성에 기인
- 출산율이 회복하는 경우에도 초기에는 회복 수준이 낮아 출산율 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출생아수가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적어도 20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그림 2-6] 출산율 회복 시 노동력 수급에의 편익



자료: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임.

나. 경제성장예의 편익

□ 추정 모형

- 출산율 회복 시 경제성장예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수요·총공급, 노동수급, 재정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작용하는 거시경제계량 모형 구축
 - － 모형 내 개별 방정식은 종속변수에 대해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갖는 핵심적인 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추정
- 위 모형에 출산율 회복 시와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추계 결과로서 인구 적용

□ 편익 추정

- 잠재성장률은 인구뿐만 아니라 많은 거시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로 출산율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대체적으로 작은 편이며, 특히 중단기적으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출산율 회복 시 2031~2040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은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나 최근 수준 유지 시에 비해 0.01%p, 0.03%p가 각각 높아지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41~2050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은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나 최근 수준 유지 시에 비해 0.02%p, 0.05%p가 각각 높아지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 시 2051~2060년 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은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나 최근 수준 유지 시에 비해 0.05%p, 0.09%p가 각각 높아지는 편익 발생
 - － 출산율 회복 시 편익(출산율 가정 간 잠재성장률 차이)은 통계청 중위가정 시 잠재성장률의 4.9%, 최근 출산율 수준 유지 시 잠재성장률의 9.1%를 차지
- 노동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회복이 경제성장예 미치는 편익이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적으로 커진 이유는 초기에 회복 수준이 낮아다가 출산율 회복으로 증가하는 출생아의 성장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노동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임

〈표 2-7〉 출산율 회복 시 잠재성장률에의 편익

(단위: %)

	2001-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출산율 회복 시 (S2)	4.42	3.60	2.87	2.07	1.47	1.08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S1)	4.42	3.60	2.87	2.06	1.45	1.03
출산율 최근수준 유지 (TFR=1.20)	4.42	3.59	2.86	2.04	1.42	0.99

주: S1은 출산율 회복 시, S2는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을 가정하여 추계한 인구 결과를 각각 적용
 자료: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임.

다. 국민연금 재정에의 편익

□ 추정 모형

-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의 결과를 이용하여 편익 분석
- 동 연구에서 인구는 통계청(2011)의 2011년 인구추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되, 추계 결과가 2060년까지만 제시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2100년까지 연장하여 추계
 - 출산력 가정의 경우 통계청 중위가정으로서 2045년 합계출산율 1.42명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율 회복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2020년 1.7명, 2035년 2.1명에 도달한 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사망력 가정의 경우 평균수명이 2083년에 남성 88.1세, 여성 92.0세에 각각 도달할 것으로 가정
 - 국제이동력 가정은 통계청 중위가정의 2060년 수준(순이동률 0.53)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앞의 내용 참조)
- 경제변수 가정은 장기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
 - 인구가정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가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금리를 전망한 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과 결합하여 명목임금상승률과 명목금리를 도출하여 적용

□ 편익 추정

○ 통계청 중위가정 연장 시 국민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31년부터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기 시작하고,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을 상회하여 당년도 수직적자가 발생(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 적립기금은 당년도 수직적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2043년에 최고 2,561조원(1,084조원, 2010년 불변가)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고갈 예정(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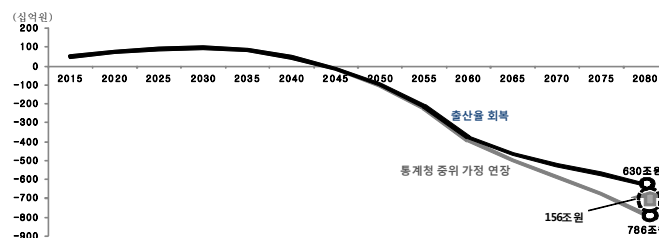
○ 출산율 회복 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출산율 회복 시(합계출산율 2020년 1.7명, 2035년 2.1명 도달 후 유지)에 따르면, 2045년에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2061년에 적립기금 소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 결과적으로 출산율 회복 시 국민연금 재정은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 시기와 적립기금 소진 시기가 각각 1년씩 늦추어지는 편익 발생

- 출산율 회복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편익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출생아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난 세대들이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임
- 한편, 2060년대 초 적립기금 소진 후 적자폭은 출산율 수준에 따라 점차 차이가 커짐(편익)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보완 후 국민연금을 지속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임

[그림 2-7] 출산율 회복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에의 편익(재정수지차)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향 보고서 내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

제3절 저출산대책 투자에 대한 합의

- 향후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이 회복되는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사회발전 지속과 개인의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연간 일정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출산율이 회복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고 연금 등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등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비용 이상으로 편익이 발생할 것임
 - 게다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일가정양립 제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과 노동생산성 유지에 기여하므로 계량화된 수치 이상으로 편익이 발생할 것임
- 한편, 출산율 회복이 노동력 수급, 경제성장, 사회보장 재정 안정화 등에 미치는 편익이 공통적으로 초기에 아주 미세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결과는 초기에 출산율 회복 수준이 낮아데다가 출산율 회복으로 증가하는 출생아가 노동력 투입 등의 시기까지 성장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출산율 회복의 경제 및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초기에 출산율을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

제 3 장

1·2차 기본계획 평가와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제1절 1·2차 기본계획 평가

제2절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3

1·2차 기본계획 평가와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

제1절 1·2차 기본계획 평가

1. 성과

-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현상이나 개인·가족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사회의 위기로 인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계기 마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 1·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투입한 예산은 80.2조원

<표 3-1> 저출산대책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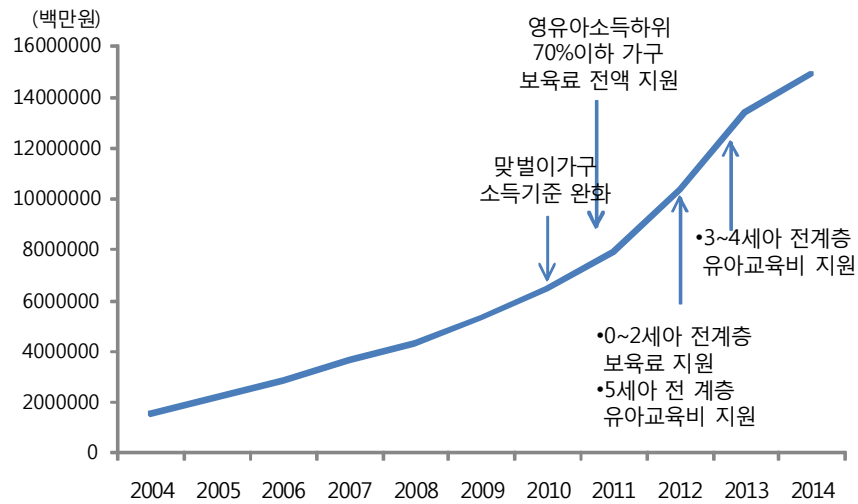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저출산대책 예산	2.1	3.1	3.8	4.8	5.9	7.4	11.0	13.5	13.9	14.7

자료: 1) 2006~2010년 저출산대책 예산자료(집행액)는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2011년 저출산대책 예산자료(집행액)는 대한민국정부(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3) 2012년 저출산대책 예산자료(집행액)는 대한민국정부(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4) 2013년 저출산대책 예산자료(집행액)는 대한민국정부(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5) 2014~2015년 저출산대책 예산자료(예산액)으로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과거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양육부담을 국가·사회와 분담하는 체제로의 전환
-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맞벌이가구 등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 2012년 만0~2세아 전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만 5세아 전계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13.3월부터 만0~5세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그림 3-1] 보육교육비 예산액 추이



자료 : 보육료예산은 서문화·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p.92

□ 건강한 임신·출산(분만) 보장 강화

- 임신-분만-산후조리 등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희망하는 임신 및 건강한 출산 이행에 기여
 - 난임부부 지원건수는 2006년 19,137건에서 2014년 40,515건으로 증가
 -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201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순수하게 0.03명 증가한 효과가 나타남

<표 3-2> 난임지원건수 및 성공한 출산이 전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단위: 건,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난임지원건수(A)	19,137	14,697	13,262	17,691	24,961	30,356	31,992	34,264	40,515
TFR(B)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난임지원효과 (TFR증가분)(C)	0.013	0.011	0.011	0.013	0.014	0.019	0.025	0.027	0.030
기여율(%) (D=C/B×100)	1.2	0.9	0.9	1.2	1.2	1.5	1.9	2.2	2.5

자료 : 난임지원건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5)

□ ‘일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중시’로 사회시스템 및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 마련

○ 일-가정양립제도 도입·개선을 통해 과거에 비해 휴가·휴직 이용 점진적 증가 및 이용 후 고용안정성 증가

– 출산전후휴가 이용자수는 2005년 41,014명에서 2014년 88,756명으로 증가

–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직전인 2005년 10,700명에서 2014년에는 76,833명으로 증가

<표 3-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수 추이

(단위: 명)

		2002	2005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산전후휴가자		22,711	41,104	48,972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육아휴직자 수	계	3,763	10,700	13,670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여성	3,685	10,492	13,44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남성	78	208	230	502	819	1,402	1,790	2,293	3,42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http://www.index.go.kr>.

○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인증 기업 증가 등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증가로 점차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로 변화

– 201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52.8%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15b).

–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9개소에서 2014년 444개소(대기업 77개, 중소기업 개소, 공공기관 305개소)로 나타남.²⁾

2. 한계

□ 만혼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 저출산현상의 상당 부분을 유발하는 만혼화는 길어진 교육기간(취업준비기간 포함), 고용불안정(비정규직, 실업), 높은 주거비용 등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

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하나 그간의 정책은 만혼·비혼에 대해 가족가치관 약화로만 간주하여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한 가치관 변화 유인 등 소극적 접근에 한정

〈표 3-4〉 35세 이상 미혼남녀(35세 이상)의 비혼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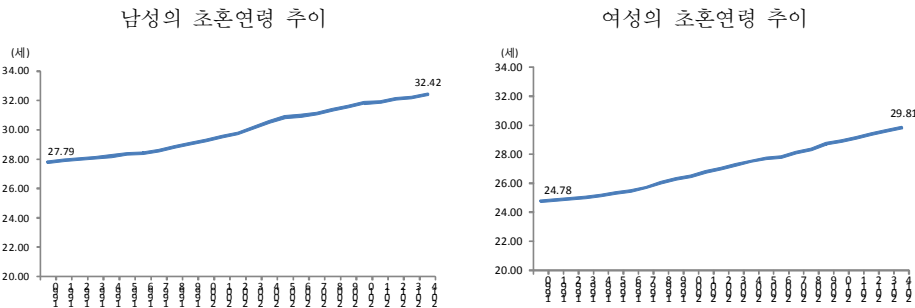
영역	원인	35세 이상 비혼 이유	
		남성	여성
주거	주택 및 결혼비용 마련 곤란	12.6	1.9
고용 및 소득	고용불안정(실업) 소득불안정	24.3	5.7
가치관	가치관 관련	41.6	48.1
기타	기타	21.5	44.3
	소계	100.0(375)	100.0(158)

자료 : 김승권 외(2012b).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에 따라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7.79세에서 2014년 32.42세로 15년간 4.63세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동 기간 24.78세에서 29.81세로 5.03세가 증가

[그림 3-2] 초혼연령(평균)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혼인통계, 2015.08.13.일자 반출

○ 법률혼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생리적 이유(가임력 저하, 후천성불임 증가 등) 및 사회경제적 이유(노후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늦어진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증가 등)로 희망하는 자녀수를 출산하기 곤란

〈표 3-5〉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자녀수

구 분	25세 미만 결혼시	25~29세 결혼시	30~34세 결혼시	35~39세 결혼시
평균 자녀수	2.03명	1.88명	1.46명	0.84명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실제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원인에 대해 인구학적으로 분해(demographic decomposition)할 경우,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만혼화에 따른 유배우율 하락이 더 큰 영향을 미침

- 2005~2013년간 유배우출산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TFR 변화의 +36% 기여) 만혼화에 따른 유배우율 감소(TFR 변화의 -64%로 기여)로 초저출산 현상 지속(이삼식·이지혜, 2014)

〈표 3-6〉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절대적(합계출산율)				절대적 영향력(%)		
	TFR 변화량	유배우율에 의한 변화량	유배우출산율 에 의한 변화량	상호작용 효과	계	유배우율 기여	유배우출산율 기여
1992~1997	-0.24	-0.20	-0.07	0.03	100.0	75.3	24.7
1997~2005	-0.44	-0.52	0.03	0.05	100.0	94.9	5.1
2005~2013	0.11	-0.31	0.54	-0.13	100.0	36.0	64.0
1992~2013	-0.57	-1.10	0.73	-0.20	100.0	60.2	39.8

주: 상대적기여도는 상호작용효과 제외 후, 각 요인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량의 절대값의 비율.

자료: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 지속의 원인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참여 평가 결과, 정책의 결과로 결혼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는 12.7%에 불과(신혼부부 주택 마련 쉬워짐은 9.1%)(이삼식 외, 2014)

- 전문가 평가 결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4.3%에 불과

□ 기혼부부 대상 정책들 역시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부담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미시적인 접근에 한정

○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학벌주의 만연으로 교육단계에서 과다 경쟁하여 ‘자녀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녀양육 비용, 서비스 이용 보조금 지원 등에 한정

- 1자녀를 둔 유배우여성(15~44세)이 추가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가 48.0%, 사회적 이유가 7.1%로 사회구조적 원인이 절반 이상(55.1%)을 차지하며, 가치관 이유는 17.6%(김승권 외,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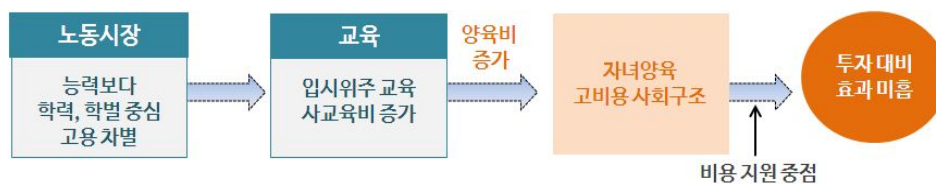
〈표 3-7〉 1자녀 출산 유배우여성(15~44세)의 추가 출산 중단 이유

(단위: 명, %)

영역	원인	1자녀 출산 후 단산 이유
교육	양육비·교육비 부담	41.3
주거	주택마련 곤란	1.8
고용 및 소득	고용불안정(실업), 소득불안정	4.9
가치관	가치관 관련	17.6
기타	고연령 등	38.0
	소계	100.0(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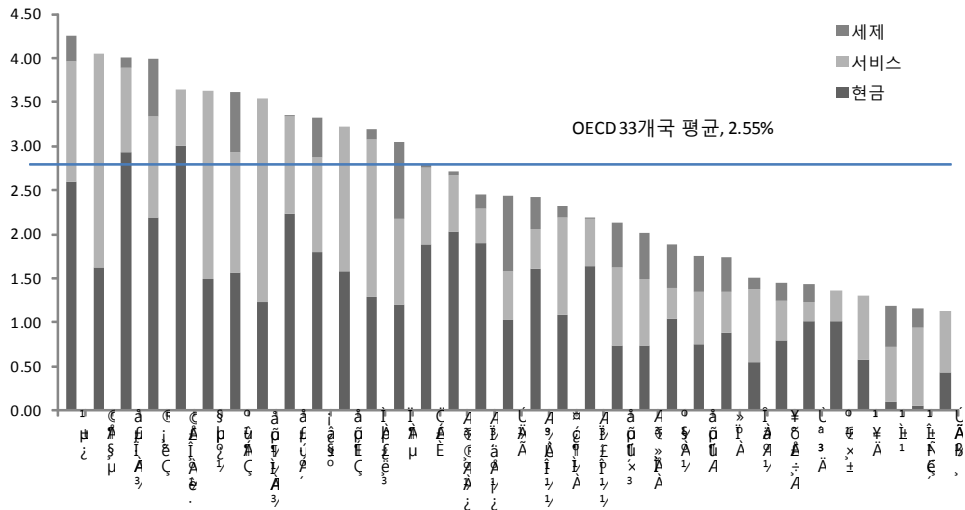
자료 : 김승권 외(2012a).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결국 예산 투입은 증가하였으나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여 개인·가족·기업의 부담이 지속되어 정책체감도가 낮은 실정



- 국민참여 평가 결과, 그간의 정책으로 자녀양육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10.1%에 불과(이삼식 외, 2014)
- 임신, 출산(분만) 비용 부담 줄어 들었다는 평가는 9.9%,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 줄었다는 평가는 27.4%에 불과(이삼식 외, 2014)
- OECD 국가 중 가족지출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OECD, 2014)

[그림 3-3] GDP대비 가족지출 비율, 2011



자료: OECD(201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data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eptember 2014

□ 그간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도 상 한계와 사회·문화와의 괴리로 인하여 보편적 일-가정양립 구현 곤란

○ 정책 대상 배제(사각지대),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력 대체 곤란 등 제도상 한 계로 여전히 상당수(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가 이용 곤란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탄력적 적용 등 일가정양립 프로그램의 실천이 어려운 실정

- 2012년 기준 가족친화지수는 1~99인 사업장 39.1, 100~299인 사업장 45.7, 300~999인 사업장 53.6, 1,000인 이상 사업장 72.2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족친화지수가 ‘미흡’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 증가 (여성가족부, 2012)

○ 출산·육아 여성 차별, 장시간 근로관행 지속, 남성 이용에 대한 거부감 등 가족 및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미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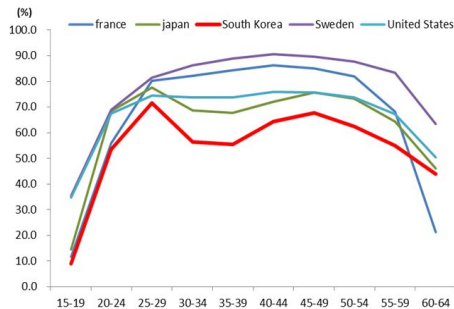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OECD Stat.)

- 직장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수월해졌다는 국민의 비율은 12.0%에 불과(이삼식 외, 2014)
- 국민참여 평가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스럽게 이용 가능 28.8%,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26.2%에 불과(이삼식 외, 2014)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4%로 나타남(이삼식 외, 2014).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2014년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4.5%에 불과(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스웨덴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중 44%는 남성으로 나타남(Mos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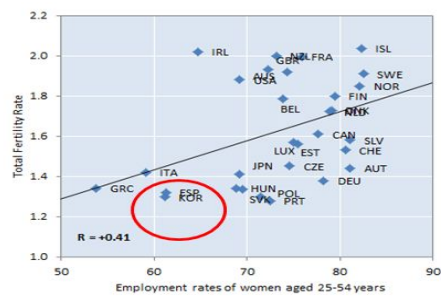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은 후진국형인 ‘M-curve’ 지속 및 낮은 고용률 유지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모두 낮은 수준에서 유지

[그림 3-4]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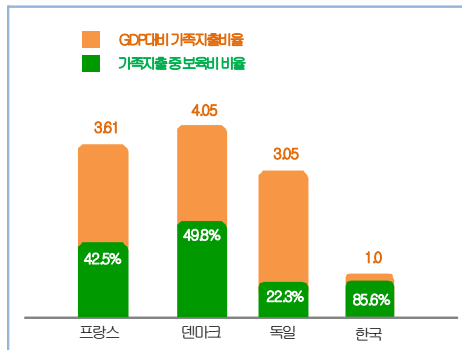


자료 : OECD(2013b).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맞벌이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가 일인생계부양모형에서 이인생계부양모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가 미흡하여 여성의 양육과 일의 이중적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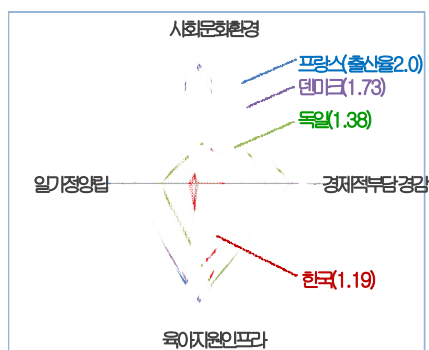
-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6.4%, 여성 16.0%에 불과
- 위의 한계점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그간의 정책투입이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 미흡한데 기인
- 결과적으로 대부분 세부정책들의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정책 간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너지효과’ 기대 곤란
 - －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정책 지출 중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5.6%(2014년 기준)³⁾로 보육정책에 집중
-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영역 간 균형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그림 3-6] GDP대비 가족지출



주: 한국은 GDP대비 저출산대책 비율과 저출산대책 중 보육비 비율을 의미

[그림 3-7] 저출산대책 영역별 투자



3) 저출산대책예산은 대한민국정부(20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육예산은 통계청 e-나라지표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누리과정예산편성현황 자료(정부사업)’ 집계 결과 자료를 활용함.

3. 종합

-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시스템 구축 등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은 갖추었으나 ‘충분조건’을 갖추는 데에는 미흡
 - 제도 도입 및 개선,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상보육 실현, 출산·양육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제도 개선,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여 필요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
 - 정책의 사각지대,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정책과 문화 간의 괴리 등으로 충분조건 미흡
 - 결과적으로 국민 체감도 및 신뢰도가 낮아 직접적인 실천(출산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1.2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초저출산현상 지속
-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산율을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의 전환 모색 필요
 - 저출산 대응으로서 출산장려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만혼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접근 강화 필요
 - 한국사회의 자녀 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를 타파하여 저출산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고용 등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적 접근 병행 필요
 - 일-가정 양립 제도의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접근 강화 필요
 - 양성평등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러한 가치가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접근 강화 필요
 - 그간 미흡하였던 정책들에 대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 간 균형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노력 필요

제2절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1. 문제인식

- 저출산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초저출산현상(1.3 미만)이 고착화 될 가능성 증가
 - 취업 곤란, 고용 불안정, 주택 마련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만혼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우려
 - 보육료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가정에서는 여전히 자녀양육 비용 부담 체감
 -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경력단절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포기(축소)하거나 늦추는 경향 지속
 - 여성의 고학력화 및 사회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이 체감하는 출산·양육 부담 지속
 - 사회경제 현상 변화의 영향으로 결혼출산을 비용(희생)으로만 간주하는 경향 증가

2. 기본 전략

- (시간적 관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
 - 저출산은 초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인구현상으로 한 차례의 기본계획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개선 혹은 발전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 강화 필요
 - 1·2차 기본계획 중 계승발전시킬 과제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장기적 정책시야를 바탕으로 중단기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

□ (과정적 관점) 그간 도입한 제도들을 성숙시키는 단계로 진화

- 대부분 국가에서 제도는 도입(형성), 시도(낮은 단계 실천), 성숙(높은 단계 실천), 정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 1·2차 기본계획이 도입-시도의 과정이라면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가 실천되고 문화가 바뀌는 성숙기로 이행 촉진

□ (구조적 관점) 비용 지원 등 단기처방의 미시적 접근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구조 개혁·문화 변화 등 거시적인 접근 모색

- 출산율의 본격적인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불가능하므로 미시적인 접근과 더불어 거시적인 접근(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함
 - 문제에 대해 지원 중심의 현상적 대처(사후적·소극적 접근)보다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 개혁(사전예방적·적극적)에 중점
 - 예로 학벌중심 고용시장 →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교육 → 자녀 양육의 고비용 구조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경주 필요
 - 단, 거시적인 접근은 장시간 소요의 특성을 가지므로 미시적인 접근도 병행하여 추진
- 전통적 문화(가치)와 현대 사회 변화 간의 상충문제를 조율하는 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성별 역할, 전통적 가족관, 보수적·가부장적인 직장 문화 등 문화·가치관 개선 추진

□ (내용적 관점) 공급자적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및 균형적 접근 모색

- 저출산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므로 공급자적인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접근
-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사회 여러 영역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종합적·균형적 접근 모색

□ (대상적 관점) 세대통합 관점

-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파급효과 모두 모든 세대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세대 분리적인 접근보다 청년세대-노년세대, 현세대-미래세대가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 경주
 - 청년-노년, 현세대-미래세대 모두를 고려한 세대통합적 접근을 강화하되, 기존에 강조되지 못했던 청년·아동 대상 정책을 강화

□ (추진주체 관점) 지금까지 중앙정부만의 노력에서 시민사회·민간단체 및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노력

- 저출산의 원인과 파급효과는 복잡다양한데다가 국민생활의 사적 영역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어 중앙정부 홀로 수행하기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 속에서 지방과 민간이 협력할 경우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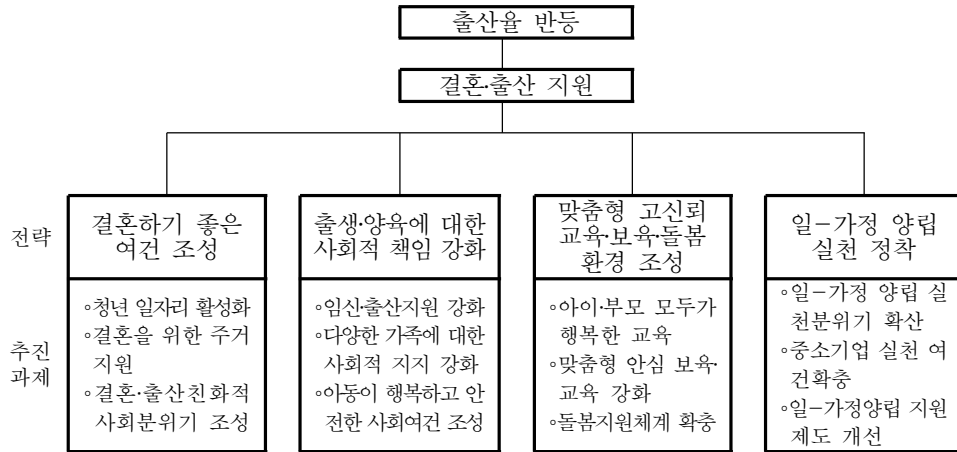
3. 발전 전략

가. 기본틀

- 부부의 소자녀 성향은 자발적 선택도 있지만 상당수는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결정
 - 이들 요인은 비용(양육비·교육비 등), 시간(일-가정양립 곤란), 인프라(시설, 인력, 서비스), 사회시스템(교육구조, 노동시장), 관행(전통적 가족관 등)으로 고려 가능
-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비용, 인프라, 시간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보육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용이나 시간 상 문제와 연관된 사회시스템이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 강화
 - 비용, 시간, 인프라 등과 관련해서도 충분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 제고,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수요 맞춤형 공급체계로의 전환,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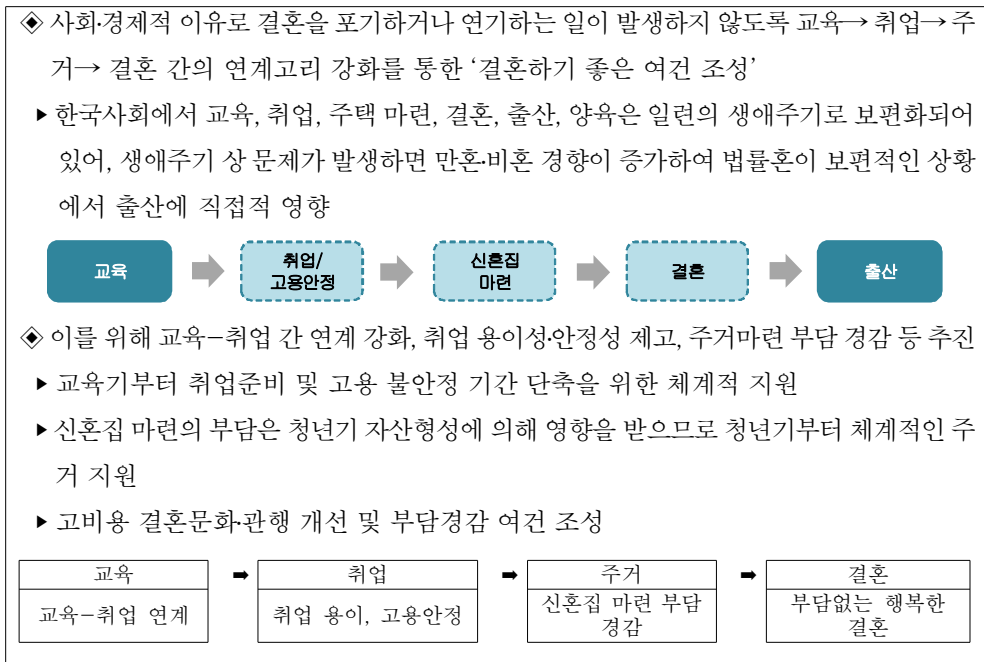
적 전달체계 구축 등 노력

[그림 3-8]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기본틀)



나. 세부 전략

(1)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 청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시행착오가 적은 유망업종 등에 있어서의 창업 지원을 강화
- 일단 취·창업을 하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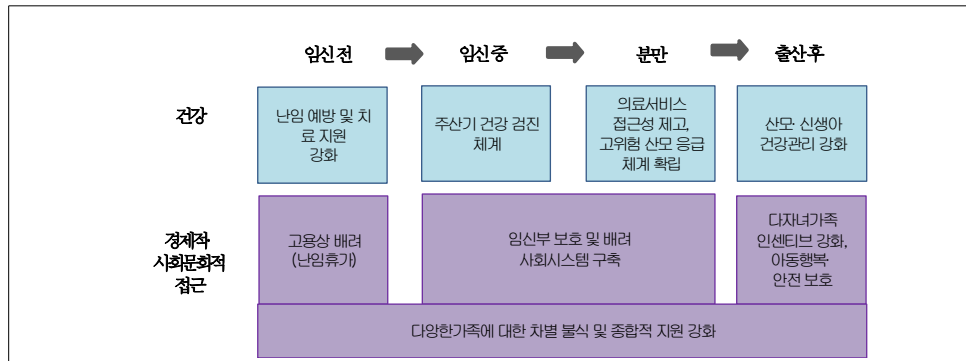
- 취업 청년층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아 주거비용 감당이 곤란하여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년기부터 체계적인 주거 지원
- 주택가격, 전·월세비용 상승으로 신혼집 마련이 곤란하여 결혼연기가 불가피하므로 신혼부부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및 대출 강화

□ 결혼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결혼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결혼 문화·관행 개선(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등)
- 결혼 부담 경감 여건 조성(결혼·출산친화적 세제개선 등)

(2)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난임, 건강·사회문화적 이유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중절, 양육에 대한 차별·장애·불안전 등을 해소하여 비자발적인 임신·출산 억제 방지
 - ▶(임신곤란기피) i) 만혼화 등으로 난임부부가 발생하고, ii) 동거부부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 자녀의 안전·행복 우려 등으로 임신 포기 경향
 - ▶(임신소모) 임신 시에도 i) 건강문제로 인한 자연유산·사산, ii) 미혼모·동거 등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냉대와 경제적 어려움, iii)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공임신중절 경향
 - ▶(양육포기) 미혼모, 동거 등이 자녀양육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 후 영아 유기, 입양 등 선택 사례
- ◆ 이를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임신과 출생을 보건의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임신·출산 지원 강화

- 만혼에 따른 만산 경향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주산기 건강검진, 영양, 예방 및 의료적 조치가 유기적 및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임신·출산건강 지원체계 확립
-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 비용, 심리적 지원(상담 등)의 삼위일체적 지원체계 확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 미혼모, 동거 등 비정형적 가족의 임신, 출산,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차별 불식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동시 추진
- 한부모가족의 양육권-학습권-노동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
- 다자녀 출산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양육의 '희생 집중-혜택 분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
 - 사회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부모에게 전가되는 비용(희생)은 증가하나 자녀들이 성장 후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되는 특성이 강하여 출산 동기 약화 초래
 - 다자녀 출산의 미래이익(benefit)의 사회적 환원 중 일부를 자녀양육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부모에게 돌려줌으로써 양육비 경감과 더불어 출산 동기 강화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 아동의 행복이 담보되도록 전 성장과정에서 장애없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우대 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적 사회(children friendly society) 조성
 - 부모의 출산 동기 증대 및 미래 인적자원의 보호 관점에서 중요

(3)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 조성

◆ 확일적인 지원 중심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돌봄 및 교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 미취학기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높은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 등으로 정규교육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어, 자녀교육비 증가, 입직연령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는 만혼화와 출산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
- ▶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07:00~19:30)에 따라 확일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맞벌이가족 등의 이용 상 불이익, 길어진 대기시간, 시설보육 의존성 증가(가정양육의 중요성 훼손), 보육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 비효율성 발생
- ▶ 취학전 자녀(0~5세아)에 편중되어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 아동안전문제 증가, 추가 출산 포기 등 발생

◆ 이를 위해 실질적 출산율 제고, 영아 성장발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경력단절 방지), 사교육비 경감 및 아동의 안전 등이 가능하도록 돌봄 대상 확대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

[돌봄 및 교육 체계 개선]

	미취학	취학
돌봄	- 확일적 지원에서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가정보육과 시설보육간 균형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돌봄대상 확대 (초등돌봄 강화)
교육	- 누리과정 확대	- 공교육 정상화

□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 ‘비용 지원 중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억제 등 사회구조적

으로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 자녀양육비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입직연령 단축을 통한 미래 노동력 부족에의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학제개편 기반 조성
 - 교육기간 조정에 따른 문제들을 최소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원수급, 학년 조정 등의 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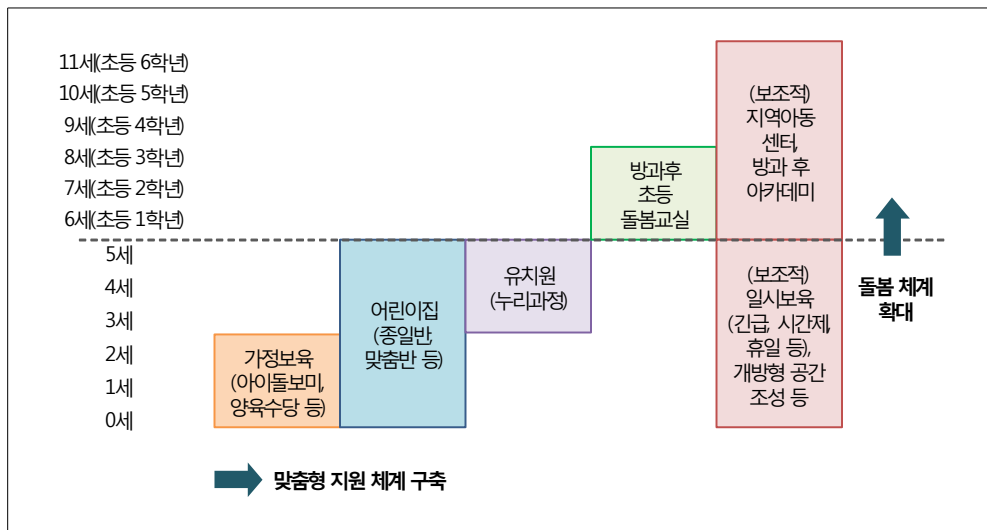
□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 획일적 12시간 보육지원에서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로 개편
- 부모의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등

□ 돌봄지원체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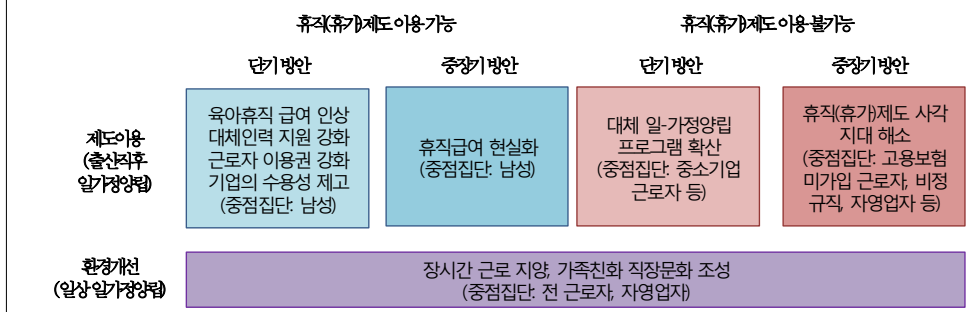
- 미취학자녀(0~5세) 중심 돌봄체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까지 돌봄체계로 확대
- 부모 수요의 형태, 시간, 장소 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그림 3-9] 돌봄지원체계 확충 모형도



(4) 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

- ◆ 초기 제도 도입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일가정양립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여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혁 추진
 - ▶ 휴가·휴직급여의 사회보험화 및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여의 비현실성, 광범위한 사각지대, 장시간 근무관행 지속 등 여건이 미흡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에 실효성 미흡
 - ▶ 그로 인하여 공공부문과 대기업 종사 여성들에게만 한정되고,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남성 등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에서 배제
- ◆ 이를 위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보급 및 중장기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
 - ▶ 제도적 발전 이외에도 환경 및 문화 개선(장시간근로 관행 타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 휴직(휴가)제도 이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실질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
- 일상적으로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

□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 현행 일가정양립제도가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중

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제공

-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 등의 한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실시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일가정양립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적극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 단기적으로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가능한 대상(특히, 남성)의 실질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
- 중장기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급여 현실화 등을 위해 제도 개편

□ 이하에서는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별로 세부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논의
- 제5장에서는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논의
- 제6장에서는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논의
- 제7장에서는 일-가정 양립 실천을 정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논의

제 4 장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제1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제2절 결혼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제3절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4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 실천과제 <

제1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1.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수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청년고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는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확대가 핵심요인
 -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악화 → 우수인재의 기피 → 혁신역량 감소 → 경쟁력 하락 → 인력난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키는 정책 강화 필요
-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가 인력난과 취업난의 핵심요인이므로 향후 정책은 보상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 필요
 -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약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집중 추진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은 사업체의 99.9%, 취업자의 87.7%를 점유할 만큼 절대

적 비중이 높지만, 제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비중은 50%미만에 불과한 실정
(중소기업중앙회, 2014)

○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는 없지만, 생산 및 출하지
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수익성, 임금수준 등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간 격
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1988년 53.8%에서 2010
년 26.8%로 감소(중소기업중앙회, 2014)
-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2년 62.2%에서 2013년 52.9%로 감소
(중소기업중앙회, 2014)

<표 4-1> 중소기업 위상지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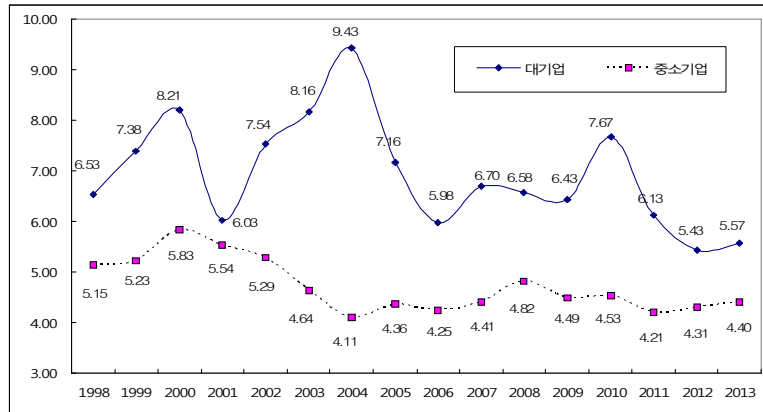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사업체	99.9	99.9	99.9	99.9	99.9	99.9
	취업자	88.4	87.7	87.7	86.8	86.9	87.7
제조업	사업체	99.5	99.5	99.5	99.5	99.4	99.4
	취업자	76.9	76.4	76.8	77.1	76.7	76.4
	생산액	48.7	46.4	47.6	47.0	46.6	45.7
	부가가치	50.6	49.2	50.5	47.4	47.3	47.7

주: 각 셀의 숫자는 각 항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4), pp. 6~11 참고하여 표로 구성(원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이 2000년대 상반기에 크게 확대되었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2~3% 격차를 유지

- 2010년 이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1~2%p 격차가 지
속되고 있어 구조화된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지 못함(국회입법조사처,
2013)

[그림 4-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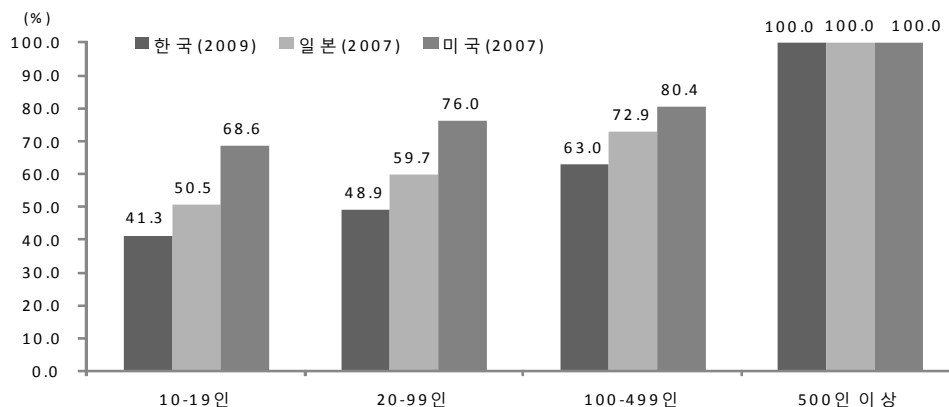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각년도). 기업경영분석결과,

○ 중소기업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0~60%에 불과

- 10~19인 사업장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미국 68.6%, 일본 50.5%, 한국 41.3% 등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임금격차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조덕희, 2012)
- 중소기업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청년들의 취업기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

[그림 4-2] 한국 미국 및 일본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제조업 부문



주: 일본의 경우에는 5-29인, 30-99인 기준임.

자료: 조덕희(2012).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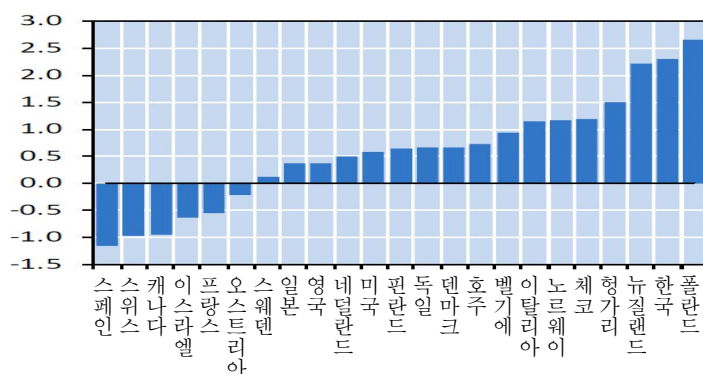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실업률 증가는 경기변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취업난이 지속됨에도 일부 업종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 발생
-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취업 대기자들은 실업을 선택하여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남(김형준, 2005)
 - 임금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상위 10%의 임금을 하위 10%로 나눈 임금불평등 배율은 4.71로 OECD(3.38)에 비해 훨씬 높으며 주요국 중 한국보다 임금 불평등정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5.22)과 이스라엘(4.91)이 유일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불평등도가 매우 빠르게 악화

<표 4-2> 주요국의 임금10분위 배율

	상위 10% 임금 / 하위 10% 임금	상위 10% 임금 / 하위 50% 임금	상위 50% 임금 / 하위 10% 임금
덴마크	2.86	1.67	1.71
핀란드	2.54	1.73	1.47
독일	3.26	1.84	1.77
프랑스	2.97	1.99	1.50
영국	3.55	1.98	1.79
미국	5.22	2.44	2.14
일본	2.99	1.85	1.61
한국	4.71	2.29	2.08
OECD평균	3.38	2.02	1.67

자료 : 노사정위원회(2014). 2014 임금보고서: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그림 4-3]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정규직 근로자의 상위 10% 임금/하위 10% 임금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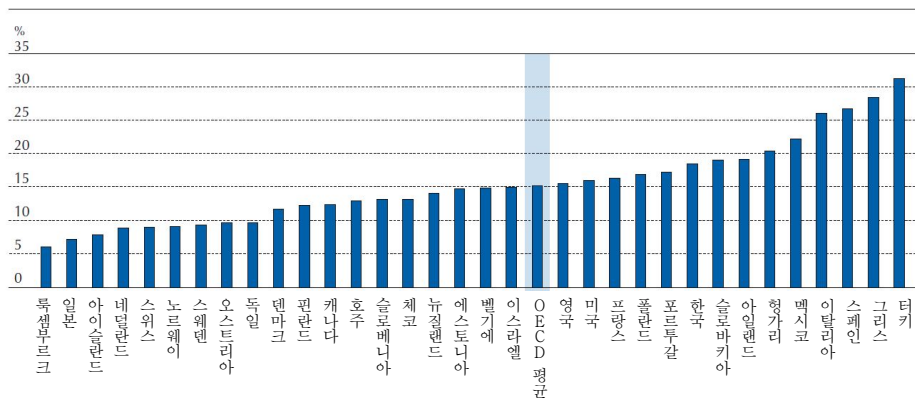
주: 정규직 기준

자료: OECD(2012). Inequality in labour income—what are its drives and how can it be reduced. p. 2에서 재인용

- 이처럼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크자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
 - NEET 비율 증가도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우리나라 청년층 NEET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구직기간 장기화는 만혼, 비혼 및 저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음

[그림 4-4] 15~29세 청년층 NEET비율(2013년 기준)

(단위: %)



주: 한국은 2012년 자료

자료: OECD(2015b), Early years inspection handbook, p.18에서 재인용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대중소기업간 격차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성이나 생산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영성과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됨을 의미
 - 대중소기업간 격차확대 원인은 유형자산 격차, 연구·개발역량 격차, 교섭력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위 목적을 달성기 위한 것임
-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내실화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소액·살포 방식으로 지원되어 재정효율성이 높지 않으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선별·집중형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특히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가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성을 저해하므로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필요
- 기업규모별 근로조건 격차는 대체로 원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하는 바 납품단가 조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추진

□ 주요 내용

-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정보 미스매치 해소차원에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 워크넷 구인정보에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등재
 - 워크넷이라는 단일 사이트를 운영하기보다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직종별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발하여 보다 충실하게 정보 제공
 - 청년들이 관심이 높은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보조금 확대
 - 청년은 취약계층이 아니므로 임금보조금 지원방식을 사업주 지원보다는 근로자 지원 방식으로 설계

- 소액의 임금보조금으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할 수 없으므로 지원금액을 상향하되, 산업 및 인력정책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지원금 차등화
 -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업종(문화컨텐츠, IT 등)과 중소기업 인력수급을 위해 업종별로 임금보조금 차등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근속장려금제도 강화

- 중소기업 인력난은 근로조건 불만족에 따른 조기 이직이 핵심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등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추진
-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지원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수준의 근속장려금 제도 설계

○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추진

-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문제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가 정책 개입이 가능한 분야에서 접근 필요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차원에서 정책개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추진

○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기존의 소액·살포식에서 선별·집중형으로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의무감 부여 필요

- 현행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약자이므로 보호 차원에서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보호정책은 신규 창업 기회를 막고 중소기업 전체의 활력을 상실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필요⁴⁾
-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군을 한층 더 두껍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 필요

4)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규모는 OECD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KDI는 정책지원이 생산성 제고에 미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기 정책금융의 틀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하였음(김정곤·박홍용 2015.9.29)

-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 필요

2.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15~29세)은 8%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2014년부터 높아지는 추세
 - 2000년 8.1%,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로 증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고용센터가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고용센터 이용에 소극적이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은 낮은 편
-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을 통해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서비스 강화 필요
 - 그간 고용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지원·운영하였으나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

나. 정책방안

- 정책목표
 - 부처·재원별로 흩어진 대학기반 청년취업 지원기능을 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
 - 기존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업 방식에 벗어나 취업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기존의 대학청년고용센터 기능을 「청년고용+센터」로 확대·재구성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기능적·물리적 연계를 강화하여 취(창)업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기능적으로 유사한 취업 지원 사업은 통합하고 동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간적 통합 유도
 - 다만, 대학마다 조직구성 및 학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2016년 「청년고용+센터」 본격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2015년 7월초)
 - 「거점 청년고용+센터」는 2016년 20개를 선정하고 2017년 이후 30개 선정
 - 개소당 10억원 지원(정부매칭 50%, 대학매칭 25%, 지자체매칭 25%)
 - 「청년고용+센터」는 2016년 80개 선정, 2017년 120개 선정, 2018년 150개 선정, 2019년 170개 선정
 - 개소당 6억원 지원(정부매칭 65%, 대학매칭 35%)
- 지원규모를 종전보다 상향하여 상담인력 증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추진
 - 단순 진로지도에 그치지 않고 일 경험 기회 확대, 학생 특성별 취업역량 강화, 청년고용정책 홍보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 관련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조기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 시 부처별로 산재한 대학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중복 기능 소관 부처와 협업 및 통폐합 관련 의견 조율 필요
 - 예산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협의 필요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통한 격차 해소

가. 배경 및 필요성

-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와 인건비절감 차원의 명목 하에 비정규직 활용 확대
 - 공공부문 역시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경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활용 증가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이 청년들의 만혼 혹은 비혼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실정
 - － 2011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약 60% 수준 (김종진, 2013)
 -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이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2년 20.5%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8.1%(332천명)로 나타남
 - － 이는 정부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한 결과로 2013~2014년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천여명(관계부처 합동, 2015. 7)
 - － 2014년 공공부문 유형별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공공기관(27.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23.4%), 교육기관(18.9%) 순

<표 4-3> 공공부문 유형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합 계	중앙행정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2006	총인원		1554(100.0)	274(100.0)	384(100.0)	368(100.0)	528(100.0)
	직접 고용	정규직	1242(79.9)	243(88.9)	312(81.2)	272(73.7)	416(78.7)
		기간제 등	247(15.9)	23(8.3)	68(17.6)	55(14.8)	102(19.3)
	간접고용 (파견·용역)		65(4.2)	7(2.7)	5(1.2)	42(11.4)	11(2.0)
2011	총인원		1691(100.0)	293(100.0)	386(100.0)	402(100.0)	610(100.0)
	직접 고용	정규직	1350(79.9)	266(91.0)	328(85.0)	293(72.8)	463(75.9)
		기간제 등	241(14.3)	19(6.3)	48(12.3)	50(12.4)	125(20.5)
	간접고용 (파견·용역)		100(5.9)	8(2.7)	10(2.7)	59(14.8)	22(3.6)
2012	총인원		1755(100.0)	290(100.0)	384(100.0)	451(100.0)	629(100.0)
	직접 고용	정규직	1394(79.4)	264(91.0)	324(84.4)	323(71.6)	484(76.9)
		기간제 등	250(14.2)	20(6.9)	49(12.8)	55(12.2)	125(19.9)
	간접고용 (파견·용역)		111(6.3)	6(2.1)	11(2.9)	73(16.2)	20(3.2)
2013	총인원		1761(100.0)	285(100.0)	377(100.0)	454(100.0)	645(100.0)
	직접 고용	정규직	1409(80.0)	259(90.9)	313(83.0)	325(71.6)	512(79.4)
		기간제 등	240(13.6)	19(6.7)	53(14.1)	57(12.6)	111(17.2)
	간접고용 (파견·용역)		112(6.4)	7(2.5)	11(2.9)	72(15.9)	22(3.4)
2014	총인원		1832(100.0)	302(100.0)	390(100.0)	469(100.0)	672(100.0)
	직접 고용	정규직	1500(81.9)	279(92.4)	332(85.1)	344(73.3)	545(81.1)
		기간제 등	218(11.9)	15(5.0)	47(12.1)	53(11.3)	103(15.3)
	간접고용 (파견·용역)		114(6.2)	8(2.6)	11(2.8)	72(15.4)	24(3.6)

주: 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포함

자료: 2006년, 2011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김종진(2013)에서 재인용); 2012년 이후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5. 7. 14).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인원으로 구분해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

○ 간접고용 근로자 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초기인

2006년 6만 5천명에서 2014년에 11만 4천명으로 8년 동안 약 75.9% 증가

-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관리 용이성 등을 이유로 외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주로 시설장비관리(25.1%), 청소(20.2%), 경비(11.8%) 등의 업무가 외주화되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청년층 비중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손정순, 2012)에 따르면 20대는 7.5%로 나타났고, 서울시 4개 자치구 실태조사(남우근, 2012)에서는 8.5%로 집계됨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

-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하였으며, 현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2013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

-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문을 발표함(국가인권위원회, 2015.4)

-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서는 전환대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된 직종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

-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과정에서 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 실제 직접 고용 전환규모 자체가 적음

- 2013년 9월 정부는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1,589명의 약 26.1%인 65,711명만을 전환대상으로 설정(임인택, 2013)

-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 16일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으로 ① 이전 2년 이상 지속되어왔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②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것을 제시한 바 있

으나, 이러한 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동절기 3개월 동안 업무가 없는 현장업무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전후 2년 이상 지속성을 요구하여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역할 필요
 -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을 유연하게 적용 필요 및 비정규직문제 핵심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합동 모니터링 반을 구성하여 각 기관별 자의적 판단과 기준 적용을 최소화
-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경직적인 인건비 및 정원관리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의 경우 외주화(간접고용)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 제시 필요
 - －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간접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 정책효과성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주요 내용

-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민간부문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
- 현재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 효과 강화
 -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시·지속 근로를 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보다 많은 비정규직들에게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

- 특히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

○ 기관별로 비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제출케 하고 추진상황 점검

-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제출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의 처우개선 없는 정규직화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정책 추진 시 예산지원 등 제반 조건 강화(김종진, 2013)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대상 기준 적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의적 판단과 기준 적용 최소화(지자체별로 비정규직 전환실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비정규직 비율 및 전환계획 이행실적을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
- 비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TO를 확대하고 교부금에 반영

○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기관의 인력현황(직접 및 간접고용 포함하여 성, 연령, 학력, 직종별 분포) 및 근로조건 공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비용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경직적인 인건비 및 정원관리제도가 비정규직 고용을 촉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유연한 적용 검토

- 외주화(간접고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연차적으로 이 비율을 낮춰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촉진

○ 공공조달 규정에 민간업체/조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토록 규정을 개선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

4. 청년층의 조기 취업 지원

4-1. 스펙중심 채용 문화 및 관행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경쟁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

○ 청년의 ‘스펙 쌓기 열풍’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반영

- 스펙은 2000년대 초반 취업과 관련된 능력이나 역량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다가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
- 대학진학 증가로 대학졸업장의 선별기능이 약화되자 대학 졸업 이외의 스펙을 쌓아 좋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스펙 경쟁으로 이어짐

□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노력과 채용기준의 모호성도 스펙 경쟁 가속화

○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학점 외에 다른 능력을 중시하는 현상 증가

- 인터넷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 일자리경쟁이 치열해지자 기업들은 손쉽게 스펙이라는 선별도로 1차 서류심사를 거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스펙 경쟁 증가

○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인력채용기준을 보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요건과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성, 성실성, 적극적 태도 등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

- 채용기준의 모호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의심, 채용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 증대

□ 청년들이 스펙쌓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펙이 취업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실정

-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취업 4종 스펙(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어학연수비)을 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554만원(등록금을 합하면 연 2,216만원) 수준으로, 스펙쌓기를 위해 휴학 및 졸업유예 또는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경향(유성운·노진호, 2015)
- 하지만 기업들은 인재 선발 시 스펙보다는 도전정신, 끈기와 성실함 같은 인성을 중시(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013.8.12)
- 따라서 스펙이 취업이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아 청년들의 ‘스펙쌓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
 - 채용정보 미스매치로 인하여 청년들은 사교육비 투자, 휴학과 졸업연기 등의 시간투자, 그리고 학창시절에만 할 수 있는 정작 중요한 지성과 인성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
-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의 개발·보급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①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핵심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 ②스펙 중심의 입사지원서 대신 직무의 역량과 경험을 기록하는 역량지원서 개발, ③영어나 상식시험 대신 인성과 직무능력, 직무지식을 평가하는 역량테스트와 역량면접과 같은 과학적 도구를 개발 중
- 개발된 평가모델은 2013년 30여개 기업에 시범보급하고 2014년에는 180여개 기업에 보급을 확대할 계획
- 현재 생산관리, 경영지원, 금융출납, 응용소프트웨어, 마케팅, 건축공학 등 6개 직군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까지 20여개 직군 평가모델 개발 예정
- 또한 구직자를 위해 스펙에 관계없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에게 멘토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제공한 후 취업으로 연계시켜 주는 ‘멘토링

스쿨'을 운영 중(청년위원회, 2014)

- 정부는 학교 취업역량 강화, 능력중심 채용·보상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대책」(2014.12.18)을 추진 중
 -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고, 직무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실시하여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추진
 - 인사 담당자의 93%가 입사지원자들의 스펙이 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스펙초월 채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청년위원회, 2014)
 -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자격 제한 폐지, 스펙 조건에 의한 서류전형을 폐지하는 등 스펙초월 채용사례 증가(김효정, 2013)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기업의 NCS활용을 지원하여 채용과 능력개발단계에서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신호기능 내실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지속적 개발·확산
 - 스펙초월 채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집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요구역량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선발과정에서 역량중심의 과학적·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청년들의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및 능력중심사회 캠페인 확산
 - 재학 중 직무능력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확산
- 능력중심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직무능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 평생경력개발경로 모형, 직무능력 자가진단 도구 등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에게 보급
- 기업 내에서 근로자 주도적인 능력개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확산
 - 2017년까지 20여개 직군 평가모델 개발 예정인데, 신규채용 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보급
 -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
 - 민간기업의 NCS를 적용한 맞춤형 훈련 및 경력개발구축을 위한 매뉴얼보급, 프로그램개발 지원, 컨설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
 - NCS 기반 직무능력 평가·채용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도입해 모범사례 발굴
 - 지난 3월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은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 체결식’을 가졌는데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
 - 공공기관에 직무분석·채용도구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채용매뉴얼 제작·보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
-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과의 연계 강화 노력의 지속적 추진
 - 직무능력중심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내용 개편을 지원
 - 자격시험 출제기준을 개편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

○ 청년의 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지원

- 청년들이 재학 중 직무관련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직장체험, 인턴 등 재학 중 직무경험 프로그램을 정비·확대
-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이 직무역량중심 채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 강화

○ 근로자 주도 능력개발지원 환경 구축

- 평생경력개발경로 모형, 직무능력 자가진단 도구 등을 개발하여 근로자 스스로가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근로자 주도적인 능력개발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내 교육훈련시스템 정비 및 지원

4-2. 양질의 고졸·전문대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조기 노동시장 진출의 중요성

-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만혼에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난, 비정규직 취업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연애, 결혼이 지연되고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음
- 대학진학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과도한 대학진학→대졸자에게 취업난 집중→취업스펙 경쟁→늦은 입직연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취업난을 완화하고 안정적 인생설계 지원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입직연령의 상승이 만혼화와 저출산 유발
 - 최초 취업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0년 23.3세, 2013년 23.5세로 증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세 고용률은 2000년 5월 52.0%에서 2015년 5월 47.5%로 10.0%p 감소(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졸 청년층에 취업난이 집중되고 인력수요와의 미스매치 심화, 소수의 선망직장을 둘러싼 취업경쟁이 격화되어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수 증가
 - 취업시험 준비인원은 2007년 682천명에서 2010년 702천명, 2014년 1,040천명으로 증가(오호영, 2014)
- 전문계고 및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이미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존재
 - 노동시장 성과측면에서 전문대졸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우수함에도 진학은 기피
 - 2014년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은 전문대 61.4%, 4년제 대학 54.8%(한국교육개발원 졸업자취업통계시스템)⁵⁾
 - 4년제 대졸자의 월평균 소득은 207.7만원, 전문대졸은 202만원(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으로 4년제의 2년간 추가 교육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소득은 큰 차이가 없음(채창균, 2014)
- 우리나라는 학교 졸업시점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학습병행 비율이 낮은 국가군에 속함(김주일 외, 2013:59-107)
 - 덴마크는 학교 졸업시점은 늦지만 일학습병행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의 청년층 고용은 대체로 양호
 - 독일과 프랑스는 OECD 평균에 비해 학교 졸업시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독일의 경우 일학습병행 비율이 높은 반면 프랑스는 낮은 편

5) <http://swiss.kedi.re.kr/>에서 2015. 9. 21 인출.

- 독일은 듀얼시스템 등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프랑스는 청년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고용지원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며, 덴마크는 조세를 기반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결혼-출산-양육 여건을 개선
 - 고졸·전문대졸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기회 확대
- 학력과 스펙중심의 청년층 노동시장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선취업-후진학 기회 확대를 통해 진학중심의 진로행태 개선
 -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시 불필요한 취업스펙을 과감히 철폐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후진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수요 억제
 - 초중고 진로교육의 강화를 통한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수요 억제

□ 주요 내용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졸·전문대졸 적합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유도
 - 고졸 및 전문대졸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NCS에 기반한 공공부문 일자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고졸 및 전문대졸 적합 직종 식별 및 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
 - 공공부문의 고졸·전문대졸 신규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용실적을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속 반영함.

○ 민간부문의 고졸·전문대졸 채용 확대 및 근속 강화 지원

-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등 검증된 일자리 중심으로 고졸·전문대졸 채용 지속 확대

○ 고교, 전문대의 현장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역량을 제고하여 선취업을 지원하고 후학습 기회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한 일과 학업 병행 여건 마련

- 학교, 기업, 산업분야 특성에 맞는 우수 도제교육 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실습, 인턴제 등을 내실화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유도, 훈련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
- 현장실무역량 개발을 위한 NCS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이 특성화고, 전문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구축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사내대학 품질관리 등 후학습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재직자의 후진학 지원을 위한 근로자 학습휴가제 확산

○ 진학중심의 진로설계 극복을 위한 초·중고 진로교육 강화 및 자유학기제 내실화

-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역단위 기업, 공공기관 등의 학교진로교육 참여 확대
- 취업관점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대학별/학과별 졸업생 취업률, 선망직장 취업률, 평균임금 등 심층적인 진로정보체계 구축

□ 이행계획

○ 공공부문 NCS기반 직무분석 실시

- 고졸·전문대졸 적합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전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NCS기반 직무분석 실시
 - 직무분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기관의 직무분석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직무분석 결과를 매뉴얼화하여 공공부문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
- 직무분석 결과 고졸·전문대졸 적합 일자리에 대해서는 채용 시 해당 학력 우선채용원칙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공공부문 고졸·전문대졸 채용확대

- 공무원, 공공기관 고졸자 신규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 고졸·전문대졸 채용실적을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속 반영하여 채용분위기 확산
- 경영평가 반영현황 : 정부권장정책 총점 5점 중 0.5~1.3점 부여

○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뿌리산업 등의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장려금 지원(연 100만원, 최대 3년)

○ 현장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 현장실습, 인턴제, 도제교육 등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방안 마련
-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적 인정을 위한 학교-기업 공동학 위수여 방안 마련 등
- NCS기반의 교육과정 개편 지원을 위한 NCS학습모듈 개발 완료('16), NCS학습모듈 활용을 위한 교사연수 확대

○ 일-학습 병행 여건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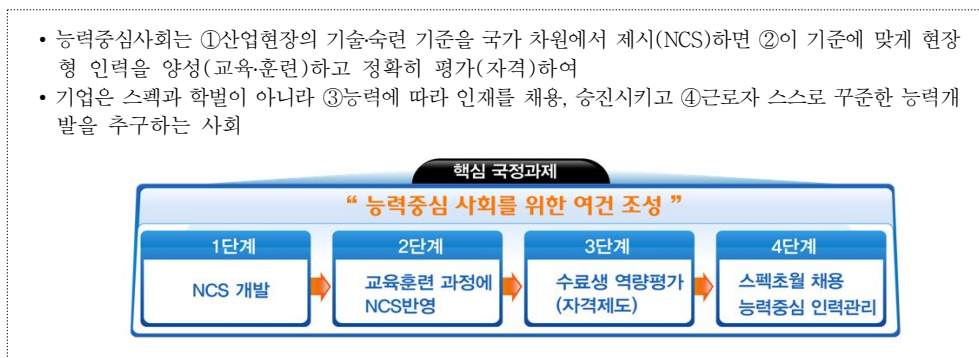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사내대학 품질관리 등 후학습 기회 확대 및 다양화
- 고졸, 전문대졸 청년층 취업자의 후진학 지원을 위한 유급학습휴가 의무화 제 도입
- 2012년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학습휴가제 도입이 공식화되었으나, 근로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 고려

4-3. NCS 기반 채용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국정과제로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하기」를 채택하면서, 세부과제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제시

[그림 4-5] 능력중심사회와 NCS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이에 따라, 2013년에 240개 신규 개발, 2014년에 288개 신규 개발 및 269개의 기 개발 NCS 보완을 통해 전 산업분야의 797개 개발을 완료
- 2015년부터는 개발완료된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자격, 일(현장)의 본격적인 개편 및 현장 활용·확산 추진 필요
 - 특히 NCS기반 채용확산 등 기업현장에서의 활용·확산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NCS 활용 지원

- (민간기업)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등(2,315개)에서 NCS를 훈련 등에 활용, 능력중심 채용모델 보급(대기업 20개, 중견·중소기업 129개) 등

- (공공기관) 공공부문 선도·모범사례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NCS 활용 지원(능력중심채용 36개소, 훈련·경력개발경로 9개소 등)
- (근로자) NCS, 학습모듈, 평생경력개발경로 등 활용 지원을 위한 NCS 종합정보망(www.ncs.go.kr) 구축

□ 그러나 현장에서는 NCS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 발생

- NCS를 교육, 훈련, 인사관리 등에 적용함에 있어 기존 교육훈련기관·기업의 운영방식 및 현장 특성과 일부 차이가 있어 어려움 호소
- 채용을 중심으로 NCS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사담당자, 구직자의 NCS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우려 발생
 - － 기업·공공기관 인사담당자
 - 훈련과정 편성시 현실적으로 NCS 반영비율 70% 등을 맞추기 곤란
 -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무중심 채용제도인 NCS 채용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채용 후 재교육 수반
 -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등 기존 채용제도와 배치 우려
 - － 취업준비생
 - NCS 채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제2의 스펙으로 간주 경향
 - 현재 대학 4학년 또는 취업준비생들은 제도의 급변으로 혼란 발생
 - NCS 채용은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결국 신규직원보다 경력직을 우대하는 것으로 우려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NCS 기반 채용 확산을 통하여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향후 채용 뿐 아니라 직무배치,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NCS가 활용됨으로써 직무노동시장 구축 가속화
- 구직자들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서의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구인-구직의 효율적 매칭이 되도록 유도

○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에서의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도입 촉진

-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도입으로 실제직무와 교육과정의 괴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에서의 재교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개인의 직무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의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능력중심채용 모델 선도

- NCS에 대한 이해가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전 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무리
 -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인사관리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NCS 기반 채용문화 확산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NCS의 스펙화 방지를 위한 「사교육 방지 대책」 등 수립·추진

○ 민간기업 NCS 활용·확산 인프라 구축

- (중견·중소기업) 의지는 있으나, 시간·전문가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 NCS 활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기업) SK, 롯데그룹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능력중심채용을 NCS 활용·확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 MOU 등 추진
 - 대기업 등의 기존 사내 우수 훈련과정을 NCS 과정으로 인증하여 NCS에 대한 현장 체감도 향상 및 자발적 활용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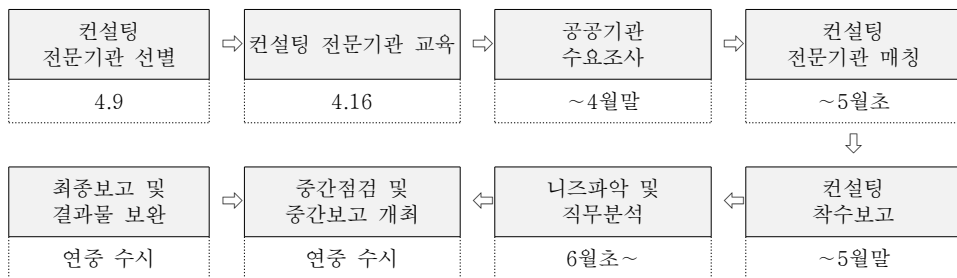
- (전달체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y Skills Council),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Regional Skills Council) 등의 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하고, 이들 매개기관들을 통하여 NCS 기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

□ 이행계획

○ 공공부문 능력중심채용 모델 선도

- 2014년에 기 도입한 30개 공공기관 포함, 총 130개 공공기관(채용규모, 채용계획, NCS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100개 기관 신규 선정)에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실시하고, 20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2015년 현재 316개)을 대상으로 적용 확대 추진
- 다만, 공공기관 준비상황, 도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채용기준 공개 및 직무중심 면접 실시, 직무중심 서류전형 실시, 필기시험 개선안 마련 및 기관별 사전공고, 직무중심 필기시험 적용 등 단계적으로 확산

[그림 4-6] 130개 공공기관 NCS 채용 도입 절차, 2015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NCS의 스펙화 방지를 위한 「사교육 방지 대책」 등 수립·추진
- (인사담당자) 전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NCS 및 능력중심채용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설 교육과정 운영
- (취업준비생) ①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날짜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 온오프라인 상설교육과정 운영, ② 관계부처 채용 설명회와 연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각종 박람회 등과 연계한 소규모 설명회를 연중 개최, ③ 대학·기관 등에서 NCS 및 능력중심채용에 대한 설명회·강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 풀 구축 및 관리, ④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직무분야에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개발한 직업기초능력평가 활용, ⑤ 기타, NCS 사교육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학원 지도·점검, 대학 취업지원관 교육 등 병행

○ 민간기업 NCS 활용·확산 인프라 구축

-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의지는 있으나 시간·전문가 등 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 대상 NCS 활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SC), 지역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등이 참여하는 지역·산업계 주도 NCS 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기업의 인사담당자 또는 CEO를 대상으로 NCS 및 능력중심채용에 대한 교육 제공

[그림 4-7] 지역·산업계 주도 NCS 활용 확산 추진체계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대기업의 경우 SK, 롯데그룹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능력중심채용을 NCS 활용·확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간담회, MOU 등 추진
- 대기업 등의 기존 사내 우수 훈련과정을 NCS 과정으로 인증여 NCS에 대한 현장 체감도 향상 및 자발적 활용을 유도

제2절 결혼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1.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8년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6호)」을 개정하여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결혼을 한 부부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혼집 장만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는 저소득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하기에는 부족
- 혼인건수를 늘림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 직업의 안정성이나 소득이 낮아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층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한국사회에서는 연간 출생아수의 대부분이 법률혼 부부에서 출생하므로 출산율은 결혼건수의 증감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삼식·정경희(편), 2010)
 -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었으나, 유배우출산율은 1.44로 전체 출산율에 비해 0.25가 높아 만혼·비혼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삼식·이지혜, 2014a)
- 신혼부부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변용찬 외, 2010)에서 저소득 청년층의 결혼 장려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456호)」을 개정하여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건설주택 15%(국민임대 30%), 민간건설주택 10%
-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결혼을 한 부부 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① 입주자모집 청약통장 가입자(6월 이상) 중, ② 혼인기간(재혼포함) 5년 이내 임신 중 또는 출산(또는 입양)하여 유자녀인 자로서, ③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맞벌이 120%)에 한정
- 유자녀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아직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
 -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신혼집 장만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는 저소득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미혼남성(20~44세) 중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이유로 '주택과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이삼식 외, 2009a)
-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예비신혼부부, 즉 약혼 상태에 있는 커플에 대해서도 주거 지원(싱가포르 Housing & Development Board)⁶⁾
 - 독신은 35세가 넘어야 싱가포르 주택청(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이 재판매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나, 약혼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약혼자 중의 한 쪽이 21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 구입 후 3개월 내 혼인확인서 제출)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예비신혼부부용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자산 부족으로 결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비혼층의 혼인 장려
 - 미기혼인구(20~59세)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가'를

6) 싱가포르 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www.hdb.gov.sg/cs/infoweb/homepage> 에서 2015.10.1. 인출

질문한 결과,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전적으로 필요 41.4% 포함)(이삼식 외, 2012)

-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주택마련 등 비용부담’(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현대경제연구원 2014:4)

- 예비신혼부부용 주택으로는 분양주택은 제외하고, 매년 3,000호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주요 내용

- 지금까지의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은 유자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새롭게 도입하는 예비신혼부부용 주택은 주택입주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공급
- 매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3,000호를 수도권과 지방 6:4의 비율로 공급하되, 입주대상의 지역별 우선 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지역별 배분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
 - 2012년도 신혼부부 청약경쟁률(분양+국민임대)이 수도권 1.44:1, 광역시 0.55:1, 기타지역 0.54:1 등으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신혼부부 자격요건으로는 결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저소득 커플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
- 공급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점에 혼인 약속을 한 커플 중 1명이 청약(혼인약정서 공증)
 - 주택의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약정서에 같이 이름을 올린 커플이 혼인신고한 신고서 제출 시 주택 입주
 - 혼인약정서 상의 커플과 혼인신고서 제출 시 커플의 이름이 다른 경우 입주를 취소하고, 대기자에게 연락 후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혼부부 입주

2. 신혼부부 대상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New stay’는 역세권에 주로 공급되는 점에서 교통 편의성이 높아 맞벌이 비율이 높은 신혼부부의 수요에 부응하는 입지에 위치
-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 ‘New stay’ 공급 확대

나. 외국 사례

- 일본에서는 가족이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해 2007년 3월 28일 도입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세대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 2007; 2015)
- 지역우량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가능
- 1993년 시행된 특정우량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⁷⁾이라면,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는 고령자세대, 장애자세대, 자녀양육세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
 - 특히 2015년부터는 5년 이내에 배우자를 얻었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요건에 맞는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음
- 지역우량임대주택으로 인증 받으려면, 신규건설의 경우 5호 이상, 원칙으로 준

7) 일본에서 우량임대주택을 공급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優良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1993년 5월21일 법률제52호)이 있다. 동법률은 소득이 중위이면서 현재 동거하고 있거나 동거하려고 하는 친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 및 관리하려는 자(地方公共団体 제외)는 당해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都道府県知事(시인 경우는 당해시의 시장)에게 우량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인정사업자에 대해 지방공공단체는 특정우량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인정사업자는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은 경우, 특정우량임대주택의 인정관리기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해당주택 건설에 소요된 비용, 이자, 수선비, 관리사무비, 손해보험료, 지대상당액, 공과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참조해서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액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공이후 35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로 개량/매수/용도변경인 경우 1호 이상이라도 ①25㎡ 이상, ②식당, 거실 등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8㎡ 이상, ③고령자거주안정확보계획에 의한 별도기준을 정한 경우는 당해기준 이상인면서, 구조로는 ①내화구조, ②준내화구조, ③국토교통성령준화내화구조, ④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한 구조여야 함. 그리고 부엌, 수세식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주택으로 지역주택계획에서 정한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함

－ 임대주택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월등히 높아야 함을 의미

<표 4-4> 지역우량임대주택의 정비기준

호수	신규건설의 경우 5호 이상, 개량/매수/용도변경인 경우 1호 이상
규모	① 25㎡ 이상, ② 식당, 거실 등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18㎡ 이상, ③ 고령자거주안정확보계획에 의한 별도기준을 정한 경우는 당해기준 이상
구조	① 내화구조, ② 준내화구조, ③ 국토교통성령준화내화구조, ④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한 구조의 주택
설비	부엌, 수세식화장실, 수납설비, 세면설비,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주택
건물 연수	준공후 35년 이내의 건축물
정비 지역	지역주택계획에서 정한 지역내에 소재

자료: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07) 및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15) 참고하여 작성

○ 민간이 사업주체인 경우 신축비용은 1/6을 지자체가 보조함. 단,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45%를 국가가 사회자본정비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음. 개량의 경우는 공용부분 건설비의 2/3를 지방정부와 국가가 보조함

<표 4-5> 사업주체 유형에 따른 정부보조 내용

	신축	개량
민간 사업자	총건설비의 5/6 민간사업자	전용부분 사업비 민간사업자 공용부분 사업비 1/3민간사업자
	총건설비의 1/6 지방정부와 국가 55%:45% 보조	공용부분 사업비 2/3 지방정부와 국가 50%:50% 보조
공공 사업자	건설/개량 지방정부와 국가 55%:45% 보조	

자료: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07) 및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15) 참고하여 작성

- 단, 지역우량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 할당되는 방식이 아닌 점에
서 우리나라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지역우량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용하여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양육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동경도 阪橋區에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지역우량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민간이 건설하는 우량임대주택을 20년간 지자체가 임대하여, 중견소득계층
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혼인기간 3년 이내 신혼부부와 초등학교
에 다니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월 3만엔 이상 3년
간 임대료 보조 추진⁸⁾
 - 일본 도시재생기구(UR)는 자녀양육 UR(코소타데 UR)는 18세 미만의 자녀
가 있는 세대나 세대소득 합계가 2015년 기준으로 월 48만 7천엔 이하(4인
가족인 경우 연소득 900만엔 이하)인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초등학교 졸업 이전 어린 아이가 있는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이거나 세대소득 합계가 21만 4천엔(4인 세대 연소득 약 530
만엔)이하라면 임대료를 최장 6년간 20% 감액(감액 상한선 약 2만 5천엔)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⁹⁾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신혼부부 입주에 장점이 있는 New Stay 건설 활성화
 - 공급물량의 10%에 한해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 고려

□ 주요 내용

8) 일본 동경도 이타바시구 신혼 자녀양육세대 안내.
http://www.city.itabashi.tokyo.jp/c_oshirase/002/002763.html
9) 일본 도시재생기구. <http://www.ur-net.go.jp/>

- 신혼부부 입주에 유리하도록 New stay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해당 단지에 대해 육아시설 설치 등 의무화
 - New stay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 등을 고려함으로써 출산을 제고라는 공익에 기여하도록 검토

3. 수도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준 현실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전세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무주택자로 결혼 5년 이내 합산소득 5,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
 - 전세자금 대출은 청첩장 제출 후 2개월 내 혼인하는 예비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결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소득 기준 상향,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 등을 통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맞벌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벗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다수 있는 것도 현실
 -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소득기준을 추가 상향하여 맞벌이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전세자금 대출 요건인 부부합산 소득 5,500만원을 맞벌이부부가 많은 신혼부부의 실정을 감안하여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이용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별 전세금액 상한선 다양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우대 등을 실시

- 현재 대출조건은 85㎡ 이하 주택(비수도권 100㎡) 및 오피스텔 임차시 전세자금의 70% 이내로 최대 8천만원(수도권 1억원) 용자
- 대출 금리는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 규모가 작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버팀목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운영

<표 4-6> 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

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원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5	2.6	2.7
2천~4천만원	2.7	2.8	2.9
4천~6천만원	2.9	3.0	3.1

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 신혼부부의 경우 임차가구 비율, 특히 전세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임차가구 비율은 신혼부부 62.9%, 일반가구 43.5%이며,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율은 신혼부부 77.5%, 일반가구 45.0%로 신혼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국토교통부, 2015c)
- 200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 도입 이후 2014년 말까지 신혼부부 22만 쌍이 이용(전세자금 9조 2,000억원)하였으나(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의 경우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
 - 수도권 전세가격이 평균 1억 2,500만원으로 비수도권 8,9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5)
 - 특히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이 벗어나 전세자금 대출 이용 곤란
 - 신혼부부의 37.2%가 맞벌이이며, 맞벌이가구는 외벌이 가구 연소득 3,675만원에 비해 1.5배 높은 5,464만원으로 나타남(국토교통부, 2015c).
 - 신혼부부 중 연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8.7%, 수도권이 9.5%, 비수도권이 7.6%(국토교통부, 2015c)

-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한해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다. 외국사례

□ 일본

- 전세에 대한 지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혼부부의 월세를 보조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지역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은 일본의 다양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음
 -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에 차이
 - 茨城県 高萩市(다카하기시)는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부부 모두 50세 미만)를 대상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 시내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년간 1만원을 상한으로 임대료 보조를 실시함¹⁰⁾
 - 福井県 越前市(에치젠시)는 2015년 4월 1일 이후 결혼 1년 이내, 본적지가 越前市인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 최대 36개월간 시내 거주시 최대 20,000엔, 외곽지역 최대 10,000엔 지급 하고 있음¹¹⁾
- 또한 신혼부부 중 자녀 양육세대가 부모세대와 인근에 거주하거나, 반대로 노부모가 손자손녀 양육을 위해 인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도 도입되어 있음¹²⁾
 -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에 자녀양육·고령자세대를 지원하는 친족세대가 동일권역(대개 반경 2km이내 UR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신규 입주세대의 임대료를 5년간 5% 할인함. 자녀양육, 친족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는 쌍방 모두에 대하여 할인 적용
 - 동 제도는 UR 임대주택(전체 75만호)의 7할에 해당하는 54만호를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전국 40개단지에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받아 시행

10) 일본 다카하기시. <http://www.city.takahagi.ibaraki.jp/index.php?code=1580>

11) 일본 에치젠시. <http://www.city.echizen.lg.jp/office/070/020/teijyu/shinkonteijuukasien.html>

12) 일본 도시재생기구. <http://www.ur-net.go.jp/kinkyu/>

- 근거의 장점은 자녀양육세대에게는 아이들이 아플 때에 조부모가 조력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접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부모 세대 역시 자녀세대 인근에 살면 중요한 순간에 안심이 되며, 손자녀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임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중산층 신혼부부도 저리의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지금까지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있으나 대출자의 소득기준은 지역에 무관하게 동일하였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소득수준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현재의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조정

4. 장기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 추가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처럼 자가소유 욕구가 강한 상황에서는 자기집을 장만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음
- 신혼부부의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가구의 주택보유율(79.1%)에 비해 높은 수준(국토교통부, 2015c)
- 자가소유인 경우에 비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생아수에 부정적인 영향(이삼식·최효진, 2012)
 - 자기집을 소유하고자하는 의식이 강한 상황에서 전셋집은 주거불안정을 의

미하며, 그로 인하여 향후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상환부담 등이 겹치면서 추가출산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신혼부부의 자가 구입 의사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대상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 추가 확대 필요

○ 장기저리 주택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증대 필요

○ 매각 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금리와 상환방식에 차이가 있는 공유형 모기지를 늘리는 방안 강구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공유형 모기지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7,897세대가 이용(1조 418억원)(김동규, 2015)

○ 그러나 2015년 6월 16일 주택거래 물량이 늘어나고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중단한 상황(국토교통부, 2015b)

〈표 4-7〉 공유형 모기지 비교

구분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금리	연 1.5%	최초 5년 연 1%, 이후 연 2%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만기일시
대출한도	집값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집값의 최대 70% (2억원 한도)
대출기간	20년 만기	20년 만기
집값 하락	구매자가 손실 100% 부담	기금과 손실 공유
집값 상승	기금과 수익 공유	기금과 수익 공유

자료 : 국토교통부(2015a),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2015.1.27.일자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다. 외국사례

□ 싱가포르

○ 신혼부부로 특정할 수 없으나, 부부가구에 대해 월소득이 \$5,00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중앙정부기금(CPF)에서 1회에 한해 대출금을 더 주는 제도 운영(싱가포르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¹³⁾

–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금을 올려주는 제도로 운영해서 월소득 \$1,500 이하인 가구의 경우 최대 \$40,000까지 추가대출

□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부부라고 특별히 주택구입자금을 더 많이 대출해주는 해외 사례는 발견하지 못함

○ 다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자녀 가구 대출우대 제도가 존재함

□ 한편,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신혼부부나 자녀양육세대가 해당지역에 공급·건설되는 민간분양 맨션, 단독주택, 타운 하우스 등을 구입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주택금융지원기구나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의 이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택신축 및 중고주택 매입 시 보조금 제공

– 北海道 上士幌町에서는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녀당 100만엔을 지원, 만일 지역 내 주택업자에게 주택을 신축하도록 하면 50만엔을 더 지원, 다만 보조금은 현금이 90%,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교부, 중고주택 구입 시에는 자녀 1인당 50만엔 지급¹⁴⁾

○ 용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 新潟県 田上町(타가미쵸)는 신혼 5년 이내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대

13) 싱가포르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CPF Housing Grants 지원 조건.

<http://www.hdb.gov.sg/cs/infoweb/residential/buying-a-flat/resale/cpf-housing-grants>

14) 일본 카미시로쵸. 자녀양육세대지원·출산장려를 위한 주택건설조성금 교부 사업

<http://www.kamishihoro.jp/page/00000192>

가 거주를 목적으로 500만에 이상의 자금을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년 10만엔을 상한으로 5년간 이자 보조금으로 지원¹⁵⁾

라. 정책방안

□ 신혼부부에 대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우선 지원

-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모시 10%를 신혼부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하여 우선 신청을 받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 관리

- 주택계정이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정해 편입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5. 민간회사 신혼부부 사원주택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입주자격요건으로 소득기준이 가장 우선적 기준으로 활용

- 소득기준은 정책대상 기준 판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로자 집단의 주거안정을 위한 배려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대출 프로그램과 행복주택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1990년대 근로복지주택

15) 타가미시. 신혼·자녀양육세대 개인주택취득자금 이자보조.
<http://www.town.tagami.niigata.jp/living/kr/Kr30.html>

이후 중단 상태

- 기업이 주택을 일괄 분양받아 자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과 근로자에게 개별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제도가 시행되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22만 6천호, 사원임대주택 7만 5천호 등 총 30만호 건립(노동부, 2003: 44)

〈표 4-8〉 근로자주택제도 개요

구 분	근로복지	사원임대
공급형태	근로자에게 개별분양	기업이 일괄 분양받아 자사근로자에게 임대
사업주체	기업(기업체 연합), 주공, 지자체, 주택사업자	
주택규모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입주자격	○ 분양당시 무주택 세대주(단, 기혼근로자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신청 가능) ○ 상시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기금지원	○ 호당 4500-6000만원 지원	

주: 김용태 외(1993). 근로자주택의 공급효과 분석 연구를 이용하여 재정리

〈표 4-9〉 근로자주택 공급 실적

(단위: 호)

연도 \ 구 분	계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계	301,423	226,288	75,135
1990-1998	300,591	225,970	74,621
1999	84	-	84
2000	318	318	-
2001	350	-	350
2002	80	-	80

자료: 노동부(2003), 노동백서. p. 287.

-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신규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단위로 우선 공급(통 분양)¹⁶⁾

- 근로자 주택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기업에 통 분양을 할

16) 2014년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전에는 통분양은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게만 허용되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설하거나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음

수 있고,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기업이 근로자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세제혜택도 제공

– 지방소재 국민주택의 경우,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는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공공 외에 기업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기업 지원 확대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은 근로자 중심의 주택공급체도를 운영(남원석, 2009)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자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금융공고에서 공급한 주택이나 공단주택(도시기반정비공단)들은 근로자가구를 주 공급대상으로 설정

○ 전후 일본의 주택정책은 소득계층별로 특화되는 주택공급체계를 시행해왔으며, 특히 중간소득계층 이상의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고 용자주택, 공단주택 등을 공급¹⁷⁾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근로자 주택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도 제고를 통해 근로자 주거안정에도도

□ 주요 내용

○ 과거처럼 기업이 근로자주택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근로

17) 일본의 공공주택은 주택금융공고주택, 공단주택, 공영주택으로 크게 나누어짐. 이중 주택금융공고주택과 공단주택은 중간소득계층이상의 근로자가구에게 주로 공급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급된 공영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어왔음

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간접적 방법을 활용

- 예로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나 퇴직금 등을 주거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활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부여
- 기업이 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 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부여

6. 대학(원)생 부부 기숙사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기혼 대학(원)생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대학 기숙사 내 부부 기숙사 확대 추진 필요
- 이를 통해 기혼 대학(원)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기혼 대학(원)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립대 기숙사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기혼자 숙소 확대
- 주요 내용
 - 국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BTL)¹⁸⁾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 추진
 - 국립대학 BRL 기숙사 건립 시, 수용 규모의 5% 수준(약 638명)에 대해 기혼자 숙소로 확보

18)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

- 단, 대학과 사업시행자간 기숙사 건립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7. 청년 주거비 경감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7-1. 청년층 월세 지원제도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전세가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청년층이 장기간 임차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 전세가 빠른 속도로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에도 부정적 영향

나. 현황 및 문제점

- 20-30대 연령층의 주택 점유형태 분포를 보면 20대는 전세 18.6%, 보증부월세 54.0% 그리고 30대는 전세 40.1%, 보증부월세 26.9%(천현숙 외, 2015)
- 20대에 비해 30대의 전세거주비율은 높고 보증부 월세비율은 낮음
- 보증부월세비율은 전체 가구의 경우 18.6%인 반면, 20대는 54.0%로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월세비율도 전체적으로 3.3%인 반면, 20대는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 거주비율이 높다는 것은 월임대료 지출로 인해 생활비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년층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표 4-10〉 연령별 주택 점유 형태 분포

(단위: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가	53.8	6.2	27.1	44.0	60.4	70.3
전세	21.5	18.6	40.1	32.0	17.0	10.3
보증부 월세	18.6	54.0	26.9	19.1	17.1	13.2
월세	3.3	17.0	2.7	2.2	3.4	3.2
기타	2.8	4.2	3.2	2.8	2.2	3.0

자료: 천현숙 외(2015),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p 22.

□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2014. 10. 30)’으로 청년층 월세대책 발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력의 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대상은 졸업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¹⁹⁾, 근로 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만35세 이하(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가구소득이 연 3천만원 이하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를 대출해주고,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 상환(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

– 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만 대상(전용면적 85㎡ 이하)

○ 2015년 4.5대책에서는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을 만30세 이상에서 만2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 금리를 0.5%p 인하(2.0%→1.5%)하고, 지원대상인 취업준비생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도 대상에 포함

○ 이밖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지원이나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 중

□ 일부 국가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부

19)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층 대상 주거 지원 강화

- 미국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김지은, 2014)
 - 뉴욕주의 경우 청년층 단독가구(18~25세)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보조금을 지급
-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들은 학생지원금, 독립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청년층에 주거비를 지원(김지은, 2014)
- 영국도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던 주거 보조비를 2012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Shelter: The housing and homelessness charity)²⁰⁾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월세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결혼 및 출산(자녀양육)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

□ 주요 내용

- 청년층 주거 대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현재 청년층 주거지원은 전세자금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 건축 시 건축규제 완화 등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세지원은 수요자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
 -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에 대해 일종의 긴급 주거지원 차원에서 취업 결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월세의 일정비율을 바우처로 지급
-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

20)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housing_benefit_and_local_housing_allowance/what_is_housing_benefit/housing_benefit_if_you_are_under_35

7-2. 청년층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청년층의 경우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임대 공급에서 청년층을 위한 배정을 늘릴 것을 고려
- 20대의 경우 보증부월세 비중이 2006년 42.0%에서 2012년 54.0%로 증가, 30대의 경우 37.1%에서 40.1%로 증가하여 20대에서 보증부월세 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천현숙 외, 2015)
- 특히, 전체적으로 보증부월세 비중 등이 기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20대 미혼층에서 보증부월세 비중이 높고 증가율도 아주 빠름을 알 수 있음

〈표 4-11〉 20대~30대 주택 점유형태

(단위: %)

	2006년				2012년			
	기혼 20대	전체 20대	기혼 30대	전체 30대	기혼 20대	전체 20대	기혼 30대	전체 30대
자가	22.0	10.3	43.3	40.2	16.2	6.2	30.6	27.1
전세	38.3	29.4	37.7	37.1	43.3	18.6	43.5	40.1
보증부 월세	30.7	42.0	13.8	17.0	33.3	54.0	21.3	26.9
월세	3.3	14.3	1.5	2.0	1.7	17.0	1.5	2.7
기타	5.7	4.1	3.7	3.7	5.6	4.2	3.1	3.2

자료 : 천현숙 외(2015).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나.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전세임대제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공공이 임대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형태로 수도권외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1인 가구의 경우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

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내의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됨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능
- 일반 전세임대의 전세금과 월임대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함

<표 4-12>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과 월임대료 (산출 예시)

구분	전세금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입주자부담	
			보증금	월임대료
전세지원한도 범위 내 주택	6,000만원 주택	5,700만원	300만원	95,000원
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	7,000만원 주택	5,700만원	1,350만원 - 기본보증금 300만원 - 한도액 초과분 1,000만원	95,000원

자료: LH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LH공사 신혼부부전세임대 분양가이드)

○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²¹⁾

-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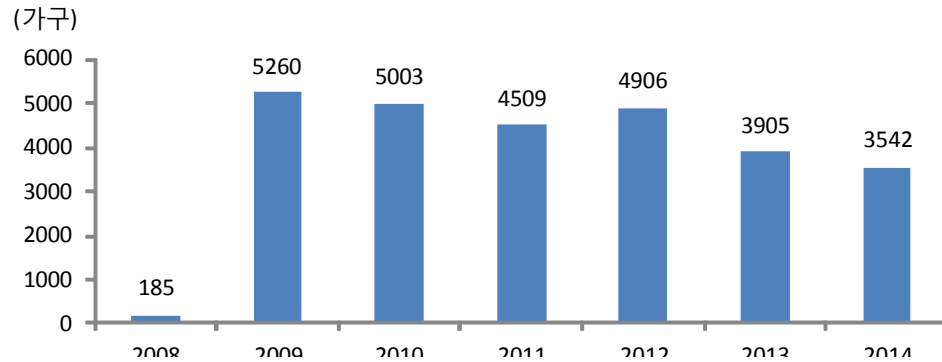
21)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지원 실적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

[그림 4-8]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주택 공급 실적



자료: LH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가이드.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자산 형성 지원
 - － 이를 통해 향후 결혼과 출산에 유리하게 작용 기대

□ 주요 내용

- 전세임대공급 대상으로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저소득 미혼 청년가구로 확장
 - － 청년층 중 대학생은 일부분으로 특별히 대학생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미혼 청년가구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 신혼부부 이외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 일정 물량을 배정

8. 중소기업 밀집 산단 청년근로자 대상 공동기숙사 설치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산단 입주기업의 총 생산액이 전체 제조업의 60.1%, 수출은 72%, 고용은 40.4%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윤상현·조득환, 2010:3),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근로복지도 환경도 열악한 실정
-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미혼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계획
 - 노후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반월산단에 근로자 기숙자형 오피스텔 공급 계획 수립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근로생활의 질 강화 차원에서 복지, 편익시설 확충사업 시행
 - 구체적으로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과 보육시설 유치 등 추진
- 산단 주거여건 확충사업으로 오피스텔 및 공동기숙사 설치 지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여 근로자에 일정비율(20~50%) 특별 공급, 산업시설구역 내 기업의 공동 주거시설 설치 허용 등 추진 중(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²²⁾

22)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 주요 내용

- 전국 산단 근로자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여 근로자 대상 임대주택 제공, 근로자용 기숙사 확충 등 프로그램 시행
- 노후 산단 리모델링 시 근로자용 기숙사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 부여

제3절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1. 결혼·출산 친화 인식 개선 강화

1-1. 인식·문화 개선 추진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 출산을 반등세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급
 - 대상별 맞춤형 인식 개선, 기업의 실천문화 조성, 정책 홍보, 국민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인식·문화개선 방안 마련 및 투자 필요
 - 인식·문화개선 메시지도 남성 참여, 포용적 가족관 등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
- 인식개선 방식이 일방적인 이미지 광고 중심에서 벗어나 전사회적 인식문화개선 운동, 쌍방향 소통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중장기 로드맵 설정 등을 통한 체계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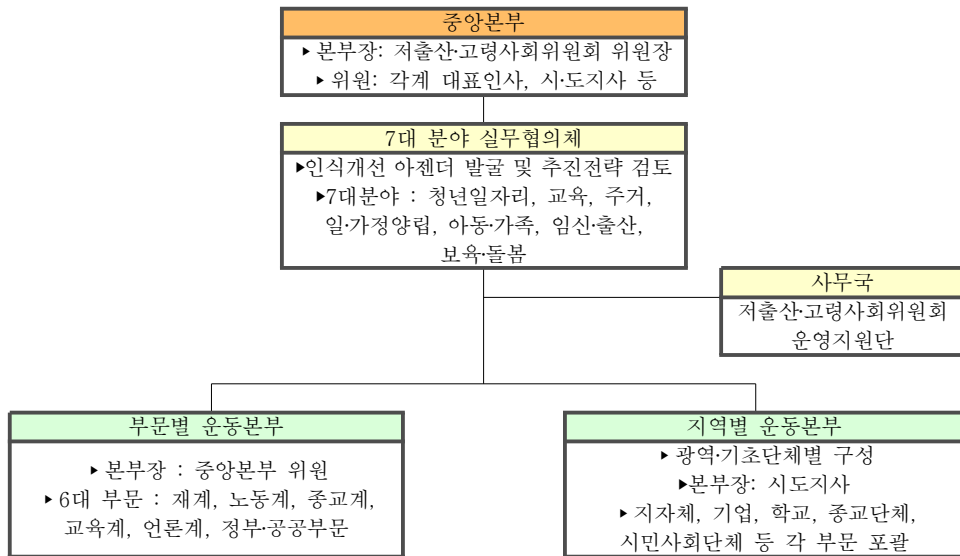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2006년 55.8%에서 2014년 84.3%로 높아졌으며, 고령화현상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동 기간 81.4%에서 94.6%로 증가(보건복지부, 2014)
 - 직장의 출산·양육 인식에 대한 태도는 2011년 24.5%, 2012년 36.3%, 2013년 36.5%로 여전히 낮은 수준(보건복지부, 2013)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 기업의 일·가정양립 실천문화 등 증진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주요 내용
 - 3대 인식개선 핵심 메시지 확산
 - (다자녀 출산) 적령기 결혼·출산, 추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 형성을 위한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언론, 지역사회를 통해 확산·정착
 - (기업·남성의 변화) 관계부처, 지자체, 경제단체, 노동계 등과 인식개선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업의 일-가정양립 보편화, 남성 육아참여 롤모델 확산 추진
 - (포용적 가족관) ‘모든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부모·비혼·동거 가구 등이 사회적 차별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환경 조성
 - 범국민운동체계 구축 및 확산

- 지자체·기업·종교·교육·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인식개선 네트워크 (가칭, 저출산극복 국민운동본부)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실천 확산

[그림 4-9] 저출산극복 국민운동본부 구축(예시)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정책홍보 추진
 - 세대·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홍보 매체 활용
 -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정책 정보 제공체계 구축
- 학교·군대 특화 인식개선 추진
 - 학교인구교육과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인식개선 활성화
 - 국방부와 공동홍보를 통해 군 장병의 인식개선 및 정책인지도 제고
- 인식개선 추진체계 확립
 - 수요자·정책별 중장기 인식개선 전략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식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국민인식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인식개선 평가시스템 도입

1-2. 인구교육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출산과 양육 환경의 개선과 함께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문화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출산율 회복 가능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및 태도 확산 시급
 - 1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 여성(20~39세)의 출산중단사유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부담(43.7%), 고용·소득 불안정(18.0%), 가치관(14.6%), 일-가정 양립 곤란(6.5%) 순(이삼식 외, 2009a)
 - 기혼여성(20~44세)의 추가자녀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이유(51.9%), 가치관 관련(26.2%), 건강 관련(5.3%), 사회적 이유(4.6%), 기타(12.0%) 순(김승권 외, 2012b)

나. 현황 및 문제점

- 일본 기획위원회(2005)에서 실시한 ‘저출산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냐?’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사회책임 비율이 한국의 경우 62.9%로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
- 본인의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한국의 경우 30.8%로 다른 국가들이 50% 전후인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표 4-13〉 출산문제의 책임에 대한 주요국 국민의 인식

(단위: %)

조사대상국	본인	국가, 사회	기타	합계
한국	30.8	62.9	6.3	100.0
일본	45.7	34.3	20.0	100.0
미국	62.1	9.6	28.3	100.0

〈표 4-13〉 계속

(단위: %)

조사대상국	본 인	국가, 사회	기 타	합 계
프랑스	48.9	30.8	20.3	100.0
스웨덴	54.8	35.2	10.0	100.0

자료: 日本 企劃委員會(2005). 少子化社會に關する國際意識調査.

□ 학교인구교육(김태헌 외, 2011)

- 2007년과 2009년 교육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관련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주제로 반영하도록 권장하였으나, 일부교과(사회, 가정, 도덕 등)에 국한 및 내용이 제한적
 - 범교과 학습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음(현재 39개 범교과 학습주제)
- 매년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원양성기관 강좌 개설, 초중등교원 연수, 교재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 교육의 주체인 초중등 교사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로 학교현장의 인구교육은 여전히 제한적

□ 사회인구교육(김태헌 외, 2011)

- 2007년부터 종교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종교인, 군 장병, 직장인,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지원 한계 및 체계적 인프라 미흡
- 출산율 회복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위하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나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학교인구교육과 사회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

리적인 가치관 형성 도모²³⁾

-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사회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활성화

□ 주요 내용

-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인구교육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기적 인구교육 실태조사 실시
 -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급학교 인구교육 실시 규정,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규정
 - 인구교육 전문 교사 및 강사 육성
 - 교육자료 개발, 교원 연수 지원, 자료망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
- 학교인구교육 활성화
 - 연구시범학교의 확대와 여기서 얻은 결과를 전국 학교에 확대 적용
 - 전국 초중등 교원 전원 대상 인구교육 실시
 - 각종 자격연수(1급 정교사, 전문직, 교감, 교장)에 인구교육 과목(2~3시간) 의무 배정
 - 전국 교사양성기관의 예비교사 전원 인구교육 실시 등
- 사회 인구교육 활성화
 - 기업,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조직 구축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²⁴⁾

23) 일본의 경우 “아이·젊은이 육성지원 추진법”(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유아와 서로 접할 기회의 제공’, ‘학교·가정·지역 축제의 추진’ 등을 통한 생명의 중요함과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아이들의 바람직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육성을 위한 아이들 교육환경 정비’, ‘지역이나 학교에서의 체험활동’, ‘소비자 교육의 추진’, ‘문화·예술 활동 강화’ 등과 같은 배움이나 체험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고자 함(日本 内閣府, 2010).

24) 일본의 경우 “아이·젊은이 육성지원 추진법”(2010년부터 시행)에 따라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현장”(2007.12)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국민운동을 통한 분위기 양성이나 제도적 구조의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비 등 추진(日本 内閣府, 2010)

-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전 직원 인구교육 실시
 - 각종 집합연수에 인구교육 과목(2-3 시간) 의무 배정 등
- 일반대학 인구교육 확산(담당교수 워크숍, 교재개발 지원, 교육비 지원 등)
- 정훈장교, 예비전역장병, 사병 등 군 장병 대상 인구교육 의무화

2. 작은 결혼식 문화 정착

가. 배경 및 필요성

- 호화 결혼식, 과도한 혼수 마련 등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2014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자녀를 결혼시킨 55~69세 기혼 부모(부모 세대)와 같은 기간에 결혼한 신랑·신부(자녀 세대)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권혜진, 2015),
 - 전체 응답자 중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했다’는 응답 43.4%
 - 부모 세대 응답자 중 51.9%가 결혼비용 지원액수에 대하여 ‘부담스러웠다’고 응답
- 과시문화·고비용 혼례문화는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결혼기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부모의 노후생활 곤란
- 결혼식, 예단, 예물, 신혼여행, 혼수 등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

나. 정책방안

- 과제 목표

- 혼례교육 및 서명운동 추진으로 작은 결혼식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 허례허식 및 과소비 등 잘못된 예식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
- 결혼예식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위법행위 적발 조치를 통한 공정거래 관행 확립

□ 주요 내용

- 혼례가치관 교육·정보 제공 및 검소한 결혼식 모형 보급·확산
 -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예비부부·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혼례가치관 교육 및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내 힘으로 하는 결혼식(천만원 내외, 양가하객 100명 규모)을 청와대 사랑채결혼식을 포함하여 시도 공공시설 예식장 등에 보급 확산
-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대 및 작은 결혼식 확산 서명운동 추진
 - －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정부기관, 지자체 강당 등을 혼인예식장으로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 4대 종단 및 시민단체와 함께 작은 혼인식 서명운동 추진
 - － 공공시설 예식장 내외부 사진 교체, 예식장 자료 업데이트, 신규 예식장 발굴 및 개방
-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한 지상파 방송 호화결혼 보도 및 방송 자제, 공익캠페인 참여
- 결혼정보 구축 등 작은결혼정보센터 리뉴얼 추진
 - － 결혼예식업체 및 웨딩플래너 참여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등
 - － 새일센터 양성 도움인력(사진, 꽃장식, 메이크업)과 웨딩플래너 연계 정보
- 결혼식장의 불공정행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 불공정행위 제보·소비자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혼식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

- 예식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웨딩드레스 대여,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등의 기본서비스와 예식장, 부케, 폐백 및 DVD촬영 알선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
-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사업자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

3.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결혼·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위기 해소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결혼·출산친화적 세제의 일환으로 출산·보육지원을 위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 (소득세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
- (소득공제)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특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1명 초과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 출산·입양 자녀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한도) 영유아~고교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자녀장려세제(CTC)는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

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조세부담과 무자녀 독신가구의 조세부담 간 격차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준보다 작게 나타나, 그만큼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 정책방안

- 중장기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하도록 개선 필요

4. 지역사회 중심 청년기 비혼 가구(1인 가구) 지원 서비스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청년층 및 중장년층 비혼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무
-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 제공 필요
- 1인가구들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1인가구로 생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김혜영 외 2007; 정경희 외, 2012; Jamieson & Simpson, 2013)
- 청년층 1인가구들은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이성 교제의 기회를 찾기도 함(정경희 외, 2012)

나. 현황 및 문제점

- 15세 이상 인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30대 연령층의 1인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정경희 외, 2012)

○ 비혼 1인가구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단위이며, 결혼 및 공동생활의 생애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임

– 청년층 비혼 1인가구 중에는 자발적 비혼가구(29.8%)보다 비자발적 비혼 가구(70.2%)가 더 많고(강은영 외, 2010), 대체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김혜영 외, 2007)

– 20~30대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계속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36.5%, 그렇지 않다고 한 비율이 63.5%로 향후 결혼 및 공동생활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정경희 외, 2012)

□ 그러나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활동 참여 기회 부족

○ 노년층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는 있지만, 청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기회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ennett & Dixon, 2006)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 결정되어있는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지만 결혼계획이 없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음

• 전 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 추세로 이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Jamieson & Simpson, 2013)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청년층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고를 통한 결혼 기회 증가

– 청년층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고

– 청년층 1인가구를 위한 예비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내 청·장년층 비혼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자체에서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청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호회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 내 청·장년층 비혼 1인가구를 위한 예비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이들을 위한 예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가족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 현재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결혼과 가족’, ‘사랑학’, ‘부모교육’,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등의 과목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맞게 재개발하여 제공

제 5 장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제1절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제3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5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

제1절 임신·출산 지원 강화

1. 난임 휴가제 도입

가. 배경 및 필요성

- 취업여성 증가와 더불어 난임시술 여성 중 취업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의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추세
- 난임 치료, 시술 후 실패 시 휴식 등을 위하여 일정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없어 난임 시술을 포기하거나 난임 시술 시 경력단절 등 발생

나. 현황 및 문제점

- 난임 치료 및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과 고통 등으로 인하여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발생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중 시술에 소요된 총 시술 평균기간은 21~25일 23.1%, 26~30일 16.7%, 31~35일 13.1% 등(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3)
- 최근 취업여성의 난임시술 시도 증가
 - 2013년도 난임치료 정부지원 대상자 중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한 여성 중 취업여성이 50% 수준(체외수정 시술 여성 47.0%, 인공수정 시술여성 52.9%)(황나미 외, 2014: 9)
- 여성의 첫번째 경력단절 사유 중 보조생식술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비율이 4.0% 수준(이정원 외, 2013: 159-161)

□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난임 여성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 추세

○ 만혼 추세 및 난임 치료에 소극적인 사회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40~44세 난임여성 비율이 2007년 8.4%에서 2012년 14.1%로 증가(김명희 외, 2013: 26)

○ 고연령층일 경우 보조생식술로 임신될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 지원 가능 여성의 연령 제한이 없어 지원비용의 효과가 감소 가능

<표 5-1>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령군	2010년				2011년				2012년			
	인공수정	체외수정	합계	%	인공수정	체외수정	합계	%	인공수정	체외수정	합계	%
≤24	202	150	352	0.6	129	91	220	0.4	102	109	211	0.3
25-29	5,265	2,771	8,036	14.3	2,281	1,562	3,843	6.3	1,988	1,385	3,373	5.6
30-34	16,912	10,563	27,475	49.0	16,144	11,331	27,475	44.8	15,479	11,766	27,245	45.0
35-39	7,734	8,021	15,755	28.1	10,296	11,117	21,413	34.9	9,960	11,208	21,168	35.0
40-44	1,489	2,765	4,254	7.6	2,631	4,919	7,550	12.3	2,532	5,060	7,592	12.6
≥45	2	182	184	0.3	203	611	814	1.3	162	735	897	1.5
Total	31,604	24,452	56,056	100.0	31,684	29,631	61,315	100.0	30,223	30,263	60,486	100.0

자료 : 김명희 외(2013), p. 28에서 재인용

□ 보조생식술 시술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시술비 지원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제한

○ 난임 치료에 대한 소극적인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

다. 외국사례

□ 외국에서는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또는 무급휴가 제공 시 여성 및 남성의 연령, 여성의 신체조건, 남성의 흡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신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시술비 또는 휴가 제공하는 경향(김명희 외, 2013: 59)

<표 5-2> 각국의 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자 연령 범위

국가명	연령 제한	국가명	연령 제한
한국	여성 44세	룩셈부르크	여성 40세
벨기에	여성 42세	캐나다	40세 미만
독일	여성 25세-40세 남성 25세-50세	노르웨이	여성 25-40세
오스트리아	여성 40세, 남성 50세	영국	23세-39세
사이프러스	여성 40세	스웨덴	40세 미만
덴마크	여성 45세	체첸 공화국	39세 미만
프랑스	여성 43세	일본	43세(2014년6월부터)

자료 : 김명희 외(2013), p. 59에서 재인용

□ 미국²⁵⁾

-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2013에 따라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주마다 사업장 규모는 차이가 있음)는 난임 및 불임 치료 시행을 위해 최대 12주 연속 휴가가 가능
 - 단, serious health problem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Surgery로 분류되어야 하고 시행 후 ABR이 동반되어야 하는 의료행위)

□ 캐나다²⁶⁾

- Employment Standard Act를 기본으로 각 주 노동법령에 따라 차이 존재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Personal emergency 휴가를 무급휴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10일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보장되어 있는 다른 휴가기간에서 제함

□ 영국

- 정식 법령은 없으며 난임치료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료적 이유로 질병 휴가 사용

25)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012); HR Daily Advisor(2008); US Department of Labor(2015).

26) Canadian Fertility and Andrology Society(2010); Fertility Law Canada. <http://www.fertilitylawcanada.com> 에서 2015.9.29 인출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연령의 임신 확률 증가
-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로 인해 경력단절 예방
- 보조생식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적절한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임신 확률 증가
 - 보조생식술 지원비용 대비 임신률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보조생식술 치료 필요
 - 40세 이상의 여성은 30세 이하의 여성과 같은 확률로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107%나 많은 비용을 지불²⁷⁾
 - 즉,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연령이 젊을수록 원하는 아이를 얻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므로, 젊은 연령에서 보조생식술을 시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난임치료 휴가제 등)

□ 주요 내용

-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난임환자 관리기관 신설
 - 난임시술을 받으며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의 수와 어떤 보조생식술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
 - 난임치료 환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도 도입
 -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 받지 않고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여성도 모두 관리대상에 포함
 - 난임환자 관리 기관 신설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관 지정
- 만혼·난임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휴가제도 도입
 - 난임 또는 만혼 부부에 대해 경력 손실 없는 조건으로 무급휴가 형태로 도입

27)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http://www.asrm.org/?vs=1>에서 2015.10.1 인출.

- 현재 정부에서 보조생식술 지원비용을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횟수 내 시술받는 것을 가정할 경우 12개월 이상 휴직 필요
- 현재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4조)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 필요 시 질병휴직의 일환으로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추가 가능하며 봉급의 7할 유급 휴직 가능
- 대기업 중 삼성전자는 2013년 난임 여성 임직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난임휴가제 도입, 한화갤러리아는 2013년부터 난임 여성 직원에게 연간 최대 3회(1회당 30일) 임신 지원 휴가 및 난임시술비를 2회 지원 또한 임신을 원하는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도 난임시술비 지원(고은경, 2013), KT는 2005년부터 무급으로 1개월에서 1년까지 휴직신청 가능(곽인숙, 2013), SK건설은 2015년 7월 16일부터 3개월씩 최대 2년간 난임휴직 가능(박재현, 2015)

○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임휴가 지원 제한 연령 하향 조절

- 임신률 상승 및 시술비용 절감을 위해 대상 여성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전문가 단체와 협의 필요)
- 남성의 연령, 여성의 신체조건 및 남성의 흡연 유무 등도 시술비 및 난임휴가 지원 시 고려

2. 난임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현실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후에도 육아부담 등으로 출산을 미루는 경향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필요
- 난임 진료자 수는 2008년 173천명에서 2010년 198천명, 2012년 202천명, 2014년 21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나. 현황 및 문제점

- 난임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의료비로 체외수정 등 고액의 시술비(체외수정 300~400만원/회, 인공수정 50만원/회)는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무자녀 가정의 난임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사례는 43.1%, 치료를 받지 않은 사례는 31.4% 등(김승권 외, 2012a)
-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만 지원하고 난임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 부재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난임치료 지원 확대
 - 난임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난임시술 지원체계 마련
 - 난임부부 상담 지원
 -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지지를 위한 중앙 및 권역별 난임부부 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주요 내용
 - 난임치료 지원 확대
 -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부담 경감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대상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지속 지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규모는 건강

보험 적용기준 마련 후 검토)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표준 진료체계 마련

○ 난임부부 심리지지 강화

-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지지를 위한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 상담센터 설치·운영
- 난임시술 전문의 및 임상심리상담사의 의학·심리·상담서비스(온라인 상담, 대면상담 등) 제공
- 난임가정 자조모임 참가자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난임가정 자조 모임 프로그램 개발·보급하여 보건소에서 자조교실 운영)
- 난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가임기 인구 생식건강 관리 교육
- 중앙·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 난임의 개념 및 난임시술의 종류, 난임부부 상담지원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난임시술 관련 데이터 구축
- 난임시술 표준의학적가이드라인 고시

3. 임신·출산 관련 보험약관 개정

가. 배경 및 필요성

- 고령임신으로 인한 조기진통, 분만출혈 등 합병증은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비 부담 증가 및 미숙아 출산, 모성사망 등 사회부담 가중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출산 비용 및 부담 축소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보험의 역할 중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공적부조와 국민건강보험 고운맘카드(출산비용 50만원 보조) 등 공공부문의 지원체계가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민간보험의 출산관련 보장 제공이 제한적
 - 2015년 7월부터 조기진통, 분만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임산부(추계인원 약 17천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예정(지원범위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 위주로, 심사 후 실비지원, 지원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 본인 부담금은 지원 제외)
- 임신과 출산 자체는 인위적 조절이 가능한 이유에서 일반적인 보험의 기본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원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질병 및 위험은 부합
 - 이에 따라 임신출산관련 질환, 입원일당, 유산입원일당, 저체중아입원일당 등 보장은 현재 민간 보험 상품에서도 가능하나, 조기진통, 분만출혈 등으로 인한 입원보장은 현재 부담보 상태임
- 조기진통 입원자 수는 2013년 18,226명으로 당년도 신생아 수 약 45만명의 4%에 해당하고 이는 국내 자동차 사고 부상빈도의 2~3배에 해당²⁸⁾
 - 따라서 임신·출산 자체가 아니라 임신·출산관련 질환의 하나로서 조기진통과 분만출혈을 포함하여 민간보험의 보장내용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입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설치해 두는 한편 2015년 7월 실시예정인 임신보조금 증액제도도 감안해서 새로운 약관 개발 필요
 - 참고로 2015년 5월 국내 최초로 S화재(주)에서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담보 도입하여 임신중독증 진단비 보장 등 개시했으나, 조기진통 등은 보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8) 2013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2013년 2,315만대에서 32.8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함(경찰청, 2014)

다. 외국사례

- 미국에서는 공적보험(HMO, Medicaid, MediCare)과 더불어 일부 민간보험에서도 조기분만(preterm labor) 보장(Wanda et.al., 2000)
 - 관련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보험처리 여부 결정
- UN은 세계 각국의 정부 지도자, 자선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의 참여 하에 "여성 과 아동의 건강을 위한 국제 전략(The Global Strateg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2010년 Every Women Every Child 프로젝트를 시작(WHO, 2012)
 - UN의 지원을 받아 WHO는 2012년 11개국 45명의 전문가의 참여 아래 보고서 "Born to Soon: The Global Action Report on Preterm Birth" 발간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등의 입원 보장 실시(보험약관 개정)
 - 기존의 임신부 보장에서 제외된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등에 대한 보장 실시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감 제고
 - 출산부담 축소로 인한 출산율 제고 및 출산안전도 강화
 - 정부지원금 지급구조를 변경하여 저빈도, 고심도 위험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국민안심과 보험기능 강화(의료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 정부예산의 효율적 사용(고위험 임신부에 집중 지급)
- 주요 내용
 -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등의 입원보장 실시(보험약관 개정)

- 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저빈도 고심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보장대상에 포함(예컨대 4일 이상의 입원비용에 대해 보장, 최초 3일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공동분담(Coinsurance)을 통해서 과도한 입원을 억제(예컨대 입원급여의 20%를 본인부담)²⁹⁾
- 조기진통 등과 관련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급여청구의 증빙조건으로 요구
- 정부지원금을 저빈도, 고심도 위험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국민안심과 보험기능 강화(의료보조금 지급체계 개편)
- 고위험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80%를 지급
-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수용도 낮을 수 있으나, 이는 교육과 설명으로 점진적 해결(예: 감기가 아니라 암에 대비한 건강보험 체계와 유사한 접근)
 -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소형손실의 본인부담, 거대위험의 보험보장)에 부합하고, 거액의 의료비에 따른 임신출산의 부담을 제한하여 산모와 가족의 안심 도모 가능

5. 행복출산 패키지 도입

가. 배경 및 필요성

-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필요
-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조산아·저체중아 출산 등 증가로 의료비 부담 과다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 비급여 47.4%(비급여 항목별 비율은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29) 공동분담과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김두철 외(2013) 참조.

□ 성 경험의 지연령화, 스트레스, 환경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생식건강 저하에 대응하여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 증진 지원 필요

○ 태아 유사산, 기형 예방 및 계획임신을 위해 임신 전 엽산 섭취가 중요하나, 임신 전 엽산 섭취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

－ 이상림 외(2013)에 따르면, 출산 여성 출산 5년 전 생식건강 질환 경험 비율 28.9%, 임신 전 엽산 비복용 비율 56.5%

－ 지자체 보건소마다 임신 전 엽산제 지원 여부 및 지원 기준 상이

나. 정책방안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구체화

○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고운맘카드 구체적 개선방안 등 결정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

□ 2019~2023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시 임신·출산 관련 기본 진료·검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본인부담 경감 및 비급여 항목 추가 건보 적용 검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경우 국가 직접지원 검토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6. 분만 취약지 지원체계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 저출산 심화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로 분만 취약지 발생

- 정부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2011~2015년 총 31개 지역 지원)에 있으나 매년 새로운 취약지가 발생하여 사업의 효과 반감
 - 분만 취약지는 2011년 52개 지역에서 2012년 48개 지역, 2013년 48개 지역, 2014년 46개 지역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 농어촌 산모가 원정 산전 진찰 및 분만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산 관련 인프라 확충·지원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 원거리 산전진찰 및 출산을 해야만 하는 산모들의 신체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부인과 설치·운영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 고위험 임신부·태아·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주산기 센터 설치·운영

□ 주요 내용

-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 마련
 - 취약지의 분만 건수가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분만 산부인과 대신 외래 산부인과 및 순회 진료 산부인과 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 내 산부인과를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교통비 또는 체제비 지원
 - 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 야간 분만 가산 수가 등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구축

- 지역 내 의원급 산부인과가 안심하고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구축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폭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산모 대다수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비용부담, 감염 등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
- 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증대
 -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기혼여성 69.7%가 출산지원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산후도우미 지원' 선택(김승권 외, 2012b)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서비스 지원 및 이용 대상 확대
 - 충분한 산후관리를 위한 지원기간 확대
- 주요 내용
 -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단계적 상향
 - 2018년까지 기본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계층으로 확대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완화
 - 충분한 산후관리를 위한 지원기간 확대
 - 지원기간을 현재 12일(2주, 88시간)에서 15일(3주, 120시간)로 확대
 - 쌍둥이 18일, 세쌍둥이 등 24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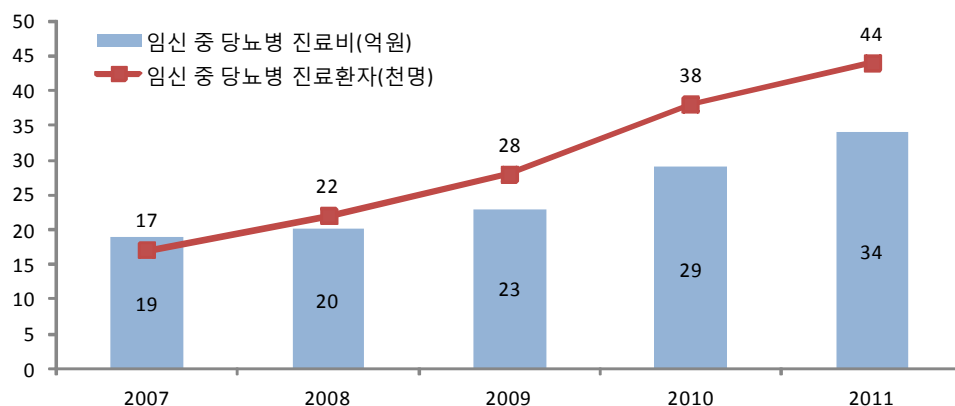
- 산후관리 이용자·이용시간 확대에 따른 제공인력 확보 및 질 제고
 -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기관 설치 및 교육 확대
 - 지역별 양성교육 수료자 풀(pool) 구축 및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산모·신생아 도우미 자질·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

8. 임신부 당뇨 안심 서비스 도입

가. 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모성으로부터의 자녀 출산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여 인구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최근 고령 출산 및 만성질환 위험 요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하는 추세
 - 임신 중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1년 기준 44,000명, 분만 여성 중 10.5%로 연 평균 26.7%의 증가폭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 추세
 - 임신 중 당뇨병 진료비 지출은 34억원으로 2007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여 사회적 부담도 증가

[그림 5-1] 임신중 당뇨병 진료 환자 및 진료비 추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전·후예방관리가 필수적이거나, 체계적 교육 및 관리 체계 미흡

○ 임신성 당뇨병은 태아, 출산 및 산모의 건강 위협

- 태아에 대한 영향으로 태아 사망률 및 신경계·심장 기형등 10배 이상 증가
- 출산에 대한 영향으로 난산, 양수과다증 등 출산 합병증의 위험 증가
- 산모에 대한 영향으로 출산 후 2형 당뇨병·다음 임신 시 당뇨병 위험 증가

○ 임신성 당뇨 산모들에게 필요한 과학적이고 공신력 있는 예방관리 교육·정보 부족 및 접근성 낮은 상황

-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약 50%는 필요한 당뇨 관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김희숙, 2014)

□ 임신 당뇨 산모는 분만 이후 2형 당뇨병으로의 이행 위험이 높아, 분만 이후에도 당뇨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및 검진이 필수적

○ 산후 조리 및 육아로 인해 대부분 적기에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

- 임신성 당뇨병 환자의 10%는 출산 이후에 바로 2형 당뇨병으로 이행되며, 출산 후 5년에는 절반 이상에서 2형 당뇨병 발생(출산 후 8주에 2형 당뇨병 검사 권고)

○ 2형 당뇨병 및 차후 임신시의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 및 지침 부족

- 호주에서는 국가 당뇨병 서비스 프로그램(NDSS)에서 등록한 임신성 당뇨병 산모 대상 온라인 교육 및 필수 검사 리마인드 서비스 등 제공

나. 정책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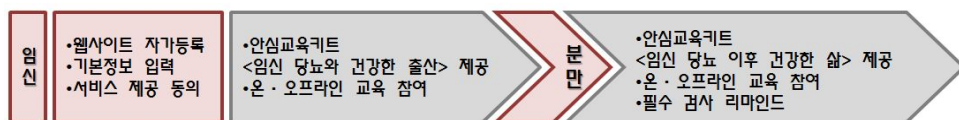
□ 정책 목표

○ 임신성 당뇨 산모 대상 올바른 예방관리 교육·정보 제공 및 필수 검사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만성질환 예방

□ 주요 내용

- 서비스 대상은 임신기간 중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높은 임산부 등
- 서비스 내용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상담 및 리마인드 서비스
 - 안심교육키트 발송(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오프라인 배포)
 - 보건소, 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 교육 안내 및 제공
 - 분만 후 8주 당뇨병 진단 검사 리마인드 서비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의료기관·병원 연계·협력
 - (질병관리본부) 사업 총괄, 교육 키트 및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
 - (보건소, 공단 지사) 임신 당뇨 안심 교육 과정 개설·제공, 리마인드 서비스
 - 보건소, 공단지사,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센터 등 기존 만성질환 사업 인프라 활용
 - (병원) 환자 진단·발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안내·연계
- 기존 보건복지부 ‘아가사랑 사이트(<http://agasarang.org>)’를 온라인 교육 제공 플랫폼으로 활용
 - (아가사랑) 보건복지부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공익 사이트

[그림 5-2] 임신성 당뇨병 관련 서비스 흐름도



9. 안전한 분만을 위한 분만관련 인력 양성

가. 배경 및 필요성

- 고령 임신, 다태임신 비율의 증가에 따른 고위험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산전후의 산모 관리에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요구도 증가
-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에 의한 분만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한 분만기관 감소 지속, 산부인과 전공 인력 감소 및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지속
-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체계적인 분만관련 인력양성계획 수립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분만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분만기관 및 산부인과 전공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분만 기관은 2004년 1,311개소에서 2011년 77개소로 감소(41% 감소)하고,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는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67% 감소)
 -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이 50% 이하인 기관이 72% 차지(김암 외, 2013)
- 산부인과 지원 기피 주요 원인은 낮은 분만 수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수가 개선 미흡,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부담을 분만 의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개선 미흡 등
 -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일본의 1/5, 독일 및 프랑스의 1/3 수준으로 미흡(김암 외, 2013)
 - 산과무과실보상의 재원은 한국의 경우 일부 의사부담인 반면, 일본에서는 전액 정부 부담

《일본 사례》

- ▶산과무과실 보상제도 도입(2009년)으로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을 공적자금으로 부담
- ▶출산보조금 직불제도 도입으로 출산보조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지자체별로 출산전문병원설립, 헬리콥터 도입, 의대생 장학금 지급 등의 정책 도입

□ 현재 분만에 관여하는 젊은 연령대의 산부인과 전문의의 비율이 극히 낮아 향후 고령 전문의의 퇴직 후 인력 공백 우려

○ 전문의 평균연령은 35세 이하 11%, 50대 이상 23%(김암 외, 2013)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 확보

-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확보율(2012년 70%) 증가
- 산부인과 전공의 중도포기율(2012년 15.1%) 감소

□ 주요 내용

○ 분만 수가 현실화

- 분만수가의 단계적 인상(현재 일본 수가의 1/5 수준에서 점진적 인상) 추진
 - 현재 분만 진통 중의 산모와 태아는 집중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모태아 집중관리료 신설

○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2항에 명기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 지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지불 의무 등 개정

○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 중 수당 지급

10. 신생아 관리 개선: 모자동실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출산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므로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관리가 신생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
-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를 산모와 같은 병실에 있게 하는 모자동실제도의 실시가 신생아와 산모간의 애착 형성과 모유수유의 원활한 진행에 매우 중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신생아 분리 수용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관습
 -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 신생아들을 같은 공간에 함께 수용하는 것은 신생아들간의 감염(바이러스 장염, 폐렴) 전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을 의미
 - 현행 모자보건법 상에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실천율은 매우 저조
 - －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에 의하면 모자동실을 실시하는 경우 모유수유 빈도가 증가하며, 감염성 질환의 유병율도 감소(WHO and UNICEF, 20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동실의 실시율은 미국 83%, 캐나다 89%, 한국 45.1% 등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김윤미·김은영, 2011)
- 출산 후 산모가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을 위해 신체 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풍습과도 연관이 있으나 의료기관이 관리의 편의상 신생아실을 운영하기 때문
 - － 한편, 의료기관의 노력에 따라 현저히 높은 모자동실 실시율 달성 가능 (Lee, et. al., 2010)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의료기관에서의 모자동실 실시율 향상
 - － 정상 분만 후 모자동실 실시 비율 제고
 - － 제왕절개 분만 후 모자동실 실시 비율 제고
- 산후조리원에서의 모자동실 실시율 향상(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 축소)

□ 주요 내용

-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의 의무화
 - － 모자보건법(제10조의4)을 ‘신생아를 돌보는 기관은 치료를 요하는 신생아 이외에는 신생아를 그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수용할 수 없다’로 개정
- 의료기관 내의 산모 입원실에 모자동실을 실시하도록 의료기관의 방침 개정
 - － 모자동실에 대한 의료기관 내 신생아 관리 업무 개선
 - －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교육
 - － 모자동실 이행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등
- 국민들에 대한 계몽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병실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 홍보 및 교육
- 아동권리보고서에 모자동실을 권장하는 내용 기술

11. 영유아 모유수유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생하는 차세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출생 후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
 - 모유수유의 기간에 증가할수록 영유아에서의 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의 감소와 함께 지능의 향상
 - 급성중이염 50%, 천식 40%, 세기관지염 및 폐렴 72~74%, 아토피피부염 42%, 1형 당뇨병 30% 급성백혈병 20% 감소(Chung, et. al., 2013)
-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의 국가적 채택 및 이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부진하여 모유대체품의 상업적 마케팅으로부터 모유수유를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규약의 법제화 필요
 - 육아잡지 등을 통한 모유대체품의 상업적 광고 및 무료 샘플 제공 등 마케팅에 임신부들이 그대로 노출
- 의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활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소극적이므로 이를 적절히 평가하고 지원할 필요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모자동실제도 이행, 의학적 이유가 없는 신생아에 대한 불필요한 조제분유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서의 관행을 개선

나.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초 10%였던 모유수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 계획 2020’에 세웠던 계획에는 현저히 부족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출생 후 6개월에 완전모유 수유율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하였으나, 2012년에 47.6% 달성에 그침(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2013).
- 모유수유에 대한 의료기관들이 소극적 태도
 -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던 기관들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재지정을 기피
 - 2005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지정 기관 수 49개 기관, 이후 재지정 철회 기관 수 38개 기관(유니세프 한국위원회)³⁰⁾
 - 2주기에 걸친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는 모성과 신생아 영역에서 모유수유율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에서는 제외
 - 모유수유에 필수적인 출산 후 모자동실제도의 시행에 소극적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의료기관 내 완전모유수유율 향상
 - 산후조리원 내 완전모유수유율 향상
 - 1, 3, 6개월 완전 모유수유율 향상
-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인증평가항목에 모유수유율 관련 항목 추가

3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 질 향상활동의 지표로서 모유수유율 추가
- 환자 진료체계의 영양관리에서의 신생아에 대한 영양으로 항목 신설
- 환자의 권리 존중 영역에서 신생아의 권리로서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 시행 여부 추가

○ 모유대체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제화 및 이행

-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국제규약(IBFAN 2011)과 관련 세계 197개국 중 114개국이 일부 혹은 전부를 법률로 제정, 자발적 실천을 권장한 나라 40개국, 초안 검토 중 29개국
- 모유대체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이 영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 및 이행
 - 17대 국회에서 ‘젖먹이 건강증진법’이 발의된 적 있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 모유대체품에 대한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을 막아준다면 모유수유율의 증가는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 중 마케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

○ 국민들의 모유의 중요성과 수유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모유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중등교육과정 내 교육 내용 제작 및 추가
 - 보건교과 내에 모유수유 관련 교육 내용 추가
 - 고등학교 기술가정 과목에 모유수유의 실제에 대한 내용 추가
- 모유수유의 장점, 방법 등 실제적인 내용 포함하여 제작
- 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혹은 타 교사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 실시

12. 고위험 산모 신생아 관리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고령 출산 및 다태아 출산 증가로 인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증가 추세

○ 출산 연령의 증가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의한 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산모의 증가

- 평균 출산연령이 2004년 29.98세에서 2014년 32.04세로 증가(통계청, 2015)
-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 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14년 14,346명으로 동 기간 163% 증가(황나미, 2015)

○ 다태아 출생의 증가 및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출생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 출생의 증가

- 다태아 출생은 2004년 2.11%에서 2014년 3.49%로, 미숙아 출생은 동 기간 4.6%에서 6.7%로, 저체중아 출생은 4.1%에서 5.7%로 각각 증가(통계청, KOSIS, 출생통계)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위험 산모와 모든 신생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320병상을 증설하였으나 질적 개선 필요

○ 지역별 병원별 불균형 존재(서울대학교병원·보건복지부, 2012)

- 통계청 출생아 대비 원내 출생아수 100% 이상 지역(타 지역으로부터 유입) 7개 광역지역, 50%미만 지역(타 지역으로의 유출) 4개 지역
- 신생아중환자실의 활동성 높은 병원(A)과 그 외의 병원(B)의 중증도 높은 환자의 진료 실적이 차이가 남(조산아분만 비율 52.5%(A) : 31.1%(B))

○ 중증도 높은 극소저체중아의 진료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의 연계망의 권역별 광역화
-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의 활동성 증진
- 신생아 집중치료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고위험 산모와 통합치료센터 구축

□ 주요 내용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 사업의 재평가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질적 향상(장비 및 인력 확충)
- 분만 취약지 거점병원 지원 사업의 광역화
-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광역화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진료 실적에 따른 등급별 차등 지원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의 구축 및 운용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

1-1.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의 현실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결혼 및 가족 가치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관계 해체 이후 이들은 혼자서 자녀 부양과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양부모가족에 비

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

○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3%이며,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소득은 1/2, 자산은 1/5 수준 (김은지 외, 2013: 135, 151, 180)

○ 부양자로서 한부모의 취업률은 86.6%에 달하지만, 종사상지위는 매우 불안정하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녀성장 환경에는 미흡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인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

○ 태어난 모든 아이는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주거·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한부모가족은 자립 의지가 강하여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양육·생활 기반이 조성될 경우 스스로 어려움 극복이 가능한 집단

• 10년 이내 탈수급 의지를 가진 기초수급 한부모가구 비율이 53.4%로 전체 기초수급가구 24%에 비해 높은 수준(김은지 외, 2013)

나. 현황 및 문제점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열악한 상황

○ 한부모의 취업률은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63.4%, 한부모가 될 당시 67.8%, 한부모 상태인 경우 86.6%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비정규직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빈곤과 자녀돌봄 문제에 직면(김은지 외, 2013)

– 취업 한부모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등으로 대체적으로 불안정

– 취업 한부모의 근무시간 중 51.4%가 10시간 이상 근무

• 특히, 취업 한부모의 43.1%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고, 오전 중 퇴근도

5.9%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 부채 등의 경제적 문제 발생

-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평균 172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353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통계청, 2012)
- 100만원 미만 16.7%, 100~200만원 미만 51.8%, 200만원 이상 31.4%
- 부채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은 생활비(35.6%),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의 순으로 기본적인 생활육구 충족을 위해 빚지고 있음(통계청, 2012)

□ 이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자립을 위해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최저생계비 150%(2인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아동양육비로 월 15만원 지원(여성가족부, 2015)
- 만25세 이상 한부모 중 최저생계비 130%(2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12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비 월 10만원(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여성가족부, 2015)

□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 위탁형 교육기관 운영(2013년 21개소)하고 있지만, 미혼모를 위한 아동양육시설이 설치된 일반학교는 없는 실정

- 10대 출산은 2008년 7,920명에서 2010년 8,463명, 2012년 8,72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통계청, KOSIS, 출생통계)
- 통계청(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2,848가구(전체가구 0.07%)이며, 이중 19세 이하는 1,300가구

다. 외국사례³¹⁾

□ 영국

- 가족정책의 범주로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수당 및 세제지원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및 주거급여지원
 - 자녀양육지원으로 근로보조금(Job Grant), 아동보호프리미엄(Child Maintenance Premium), 미망인부모수당(Widowed Parent's Allowance) 등을 지급하고 이외 보편적인 아동수당 지급(임성은, 2009)
 - 소득지원급여를 통한 생계비 보조
 - 가구원의 수입, 저축, 연령, 가족규모, 구성원의 연령, 장애여부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 차등 지급(집세, 승강기, 공동세탁시설과 같은 서비스 비용 등의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단 수도세, 난방, 전기 등은 지급되지 않음)
 - 세제지원으로 아동세금환급공제, 근로세금환급공제

□ 미국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양육지원과 소득보장지원 실시
 - 양육지원제도로 아동양육 및 발달지원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과 일시적 공공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소득세환급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세금환급공제(Child Tax Credit)에 의한 소득보장(박복순, 2008)

□ 독일

- 한부모의 취업활동 여부와 취업능력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대상이 되며, 자녀양육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소득보장 및 대인복지서비스 제공
 - 소득보장 관련 지원으로 아동양육수당, 생계비선급지원, 아동수당·아동

31) 김은지 외(2013)와 김혜영 외(2009)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조세감면, 질병수당 등 제공

- 대인복지서비스로 아동양육휴직에 해당하는 부모시간, 상담·시설 수용 등 대인서비스, 법률부조서비스 등 제공

<표 5-3> 한부모의 취업유무 및 유형에 따른 소득보장 및 양육지원서비스

	취업활동 집단		미취업활동 집단
	정상노동시장	보호고용	
실업급여 I	○	x	x
실업급여 II	○	○	○
기초보장	x	x	○
부모수당	○	○	x
아동양육수당	x	x	○
아동수당	○	○	○
주거수당	○	○	○
교육비 지원	○	○	○

자료 : 김혜영 외(2009), 미혼부모사회통합방안연구. p. 293.

□ 덴마크

- 어떤 형태와 구조를 이루어 살든지 간에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관대한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거와 결혼도 똑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삶의 형태로 인정
 -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행
 - 가족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평등정책 맥락에서 실시함으로써 배우자로서 남녀를 ‘남성 = 취업활동자, 여성=가사·돌봄노동 담당자’로 전제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 잠재적 취업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모의 존재 내지 가족 형태를 떠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보편적 가족정책 실시
- 예컨대 2007년 현재 68만 5천 가구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음. 그 가운데 12만 6천 가구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추가 아동 지원금(additional types of child subsidy)을 받음(Statistics Denmark, 2009; 김혜영 외, 2009: 352에서 재인용)

- 추가아동수당(Extra Child Benefits)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즉, 자녀 양육을 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는 아동수당에 더하여, 한부모일 경우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
- 당장 자립 능력이 없는 한부모가족, 특히 10대 미혼모가족을 일종의 사회투자 대상으로 간주하여 1930년대부터 ‘어머니의 도움(Modre -hjælpen: Mothers Help)’이라는 공공조직을 통해 10대 미혼모의 학업과 자립 지원

□ 프랑스

- 한부모가족의 빈곤탈출을 위한 소득지원으로 한부모보호급여, 최저생활보장 급여 제공

□ 일본

-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양육 및 생활지원-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 자녀양육 지원 및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지원으로 자녀보육수당 지급
 -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소득보장지원으로 대출지원(모자복지자금급부), 공공주택 입주 우선, 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헬로우 워크) 등 제공
 - 대인복지 서비스로 자녀양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
- 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인 「미혼모·한부모가족 가족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한부모의 탈빈곤, 탈수급비율 확대
- 미혼·이혼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 정서, 양육비 이행지원 수혜율 제고

□ 주요 내용

- 정확한 규모추이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지원 범부처 종합대책방안 수립 및 실시

○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의 현실화 추진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아동양육비 단계적 인상
- 다양한 복지급여 및 임신, 출산지원 체계에서 미혼·한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경우 지원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을 전제로 하는 지원이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임신시점부터 출산과 양육여부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한부모의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지원 포함
 - 이혼한 경력이 있는 현재 무배우자 여성의 임신과 출산 시 현재의 미혼모 시설 이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을 개선
 -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미혼 한부모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반영기준 제외 조항 명문화(미혼모의 경우 가족단절로 인한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과정에 이중의 고통을 경험(김혜영 외, 2009)
 - 건강보험 미납상태의 임신, 출산기 미혼 및 한부모 지원책 마련(고운맘카드 발급 대상 제외자)

○ 미혼모·한부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11월부터 고용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가 입소 중인 복지시설(107개소)과 이들이 이용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30개소) 등을 찾아가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
-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 고충처리까지 일원화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0개소)를 통한 한부모 취업지원 확대
- 직업교육훈련생 선발 및 인턴십 연계 시 한부모가족 여성 우선 지원

○ 대다수 미혼·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 상담부터 양육비 관련 소송,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미혼모 교육지원 다각화

- 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하나로 서울시 한부모센터의 '도담학교' 등의 경우와 같이 특정 대상자들만을 모아 검정고시 학습반 운영과 함께 자립 및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학생미혼모를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의뢰
- 분리, 수용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래 일반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제를 통한 청소년기 발달제약의 우려가 없지 않은 바,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방안 강구
- 관계부처의 유기적(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협업을 통해 “미혼모 교실형(통합형)” 대안교육 시범 실시
- 아동양육과 학업이 가능한 보육 및 교육통합형 교육기관 설치 운영 후 확대

○ 미혼·이혼 한부모의 주거지원 강화

- 민관 협력 사업으로 실시 중인 주거지원 지속 확대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배정 확대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에 세대주 요건 삭제(부모·형제의 집에 동거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혜택)
 - 건설임대주택(5년/10년) 특별공급대상(기관추천자)에 한부모가족 추가
 - 미혼모·부 가족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지원 확대: 무주택 저소득 양육 미혼모·미혼부에게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
 - 국토부에서는 부모·형제 집에 사는 무주택 한부모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건설임대주택(5년/10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

○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지원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공동육아방 설치 지원

- 취업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 미혼모 취업 지원 위해 미혼모자 시설 신축·개축, 기능보강 시 공동육아방

설치비 지원

- 미혼 및 한부모의 고충처리와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위한 전화 상담 창구 개설

2. 비혼·동거가구 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

가. 배경 및 필요성

- 부부중심 핵가족 혹은 확대가족을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한부모가족, 미혼독신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높지 않은 실정으로 미혼모, 한부모 등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고용, 교육,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차별 발생
- 이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가족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연동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필요

나. 외국사례

-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동거나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없고, 미혼모 가정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
- 이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지원하기보다 자녀유무에 따라 ‘아동이 있는 가족(families with children)’에 대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김혜영 외, 2010)
- 핀란드에서는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늦춰지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하지 않음
- 아동의 1/3이 혼외출산이고 대부분 동거커플에서 출생하며, 첫아이 출생 후 결혼하는 행태가 빈번(장혜경 외, 2006:152)
- 덴마크에서 독신 인구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혼인율의 감소 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고 출산율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높은 혼외 출산율 유지

○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포괄적 지원

– 1991년대 초에 혼외 출산율은 45%, 2005년 현재 46%에 달함(ONS, 2007; 김혜영 외, 2009:343에서 재인용)

□ 프랑스에서는 1999년 10월 13일 동성애자들을 포함하여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

○ 동성 커플의 ‘시민연대협약(PACs: civil solidarity pacts)’으로 알려진 단체 가입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소득세, 상속, 주택, 사회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권리 부여(장혜경 외, 2006: 63)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미혼모의 사생활 보호와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제도와 가족관계법 일부 개정

○ 동거 및 사실혼관계의 보호 방안 및 혼인 및 차별상황 금지 등과 연관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개선안 마련

□ 주요 내용

○ 초저출산의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출생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생아동의 등록제도 보완 및 수정

– 신생아의 유기 및 방임 방지를 위한 출생등록제도 수정

– 입양을 용이하도록 했던 출생등록제도의 허점 보완

–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 가족관계법 개정

- 현재 가족관계만 나타내는 일부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과거 가족관계 모두를 기록하는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여 특별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도록 개정

○ 동거 및 사실혼 관계 보호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안 마련

-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유연한 혼인 및 가족관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동거 및 사실혼관계에 따른 권익보호 및 차별해소방안 마련
 - 현재 단순한 사통관계와 구별되는 사실혼의 경우 법률 효과만 없을 뿐 상호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를 가지며 보험이나 연금 관계법령에서도 법률혼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
 - 그러나 여전히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동거와 사실혼 등이 현재 및 미래 가족제도에서 차지하는 함의를 적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금지 및 구제

- 현재 각계 의견, 사회적 여건, 법체계와의 조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
- 차별금지 대상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등을 포함하는 '혼인·가족상황 차별금지' 포함
-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 고용·교육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방안 포함

3. 입양아동 양육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의뢰 아동 및 입양희망 부모 감소 등으로 입양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국내 입양 중심의 입양정책 지속 추진 필요

- 미혼인 한부모 가정은 1995년 94천 가구에서 2000년 123천 가구, 2010년 185천 가구로 증가(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 입양규모는 2011년 2,464명, 2012년 1,880명, 2013년 922명, 2014년 1,172명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입양 희망 부모도 2012년 1,599명에서 2013년 971명, 2014년 991명으로 감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입양특례법에 따라 2007년부터 국내입양 가정에게 아동양육수당을 만 15세 미만까지 월 15만원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인 요보호아동 연령 기준(만18세)에 미충족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범위는 2013년 만13세 미만까지에서 2014년 만 14세 미만까지, 2015년 만 15세 미만까지로 점진적으로 확대

□ 입양아동 대학학자금 지원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입양 촉진에는 미흡한 수준
 - 입양부모의 입양결정과정에 입양에 대한 편견 외 “경제적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입양 결정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한 편견(35.3%), 경제적 부담(14.7%), 가족의 반대(14.7%) 순으로 조사(김유경 외 2010)
- 입양아동의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입양 진입을 제한하는 장애요인 완화 필요
 - 입양아동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유
 - 입양가정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양육보조금 확대(30.9%), 교육비지원(20.9%) 순(김유경 외, 2010)
 - 대학 진학하는 입양아동이 있는 양부모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등록금 마련이 부담이 될 수 있어 대학을 입학하는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

로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
- 입양아동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금액 확대
 - － 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은 만18세까지 상향 조정
 - －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원가정 보호가 곤란하여 입양이 불가피할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양육방식은 「원가정보호→국내가정 보호→국제입양」 순으로 입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 대학에 입학하는 입양가정의 입양아동부터 대학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 지원근거로 “입양특례법 제35 ① 국가와 지자체는 ----- (중략) -----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강화

4-1. 주택지원 다자녀 우대를 두 자녀부터로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은 현재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3자녀 이상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자녀수 0→2명 가구)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났으며, 가계수지나 자산보유 측면에서도 현 주거수준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개선하는데 한계(천현숙 외, 2012)

－ 특히 저소득층 3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 주택정책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은 합리적

□ 그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지원은 이미 3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출산지원효과는 크지 않음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이 현행 출산율 수준에 맞춰 수정될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정책 내용

○ 3자녀 이상 가구는 신규분양 주택 공급시 특별공급 혜택 부여

○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대출 시에도 3자녀 가구에 대해 0.5%p 우대 금리 적용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추가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자녀 가구에 주거 지원

□ 주요 내용

○ 신규분양주택 특별공급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가구가 일시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공급 대상은 현재와 같이 3자녀 이상으로 유지

○ 금융 지원 시에는 2자녀 이상은 0.3%p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수 1명 초과 시마

다 0.2%p씩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우대효과가 커지도록 함

4-2. 기본생활비용 감면제도 개선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본생활비용 감면제도 대부분이 3자녀 이상 가구 위주로 지원 중

○ 다자녀 인센티브로서의 국민 체감도 향상 및 실질적인 출산장려제도로서의 기능을 위해 감면 항목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

〈표 5-4〉 주요 다자녀 기본생활비용 감면제도 현황

감면 항목	지원 내용			
전기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전기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구의 월 전기요금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구의 도시가스사용료 정액 할인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구 분		다자녀 가 구	
			경감 월정액	
			도매(공사)	소매(도시가스사)
	취사용 사용가구		420	130
취사·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12~3월)		6,000	1,800
	기타월(4~11월)		1,650	490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녀 이상 가구의 지역난방 열요금 정액지원(월 4천원)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지자체별 다자녀우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발급, 카드 소지자 대중교통요금, 주차요금, 보험료, 학원비, 박물관·문화재 입장료 등 감면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다자녀가구 기본생활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 내용

- 현행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지원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법규 개정
- 통신요금, 교통비, 수업료, 수도요금 등 다자녀 출산·양육에 따라 가계부담이 증가하는 항목에 대한 감면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미래창조과학부), 「수도법」(환경부) 및 지자체 관련 조례 등 개정을 통한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근거 마련
 - 학교 수업료, 대중교통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위임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국민행복카드·지자체별 다자녀우대카드 통합 추진
 - 별도 다자녀우대카드 발급 없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지자체별 다자녀가구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해당가구의 양육 자녀수를 선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4-3. 세 자녀 이상 LPG 차량 구매 혜택 부여

가. 배경 및 필요성

- 자녀가 많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고 양육 부담이 크므로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LPG 승용차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록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LPG 승용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구매 가능하며, 일반인도 5년이 경과된 차량은 구입 가능하나 연비 및 안전성 고려 시 구매력 저하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 주요 내용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경우 LPG 승용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혜택 부여
 - － 구체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 LPG차량 구입 허용

제3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1.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1-1. 아동 놀 권리 헌장 제정 및 문화·체육시설 등 놀 여건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놀이·여가는 주거, 건강,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의 필수 요건임에도 현재 아동들은 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201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 학생 564명을 상대로 조사·분석한 결과(송현숙, 2014),
 - － 유·초·중 시기 놀이 경험과 현재의 행복감이 .330~.396의 유의미한 상관도를 보임

- 즉, 어릴 때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
- 그러나 놀이와 여가가 자신의 권리인 것을 모르는 어린이는 50.4%로 조사됨
- 2013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5c),
-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아동의 52.8%가 취미생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 정기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음

□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 왜곡된 놀이 행태의 개선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놀 권리 헌장 및 놀이정책 수립

□ 주요 내용

-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방향 제시
 - 아동의 놀 권리 헌장 선포, 놀이정책 수립 등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 놀이정책에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 적합놀이, 놀이지도자, 인센티브 등을 포함
- 지역사회 놀이·여가 인프라 정비
 - 안전하고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놀이터 리모델링
 -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등 아동전용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 마당 활성화
- 가족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마련 및 방학·휴업일의 다양화 등
- 국립청소년수련원 가족캠프 운영

1-2.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보건복지부, 2013)
- 아동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정책 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아동을 둘러싼 전체 환경의 아동친화적 변화 필요
 - 특히,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중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1996년부터 시작하여 30개국 1,300여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
 - 우리나라는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 최근 군산시, 대구중구 등 일부 지자체는 선거공약으로 추진 중
-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10가지 원칙)을 아동 행복 실현을 위한 지자체 환경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표 5-5〉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내용
1. 아동의 참여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예: 어린이 의회)
2.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법적 틀, 절차 등 마련 (예: 어린이 조례)

〈표 5-5〉 계속

	내용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체 도시 차원의 전략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4.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 조직 구조 개발
5. 아동영향 조사와 평가	법,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 전후와 집행 단계에서 조사하고 평가
6. 아동 관련 예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
7. 정기적인 아동현황보고서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모니터링 실시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시민과 아동의 인식 제고
9. 아동권리 옹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옴부즈퍼슨 위촉이나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개발을 추진
10.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확산

- 참여 홍보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 촉진

□ 주요 내용

○ 아동친화도시 개요, 인증 방법, 인증 사례 등 지자체 홍보

○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을 위한 준비 지자체 현황 조사 및 정책적 지원

-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2. 아동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2-1.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예방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의 기본 토대이나,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가정 내 학대의 경우 발견하기가 어렵고 학대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상당수
-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처럼 체벌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팽배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재학대를 방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쉼터 아동의 심리치료 효과성을 증대하여 학대 후유증 회복을 통한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주요 내용

- 아동인권·학대 민감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교육·홍보 강화
 - 경미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 등도 아동학대라는 인식 확산
 - 공익광고, 옥외전광판, 포스터,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 캠페인 전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시·도, 시·군·구 및 관련 협회 주도의 신고의무자 직군별 교육 실시
- 아동학대 발생 가정 모니터링,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강화하여 재

학대 및 중대 학대범죄 발생 예방에 중점

- 현장 대응 인력 대폭 증원 및 심리치료 기능 강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상근 심리치료인력 배치
-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관리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업무 수행능력 제고 위해 중앙의 업무처리 모니터링 및 직무교육 강화
 - 신고접수 자동녹음, 업무처리 이력관리, 업무부실 특이징후 자동알림 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사건 발생시 신속 출동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위험 징후가 있는 가정 상시 방문 등 아동학대 위험성 인지 및 조기 발견 노력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필요
 -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된 피해아동의 숙식·심리치료 지원 시설

○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복지시설 편입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강화

2-2. 아동보호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기, 학대, 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 지속 발생

- 유기 및 미혼모, 학대 및 가출 등으로 발생하여 복지부 소관 인프라를 통해 보호되는 아동은 약 4만6천 명(전체아동의 약 0.5%)에 육박
 - 2014년 보호대상아동 4.9천명, 학대판정 1만명, 입양 1.2천명, 가정외 보호 3.3만명

〈표 5-6〉 보호대상 아동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590	7,483	6,926	6,020	4,994
기아 및 미혼모 아동	2,995	2,733	2,224	1,819	1,508
미아	210	81	50	21	13
아동학대 가출아동	5,385	4,669	4,652	4,180	3,47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지역단위 아동복지 통합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타워 부재

-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유형이나 인구학적 특성, 사업주관 부서에 따라 다양한 접수경로가 존재, 연계성 부족 및 일관된 책임소재 부재
 - 아동(아동복지심의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입양기관 등)/청소년 CYS-net, 청소년쉼터 등)/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각종 상담소 등)

□ 위기 아동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사정·보호조치의 비전문성

- 보호아동의 초기상담 및 보호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미흡
- 업무처리 매뉴얼(아동의 욕구 및 위기도 등에 대한 사정도구)이 없고, 심층(현장)조사나 진단 없이 아동보호제도로 편입

□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연계성 및 지속성 미흡

-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일시보호 포함) 등 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불가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통합게이트웨이를 통한 아동보호조치를 통하여 체계적 위기아동 발굴과 위기 사정, 보호조치 판정 및 사후관리의 전문화 도모

□ 주요 내용

- 유기·가정해체 등 가정 외 보호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정보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통합 DB 구축
 - 아동 관련 데이터 명칭, 정의, 형식, 규칙 등 표준화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 시스템 등 연계망 구축
-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기능보강을 통한 아동중심의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드림스타트 고유기능과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심 체계적 위기아동 발굴과 위기 사정, 보호조치 판정의 전문화 도모
 - 기존 아동복지 공공조직 및 민간 기관·단체의 조직·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아동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방안 마련
- 지역내 관련기관의 기능·역할을 조정하는 통합기구로서의 위상정립
 - 아동보호서비스 공공조직과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망 구축
 - 희망복지지원단, 위탁가정, CYS-Net,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법원 등
-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복지법·하위법령 개정

2-3. 아동 안전교육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아동 안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
- 아동 안전을 위해서는 환경 정비와 함께 아동들이 위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5대 의무교육 이외 의사, 추락 등을 포함한 생활

안전 주제를 신설하고 콘텐츠 교육내용에 지진, 폭우, 해상사고 등 다양한 사고 예방 내용 추가 필요

－ 아동복지법상 5대의무교육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교통안전 포함

- 교육방식도 강의식에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목표로 위기상황별(아동학대, 실종·유괴, 화재, 추락 등)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아동이 체험도구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처하는 참여형 체험교육으로 개편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아동 안전사고 감소

□ 주요 내용

- 개발된 아동안전콘텐츠 보완 및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운영
 - － 아동안전교육 대상기관 종사자가 아동연령에 맞게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보완
- 아동안전사고 발생빈도에 근거한 안전교육 개선
 - － 단순이론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청각 자료 확대·보급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등 아동안전교육 강화
 - － 현행 안전교육 주제 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발생빈도에 근거한 안전교육 주제 확대 등 개선
- 아동안전사고 예방 홍보사업
 - － 보육교사 등 아동 지도교사에 대한 아동안전포털사이트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이용 활성화 추진
 - － 아동안전과 응급처치의 중요성 대국민 홍보 확대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심각
 - 중1~고3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37.0%, 우울감 경험률이 26.7%, 자살생각률 13.1%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4)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 및 상담 등 공공개입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으로 이환 예방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 도모
- 주요 내용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청소년 전담인력 배치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문제 평가,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5개 국립병원 내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문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2015년 상반기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 205명 및 프로그램 운영 201명(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정신보건법」 개정
 -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및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상담·치료 등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제 6 장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제1절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

제2절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제3절 돌봄 지원 체계 확충

6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

제1절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

1. 사교육 경감

가. 배경 및 필요성

- Bray & Kwok(2003), Bray(1999), Sobhy(2012) 등에 따르면 대학진학을 위한 국가관리 입학시험이 있는 국가에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으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적절한 수단(Bray, 2009; Gut & Monell, 2008)이 되고 있으나,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에 의한 사회불평등 문제가 발생(Sobhy, 2012)
-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을 야기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
 - 사교육 과열은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계층 간 위화감(가난 대물림 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도 유발
 - 사교육 과열은 창의적 인재양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입시문제 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키고 정형화 된 인간을 배출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 저해
 - Baker 외(2001)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통해 성취도를 높이려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보조수단(remedy)이 되고 있다고 보고

나. 현황 및 문제점

□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전년 23만9천원에 비해 3천원(1.1%) 증가(통계청, 2015)
- － 2014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2천원으로 전년 34만7천원에 비해 5천원(1.5%) 증가

□ 교육부는 2014.12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표 6-1>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 집중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 학교교육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 영어 방과후 교육 내실화 · EBS를 통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 영어동아리 활성화 · EBS 수능교재 어휘수 및 난이도를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 ·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영어 콘텐츠 제공 ▶ 수학 : 학습내용 적정화 및 수능준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교과서 학습내용 조정 · 초등 스토리텔링 수학학습 지원 · 학습결손보정 및 효율적 자기주도학습 지원 · 현장교사 역량개발을 위한 교과 연구회 지원 · 중장기 수학교육 종합대책 수립 · 난이도 조정 등 수능준비 부담 완화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지역돌봄기관간 연계 강화 ·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 중학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고입전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수학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디딤돌 개발·지원 ·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입학전형시 교과과정내 출제 · 사교육 유발요인 평가 결과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의무화 ▶ 고교 : 대입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 확대 및 교내 맞춤형 진학지도 실시 ·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전형 유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추진

<표 6-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법·제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 선행학습 유발광고 제한 등 학원점검 강화 ·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점검 강화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서열화 구조 완화 · 선취업 후진학 확대 ·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체계 마련 및 확산 · 학력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형성 ▶ 학부모 교육 등 범사회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학습 인식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사교육 없는 자녀교육 성공사례 발굴·확산 · 범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자료 : 교육부(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18.일자 보도자료.

다. 외국사례³²⁾

□ 일본에서 명문대에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이 줄어들어 일부 일류대학, 일류고등학교 등을 제외하면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

○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학력이 높으면 높은 수입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학력 효용 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학력의 효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즉, ‘연줄’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자기실현적 가치와 소비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독일은 사교육 자체가 거의 전무한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음

○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처지는 학생이라도 사교육기관이나 개인과외를 받지 않으며 대신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원학급’, 교과 담당교사의 ‘0교시 수업’,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보충

○ 학교제도의 다양화와 더불어 교육내용과 학교유형의 다양화가 강조되어 학교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됨(단선형 학제에서 다양성이 매우

32) 김현철·윤유진(2012)을 참고하여 정리함

약한 한국의 실정과 커다란 차이)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내용을 다양화하여 인문계, 자연계, 사회계, 과학계, 경제계, 가정계, 예능계 등을 설치하고 있고, 직업학교 역시 직업학교, 전문학교, 직업전문학교 등 학교유형을 다양하게 구성
- 교육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개인의 자아실현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이 중요

○ 독일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학입학 경쟁이 심하지 않음

○ 취학 아동은 스포츠 혹은 학습 클럽과 같은 학교나 지역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거나 온종일학교(All-day school) 참가

- 온종일학교는 “교육과 육아를 위한 미래(Zukunft Bildung und Betreuung, IZB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연방정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전기금으로 40억 유로를 주정부에 제공, 주정부는 1990년대 이후 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온종일학교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
- 온종일학교는 학생들이 받는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의 정도에 따라 자유(open), 부분의무(part compulsory), 의무(full compulsory)로 구분
- 자유형태의 온종일학교 교육이란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결정
- 의무 형태의 온종일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
- 부분 의무형태의 온종일학교는 의무 수업과 자유 수업이 혼합된 복합적인 형태

□ 프랑스에서 사교육이 비교적 적은 이유는 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이 ‘선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과’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제도에 기인

- 프랑스의 교육체제는 유치원 학교인 에콜 마페르넬 3년, 초등교육인 에콜 5년, 중등교육인 중학교인 콜레주 4년, 고등학교인 리세 3년, 대학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등이며, 의무교육연한은 만 6세에서 16세까지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해당
- 상급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선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 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상급 교육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
- 대학의 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과정 이수 증명시험인 동시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의 성격으로 절대평가에 기초를 두고 시험 점수는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대학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선행교육 등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음
- 대학 진학 시에도 그랑제꼴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대학서열이나 대학 선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진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들이 논술형 필기시험과 구술형 시험으로 구성되며, 평가기준 역시 독창성, 논리력 등으로 정답 자체보다는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 등을 확인
 - 프랑스에서도 학습지 시장과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나 그 수요가 수월성보다는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나 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 핀란드의 학교제도는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학습자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없고, 특히 9년간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통학비 등을 정부가 부담(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매달 교육보조금 지급)
- 핀란드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방과전후 활동(morning and afternoon activity)'이 있는데,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 법이 규정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공동체 정신과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길러 준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

- 1~2학년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의 운영은 국가교육청이 책임지고, 3~9학년 까지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클럽'들은 교육부 장관실 직속 부서나 광역 주 당국에서 책임지고 운영
- 초등학교 1~2학년만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 는데 '방과 후 활동' 시간에는 정규 교육 과정을 다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정 규 교사가 참여할 수도 없음
 - '방과 후 활동'은 주로 지도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주도하되, 보조교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학교도 있음
- '방과 후 활동'은 부모가 바라는 경우에만 보내는 선택형 프로그램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공교육 경쟁력 강화

- 학교교육의 낮은 경쟁력 개선을 위하여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강화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 용을 확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

○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개선

- 설립취지와 달리 최상위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으로 변질되면서 진학 경쟁 이 과열되고 있는 특목고의 입학전형 방식 개선
- 내신, 수능, 면접, 논술 등 전형 요소가 많고 복잡한 대학입학의 전형방식 단순화

○ 사교육 시장의 투명한 운영 수단 확보

- 사교육의 효과를 과신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사교육 업체들이 과장광고 제한

- 사교육 업체들의 교습시간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안 수립
- 학원비 투명성 강화 방안 수립

□ 주요 내용

-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 학교 자율화 확대
 - 교과교실제 도입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 수학교육의 난이도 제한
 - 영어교육의 질제고 및 교육기회격차 해소
-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 대입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 강화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 학원 교습시간 단축
 -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제한
 -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불법·편법 운영 학원의 효율적 관리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 학부모 인식전환 노력 지속 및 입시관련 정보제공 강화

2. 공교육 정상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의 원인으로서 사교육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을 동시에 정상화 필요
- 사교육은 감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상화의 대상으로서 공교육의 정상화는 사교육의 정상화를 이끌고 과도한 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시도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 학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교육의 모습이 아님
 -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는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도와 줌
-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의 확대
 - 초중등교육에서 창의력은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길러짐
 - 수동적으로 배운 것을 외워 시험 보는 것을 극복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교사양성 체제의 개혁
 - 새로운 교육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사 양성 방식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교실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음
- 학교 교육이 중시되는 입시

- 학교교육이 중시되고 학교 교사의 견해가 중시되는 입시체제가 필요
- 학교교육과 입시의 연계가 부족할 때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
- 단순히 내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입시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도록 함

○ 효과적인 고등직업교육 기관들의 양성

- 현재 대학의 수업은 취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으며, 대학단계에서 사교육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 하지만 현재 대학 체제는 효과적인 취업교육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음
- 기존의 대학이 효과적인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변신하던지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음
- 물론 다수의 4년제 대학들은 수준 높은 교양교육을 지속해야 할 것임

○ 학력사회의 극복

-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음
- 학력 사회를 극복하는 사회적 노력과 교육의 혁신이 함께 가는 광범위한 개혁의 추진

□ 주요 내용

○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 초·중·고 단계에서 다양한 인생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전인교육을 위한 예체능 수업 강화(초등학교 단계에서 예체능 사교육의 흡수 고려)
-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교육 기능 강화

○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 자유학기제 등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정규수업에서도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 전개
- 학생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협업능력 향상

○ 교사양성 체제의 개혁

-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과감히 개편
- 학생 참여 수업을 이끌 수 있는 방식의 교사 양성과정 구축

○ 학교교육이 중시되는 입시

- 교과 과정 내의 입시
- 지역할당제의 확대 등 교육기회 균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입시

○ 효과적인 고등직업교육 기관들의 양성

-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고등교육을 다양화하고 산학 연계를 강화
- 독일-네덜란드 형 산학중심 대학을 모델로 하는 기관의 설립 혹은 기존 전문대의 운영모형 변화 유도
- 기업의 신입사원 훈련 노하우(know-how)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등직업기관 설립·운영 유도
 - 기본적으로 기업은 연구 중심 대학의 운영이 아니라 취업 중심 대학 운영

○ 학력사회의 극복

- 공기업 및 공무원에서 고졸 신입 쿼터 증가 등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 유도하되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출발

3. 새로운 부모 역할 및 문화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출산의 의미 부여뿐 아니라 실제 출산을 담당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출산의 보상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부모역할 정립이 필요

-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정보가 공식적이고 신뢰할만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지 않고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입장에서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예측에 따라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

○ 과도한 부모역할 부담은 다자녀를 기피하는데, 한 자녀에 집중된 관심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과도한 부모개입을 불리움으로써 부모 자녀 모두의 행복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긍정하는 비율이 외동자녀 부모(6.59점) 보다 2자녀(6.61점), 3자녀 이상인 경우(6.85점)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김희연 외, 2015)

– 자녀를 행복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도 외동자녀(7.71점)에 비해 2자녀(7.97점), 3자녀 이상(6.85점)으로 다자녀 부모들에서 더 높아지는 경향(김희연 외, 2015)

○ 특히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인 취업모의 경우 지나친 모성역할기대는 부모됨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14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의하면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는 ‘퇴근 시간이 늦어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여성의 경력개발에 있어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빈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김난주 외, 2014)

○ 또한 학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교육전문가로서의 모성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취업여성의 다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증폭

□ 부모 인생과의 지나친 동일시, 경제적 비용 중심의 부모역할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행복과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부모역할을 정립 필요

○ 비용이 아니라 행복한 보상으로서의 부모됨의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있는 부모뿐 아니라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서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채널 및 부모교육 실시방안 마련 시급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은 주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생활교육의 일부로서 실시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경우 센터를 방문한 부모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참여하므로 상대적으로 적극적 의지가 있는 제한된 일부 부모에 불과
 - 2014년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 2,038,437명 중 가족교육 참여자는 23.0%인 467,885명(통계청 e-나라지표, 건강가정센터 설치수 및 이용자 현황)³³⁾
 - 센터에서는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지원 등의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제한적
- 대부분의 교육이 오프라인의 집합교육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참여가 제한적
- 부모들이 경험하는 시간빈곤 보완 곤란

다. 외국사례

- 미국은 사회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모교육 전문가와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축
- 전국부모교육네트워크(The National Parenting Education Network: NPEN)의 비전은 미국부모교육의 질적 표준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장려함'으로 제시
- 미국의 부모교육은 다양한 형식과 장소, 방법으로 제공되고 정부와 비영리 또는 상업조직과 개인에 의해 후원 및 이행

3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 에서 2015.10.1 인출

○ 대상 부모는 자녀의 연령(출산 전부터 청년), 가족전환기 부모유형(예; 아버지, 한부모), 부모의 요구나 위험상태에 있어서 다양하며 부모교육을 전달하는 주체도 훈련, 경험 그리고 직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편적인 부모교육

- 병원을 통해 영아 안전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영아관리 프로그램을 주 1회 씩 수주에 걸쳐 제공
- Zero to Three³⁴⁾는 0~3세 영아 발달단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 및 임상실험을 진행해온 비영리기관으로, 최근에는 관련 지식을 일반 부모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
- Head Start³⁵⁾는 0~5세 영유아의 발달단계 및 조기학습에 관심을 가져온 비영리기관으로,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입학 전 교육(School Readiness)을 돕는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유아 건강 및 안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제공
- text4baby³⁶⁾는 2010년 미 연방정부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20만 명에게 주 3회 임신 건강과 영아양육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음.

－ 부모와 보호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김은설 외, 2011)

- 이혼이나 별거, 입양, 입영과 같은 전환기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 이혼의 경우 단기프로그램에 양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 증가
- 일차 양육자로 부, 한부모, 동성애/성전환 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포함

－ 위험군을 위한 교육(취약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 위기에 처한 부모를 위한 일부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실시되지만 대부

34) Zero to Three. <http://www.zerotothree.org/> 에서 2015.10.1 인출

35) Head Start. <http://eclkc.ohs.acf.hhs.gov/hslc> 에서 2015.10.1 인출

36) text4baby. <https://www.text4baby.org/> 에서 2015.10.1 인출

분은 자녀와 가족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과 부모교육을 통합하는 양육성공체계 모델에 속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김은설 외, 2011)

- Healthy Families America(HFA)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임신 혹은 출산 직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계속(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족기능의 강화,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³⁷⁾

□ 네덜란드는 지역수준에서 부모교육서비스를 통합하고 0~23세 자녀를 둔 가족과 부모 지원을 위한 각 지역차원에 'Youth and Family Centres'를 설립하여 부모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적 접근에서의 가족 모니터링, 초기 개입과 예방이라는 경향성을 갖고 있음(서울연구원, 2014)

○ 지방정부의 부모지원 방향을 보면 사회지원조례(Social Support Act)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부모를 위한 지원 제공 의무

- 정보와 조언 기회 제공, 잠재적 문제에 대한 개입, 가이드 및 상담기회 제공, 교육적 지원, 지역수준에서의 보호 연계 등

○ Youth and Family Centres는 2005년 법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적 센터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법률에 따라 2.5km마다 1개 센터 설치

- 센터는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주된 일로서 아이들 지원, family plan 등 bookstart 사업 추진,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주변학교와 네트워크 사업 추진, 부부관계 지원 등의 역할 수행 및 기본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싱가포르에서 건강한 가족구성과 성장에 대한 가족교육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기, 젊은 직장인, 결혼 예정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인생의 각 시기에 요구되는 교육을 지역사회 내 전달체계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교육의 일환으로 부모를 위한 교육도 실시(김은설 외, 2011)

37) Healthy Families America.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 에서 2015.10.1 인출

○ 가족생애교육(family life education)의 필요성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행한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³⁸⁾에 따르면 두 가지의 추진전략을 통해 친가족적 환경을 만들려는 공적, 사적 영역 및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음(김은설 외, 2011)

- 가족과 부부와 부모들이 긍정적인 가치와 의식을 가지도록 함
- 생애를 통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도록 개인에게 정보를 주고 교육하고 격려

○ 취학 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교육(the Parent Education in PreSchools: PEPS)’와 ‘학부모교육(School Family Education, SFE)프로그램’은 학교기반 가족생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부모역할을 해가야 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부모와 가족생활교육의 연속 프로그램(김은설 외, 2011)

- PEPS 프로그램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긍정적인 가치와 사회적 역량을 키워가는 시기에 부모에게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고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
 - PEPS는 기본적으로 연간 20시간 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12시간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내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8시간은 구역만남(zone talks)'을 통해 진행, 최소의 비용(연간 20시간 당 약 5,000)을 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 자료비, 강의료 등은 국가가 부담
- SFE(학교를 통한 부모교육)은 통합적인 가족학습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바 부모는 부모촉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갖추게 되며 학교교직원은 학생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학생 또한 생활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음
- 가족생활대사(Family Life Ambassador:FLA) 프로그램을 부모의 일터에

38)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

<http://www.aitong.moe.edu.sg/wbn/slot/u1150/A%20guide%20to%20family%20life%20education-%20in%20singapore.pdf> 에서 2015.9.29 인출.

서 진행하여 가족생활기술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모든 부모가 청소년기, 청년기, 자녀출산 전후한 시기에 최소한 1회 이상의 부모교육 참여

□ 주요 내용

- 대상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듈 개발 및 실시
 - 기본적 부모교육(공통) + 다양한 가족유형별 특성반영 + 아버지용 어머니용 반영 + 다문화 이해
 - 한부모, 취업부모, 다문화부모, 장애아부모 등 부모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포함
 -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으로 분리적용 될 수 있는 부분 포함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대 배우자 출산 및 임신, 자녀양육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언어 번역
 -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분리, 적용될 수 있는 모듈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출생신고 시 부모역할 키트 제공
 -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축하선물, 부모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지역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담은 부모역할 키트 제공
 - 부모됨 축하 선물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육아용품, 성평등한 자녀양육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세트 등
 - 부모역할 가이드북에는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가치, 자녀발달단계별

특성 및 이에 따른 부모역할수행방법(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등),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및 역할수행방법 등 수록

-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인프라 및 정보 제공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와 부모교육 연계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양육수당, 고운맘카드)를 처음 신청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집합교육 이수증 제출
- 연간 부모교육 필수시간 이수 시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유지(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된 부모교육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의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한부모를 위한 교육, 아버지교육,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을 통해 온라인 교육접근성 제고
- 수혜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수혜자격유지를 위한 연간보수교육 의무화), 다양한 유형별 선택 가능한 온라인 교육 제공

○ 초등학교 입학과 부모교육 연계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부모교육 안내 및 정보 제공
-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자녀가 다니게 될 해당 초등학교에서 부모교육 실시(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독립성 함양, 불필요한 사교육 감소 효과)
- 교육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소식지 제공(학교 교육 정보와 부모교육을 연계함으로써 부모의 관심 촉구)

○ 부모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 교육의 표준화 및 관리를 위해 부모교육 강사 양성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 관리

○ 예비군 훈련 및 직무교육에 부모교육 포함

- 부모됨 전후 시기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실시로 타겟 집중
- 직장내 직무교육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하고 교육시수를 가족

친화경영지표에 포함

○ ‘아이와 함께 행복한 부모역할’ 홍보

- 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성장을 도모하는 부모역할을 담은 공익광고 제작 및 지속적 방송
- ‘행복으로 성장하는 아이와 부모’ 캠페인 실시

4. 맞벌이부모 학교 참여 지원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학부모 학교참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인성발달, 학업 성취, 민주적·자치적 교육공동체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부모 학교참여가 소수 학부모의 교육기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참여 곤란
 - 외국에서는 학교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원
 - 미국의 학생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의 1조 1118절 ‘학부모 참여’ 관련조항
 - 영국 스코틀랜드의 학부모참여법(Parental Involvement Act of 2006)
- 우리나라도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필요
- 교육기부 중심의 학교참여 개념을 소통 및 정보제공 중심의 학교참여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맞벌이 부모의 부담감 완화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

○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과 학교참여로 보고

-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것은 ‘학교에서의 엄마 노동력 사용금지(46.3%)’이며,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힘든 점은 ‘학부모 네트워크에서의 소외(44.4%)’를 지목(예지은 외, 2010)

□ 현재 전국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율은 90% 이상이지만, 임의단체이므로 약 20~30%의 일부 학부모만 참여(이강이 외, 2013)

-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는 2013년 5월 김세연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초·중·고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
- 경기도 교육청은 2013년 관내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 그 외 서울시, 강원도 등에서도 2014년도 말에 학부모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

□ 2011년 7월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가 제안되어 검토된 바 있으나 정책화되지 못하였음

○ 맞벌이 부모의 88%는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무급휴가제라도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아버지 60%, 어머니 68%(진미정 외, 2012)

다. 외국사례

□ 대만의 학부모회 제도화

○ 2006년 7월 교육기본법 제8조 제3항에 ‘국민의무교육 기간의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도의 책임을 지키며, 자녀의 최대 복지를 위해 법에 의하여 교육방식, 교육내용을 선택함과 학교교육사무참여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학부모 학교교육 사무 참여법’을 제정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

- ‘학부모 학교교육 사무 참여법’ 제5조에서 ‘학교는 학부모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School Visitation Leave)

○ 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설명회, 학부모총회, 학부모상담 등 다양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무급 휴가제도를 도입

- 캐나다는 주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3일, 5일,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Heymann & McNeill, 2012)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학부모 학교참여의 저변 확대

□ 주요 내용

- 모든 학부모가 학부모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제도화
 - 학부모회 의무설치를 위해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거나 학부모지원법을 제정
- 맞벌이 부모 및 한부모를 위한 학교참여 유형 다각화
 - 취업부모의 학교참여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야간 학교설명회, 학부모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 아버지들의 학교참여를 위해 아버지회 활성화 및 아버지교육 확대
 - 녹색어머니회 등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참여 방식을 전환하여 아버지 참여 통로를 제공

- 문자, SNS 등으로 학교정보 제공 시 어머니에게만 제공하지 않고 부모 모두에게 제공
 - 학교-가정 간 다양한 소통 통로를 개발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며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지역사회-기업 등을 연계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 취업주부, 아버지들의 학교참여를 위해 학교참여휴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소정의 시간을 무급휴가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 공공기관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활용도, 가정, 기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확대
 - 휴가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법제화

제2절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1. 부모의 보육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완전책임보육 시행으로 시설이용 보육료(22~78만원)와 가정양육수당(10~20만원)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시행
- 2015년 보육료 6.8조원(국비 3.0조원), 양육수당 1.7조원(국비 1.1조원)
- 그러나 ‘시설보육/가정양육’의 이분화 된 서비스, 종일제(12시간) 중심의 시설운영으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

-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불균형적 지원은 가정양육이 중요한 영아(만0~2세)의 합리적 보육서비스 이용을 제한
- 시설 이용시간과 무관한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모 등 보육 실 수요층에게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유인 부재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부모들이 아동발달·가구특성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주요 내용

- 시설보육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부모 선택권 확대
 - 영아의 적정 시설이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도화
 -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보육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시간 연장보육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중심)
 -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자 등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보육 실수요층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 시설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집이 맞벌이 등에 장시간 서비스 제공할 유인 제공
-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
 - 적정수준의 가정양육수당 단계적 인상, 육아정보·상담을 위한 육아정보포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병원·공공기관·은행 방문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일시보육 서비스 제도화

2.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필요

나. 정책방안

-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의해 증가하는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수요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연차별로 시간 연장 보육어린이집 지정 확대
 -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확대에 따른 예산(인건비) 확보 필요

2. 부모에게 육아정보·상담 제공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신청·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웹 포털이 다수 존재하나, 포털 간 개별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중복투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미흡
- 지역 내 부모에게 보육, 가정양육과 관련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전담기관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및 지원신청·상담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

는 (가칭)육아종합포털 구축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

□ 주요 내용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아이사랑보육포털, 아가사랑 포털, 마음더하기 포털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복지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및 유관기관 콘텐츠 연계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전화방문상담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

○ 기 아가사랑, 아이사랑보육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 중인 온라인 상담기능 연계·통합

3. 부모에게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산 및 정착

가. 배경 및 필요성

□ 부모가 등하원시 어린이집 문 앞까지만 출입하는 등 어린이집의 개방과 부모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부모참여가 활성화된 ‘열린어린이집’을 보편화하여 부모-어린이집 간 신뢰를 제고

– 지역 내 우수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보육현장 전반

에 ‘열린어린이집’ 문화를 확산

□ 주요 내용

- 법적 기반,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배포, 부모·어린이집 대상의 홍보 등 보육 현장 전반의 ‘열린’ 분위기를 유도 확산
-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부모참관권 보장(안제25조의2 신설) 및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제25조)의 부모비율, 개최횟수 확대
- 부모참여우수사례 등 시설개방, 부모참여의 선도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
 - 다양한 부모참여프로그램, 물리적 환경 조성 등 시설개방성과 부모참여도가 높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4.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제고를 위해 그간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국공립, 공공형, 직장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는 부족

〈표 6-2〉 유형별 어린이집 시설수 및 이용인원

(단위: 명,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법인단체	부모협동
시설수 (개소, %)	43,742 (100.0)	2,489 (5.7)	1,420 (3.2)	692 (1.6)	14,822 (33.9)	23,318 (53.3)	852 (1.9)	149 (0.3)
아동수 (명, %)	1,496,671 (100.0)	159,241 (10.6)	104,552 (7.0)	39,265 (2.6)	775,414 (51.8)	365,250 (24.4)	49,175 (3.3)	3,774 (0.3)

자료: 보건복지부(2015a). 2014 보육통계.

- 부모 선호도 및 체감도와 높은 국공립·공공형 등 어린이집을 적정 규모로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원되는 국공립, 공공형 등을 확충하여 교사 처우개선, 보육품질 제고 등 보육서비스 선도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 전체 보육이용 아동 중 공공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2014년 26%에서 2020년 39%, 2025년 50%까지 확충
 - 2025년 국공립 20%, 공공형 17%, 직장 6%, 사회복지법인 7%(이용아동 기준)

□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총 1,100개소 추가 확충(2016년 150개소, 2017년 이후 매년 200개소)하고, 확충방식을 다양화
 - 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우선입소 등), 민간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등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지자체 부지제공, 생보재단 어린이집 건립 후 기부채납, 복지부는 설치비·인건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총 1,600개소 추가 확충(2016년까지 매년 200개소, 2017년 이후 매년 300개소)
 - 시설의 재무건전성, 대표자 운영책임성, 교직원 전문성 지표 등 선정기준 강화, 사후관리로 공공성과 높은 질 담보 추진
 - 정원구간별 운영비 지급방식을 정원기준에서 현원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실제 운영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방식으로 개편
 - 정원 규모별 지원금액의 형평성, 원아수 대비 교사가 많은 영아중심 소규모 어린이집에 불리한 점 등 고려 현원을 반영한 지원기준으로 전환

- 직장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매년 75개소 확충(의무+비의무), 의무사업장의 85%까지 의무이행 추진(2014년 75% 이행 중)
 - － 대기업-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설치비 지원 확대(최대 15억원)
 - － 미설치 사업장 이행 강제금 부과(2016년~)
 - － 직접설치 대체수단 정비 등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확산
 - 2015년 보육수당 폐지, 영유아 30%이상 위탁시만 인정 등 위탁보육 요건 강화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립유치원 대비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인프라 및 원아 수용률 저조

-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학교 수는 많지만, 이용 원아수는 사립의 약 30% 수준이며, 교실수는 사립의 약 10% 수준으로 국공립의 시설인프라 및 원아 수용률 확대 시급
 -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14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 수는 국공립 4,619개소(52.3%), 사립 4,207개소(47.7%), 원아 수는 국공립 148,269명(22.7%), 사립 504,277명(77.3%), 교실수는 국공립 2,626실(9.3%), 사립 25,620실(90.7%)

□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 － 자녀가 다니기 희망하는 1순위 시설(중복응답)은 국공립 유치원 74.3%, 국공립 어린이집 64.8%, 민간유치원 27.3%, 민간어린이집 18.0%, 직장어린이집 14.8% 등 순(국회예산정책처, 2012a:55)

- 정부에 바라는 중요 육아지원정책 순위(중복응답)는 국공립 운영시설 확충 51.5%, 보육비 및 유아학비 지원 확대 43.0%, 만0~5세 의무 보육 및 교육 실시 35.0%,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19.0% 등 순(국회예산정책처, 2012b:76)

□ 초등학교 유희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확충 노력

- 저출산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초등학교내 유희교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치 방안 강구
 - 2011년도 교육부 정책연구에 의한 학교급별 유희교실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가 9,202교실, 중학교가 6,405교실, 고등학교가 3,937교실로 초등학교의 유희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류호섭 외, 2011:275)
- 공교육의 정상화와 유아교육 선진화의 필요성을 따라 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은 단설유치원의 설립보다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운영이 용이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설립을 중심으로 공급 추세(김형수·박재승, 2015: 4)
 - 공립유치원 설립별 유치원수는 단설 228개소로 4.9%, 병설 4,388개소로 95.1%(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30~33, 40~43)

나. 외국사례³⁹⁾

□ 스웨덴 비트라 효스타덴 퀴스콜라(Vittra Sjöstaden Förskola)

- 비트라 효스타덴 퀴스콜라(Vittra Sjöstaden Förskola)의 주된 교육철학은 영유아 개별 맞춤형의 공부방법과 취향, 능력 등에 따른 개별교육과 사회(학교 집단)생활을 위한 서로 다른 점을 이해,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 모두를 강조
- 대부분 교사의 주당 업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며, 교사(teacher)의 경우 대학(university)이상 졸업자, 보조교사(assistant)는 전문대학(college) 졸업자를

39) 조진일 외(2014:131~133, 140~142)의 국외사례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함

자격요건으로 함

- 각 그룹⁴⁰⁾별 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이 팀을 구성하여 학급을 운영
 - 만 1~2세의 경우 놀이중심으로 일과를 진행하되, 그 밖의 기본 생활 및 식습관과 수면 등으로 구성, 만 2~3세는 만 1~2세의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행하되 개인 관심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
 - 만 4세는 1주일에 한번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 만 5세는 보다 개별적인 활동 계획과 특히 바깥놀이나 외부 체험(견학, 도시나들이, 미술관, 교통체험 등)활동을 중심으로 운영

[그림 6-1] 유치원 전경



[그림 6-2] 옥외 놀이공간



[그림 6-3] 교실



[그림 6-4] 식당 내 배식대



□ 노르웨이 아멜루디아 바네하게(Ammerrudlia Barnehage)

- 아멜루디아 바네하게(Ammerrudlia Barnehage)의 교육철학은 의사소통(learning), 보육(caring), 놀이(play)를 중시

40) 그룹은 만1~2세, 만2~3세, 만4세, 만5세, 만6세(초등학교 preschool class)로 구분됨. 그룹별 학생수/교원수를 살펴보면, 만1~2세는 30/6명, 만2~3세는 30/6명, 만4세는 25/5명, 만5세는 25/4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6-5] 유치원 전경



[그림 6-6] 옥외 놀이공간



[그림 6-7] 쌓기놀이공간(Lego)



[그림 6-8] 볼더링룸(암벽타기)



- 일상적인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1시간 정도의 바깥놀이(운동, 신체활동, 활발한 놀이 등)를 실시
- 특히 노르웨이 유치원의 특징 중 하나가 수면 공간인데,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자기가 타고 온 유모차에서 낮잠⁴¹⁾을 자며, 이는 추운날씨에서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임
- 총 영유아수는 135명이며, 크게 만 1~3세 영역과 만 3~5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 그 중 만 1~3세는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며, 그룹당 영아(만 1~3세)는 9명, 유아(만 3~5세)는 18명당 교사(teacher) 1명과 보조교사(assistant) 2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

□ 일본 미나토(港)구립 시바우라(芝浦) 유치원

- 정원은 120명이며, 만 3~5세 연령별 구분하여 운영
 - 만 3세는 1개반 25명, 만 4세는 2개반 총 39명, 만 5세는 2개반 총 44명 현

41) 반드시 외부와 통하는 곳(외기 유입)에 유모차 보관소를 설치하며, 영아의 낮잠은 날씨(비, 눈 등)에 관계없이 별도의 수면실보다는 유모차에 태워 재운다고 함. 또한 영아별 낮잠시간이 각기 달라 운영에도 수월하다고 함.

재는 108명 재원

- 다른 유치원과는 달리 초등학교 5, 6학년과 유치원생이 같이 노는 “해피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그림 6-9] 유치원 출입구(별도)



[그림 6-10] 옥외 놀이공간



[그림 6-11] 복도



[그림 6-12] 교실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 초등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인프라 및 원아 수용률 확대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매년 1.5%씩 증가시키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최소 30%까지 달성하는
1단계 목표 수립

□ 주요 내용

○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의 적정 규모 산정

- 지역별 유아인구를 고려한 병설유치원의 적정 수용 규모 및 시설 규모 산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 현재 교육부가 학교시설을 신설할 경우 초·중등학교는 예산교부를 위한 시설면적 기준이 있으나, 유치원은 부재
 - 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별표에 유치원 원아수별 교사(校舍)와 체육장 기준 면적만 명시

○ 기존 초등학교의 유휴 공간(부지 및 교실 등)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시설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유형별(신축, 증축, 개축 등) 기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기존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필요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 기존 초등학교의 유치원 전환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신축의 약 1/5 수준이며, 유휴부지 활용 시 부지매입 비용 전액 절감
 - 병설유치원의 필요 공간 1순위 실내놀이실(유희실) 22.4%,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방과후 교실 35.3%로 조사(최은영 외, 2012: 58-59)

□ 이행계획

○ 지역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적정 유아수용계획 수립

- 현행 지역별 유아수용계획에 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
- 지역별 초등학교 유치원의 운영형태(병설, 단설 등) 결정 등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수용 및 시설 규모 적정 산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전문 기관 지정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설치, 모니터링 등 생애주기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운영
- 기존 초등학교 유휴 공간(부지 및 교실 등)을 활용한 병설/단설유치원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과정의 행정적, 제도적 개선

- 초등학교 설립 추진 시 병설유치원의 수용계획, 시설규모, 예산배분, 건축 설계, 건축시공 등을 초등학교 설립 추진과정에 포함하여 동시에 추진 등

○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시설 현황, 공간이력, 시설관리, 유지 및 보수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포털 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전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사용 공간 및 초등학교 유휴공간(교실) 실태 파악 등

□ 추진시 고려사항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또는 증축) 시 기존 초등학교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책(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마련

○ 국가 차원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통시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내 단설, 병설유치원(만3~5세), (가칭)유보통합시설(만0~5세), 국공립어린이집(만0~5세)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모델 개발, 보급
- 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칭)유보통합시설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의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함
- 막대한 재정투입에 따른 부처(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간 적정 예산 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투자 유인책 강구

○ 초등학교 내 유아기(만3~5세)와 학령기(만6~12세)의 혼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대한 미연 방지 대책 강구

-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강구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에 따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 민간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으로부터의 반발 해소 방안 강구

□ 기대 효과

○ 국가 재정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적 국공립유치원의 조속한 확대 가능

-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국공립유치원을 조속하게 확충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가능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교육 가능

6.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수요자 중심 의무평가제 전환

가. 배경 및 필요성

□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에 대한 언론·국회 등의 문제 제기

□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한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평가사각지대 해소, 운영자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평가 방안 등 개선 모색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인증통과 평균점수가 상향평준화 됨에 따라 보육서비스 질 척도로서의 기능 미흡

○ 인증통과 평균점수는 2011년 91.5점, 2012년 92.7점, 2013년 92.9점,

2014년 94.9점(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평가인증 관련 통계)

-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평가로, 품질이 낮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등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
 -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유지율은 2014년 12월 기준 75.3%(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평가인증 관련 통계)
 - 질이 낮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신청을 기피하는 역선택 현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모에게 정보 제공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목적 달성에 한계
 - 부모는 미인증 기관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미인증 기관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 점유
- 1회성 현장관찰 및 서류 중심 평가로 현장의 부담은 과중한 반면, 평가 결과가 상시적 질 상태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
 - 평가가 전문가 평가로 현장관찰 결과가 평가 점수에 절대적 영향을 주며, 수요자인 부모의 시각이나 요구는 미반영
 - 인증통과 점수가 어린이집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인점검 시 대부분 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점수 하락 폭은 2013년 평균 11점, 2014년 평균 9.3점(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 평가인증 관련 통계)
- 평가지표의 수가 과다하고(3차 지표 50개 항목, 308개 세부지표), 획일화된 구조 중심 지표로 구성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과정이나 결과보다 시설 환경 등이 강조됨
- 총점 및 영역별 점수 공개가 부모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운영자들의 민감성을 자극하여 변별력 없는 무의미한 고득점 경쟁을 유발
 - 질을 높이는 운영보다 평가 준비에 많은 노력을 들이는 부작용 발생

다. 외국사례

- 호주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 도입 당시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국가 주관의 평가제로 전환(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2015)
 - 2012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관리 체계(National Quality Standard)를 새롭게 구축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교육보육 내용 및 이와 연동된 품질평가기준을 공동으로 적용
 - 국가기관인 호주 아동 보육·교육 품질관리원(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7개 영역 18개 기준, 59개 요소 평가를 통하여 5등급 총괄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우수 등급은 국가 기준 초과 등급 운영자 중 신청 및 심사를 거쳐서 선정
 - 평가주기는 3년이 기준이지만 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현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가 정지나 취소도 가능
 - 각 영역 및 총체적 평가 결과는 보육·교육 품질관리원(ACECQA)의 웹 사이트와 MyChild 웹 사이트에서 공개
- 영국은 2006년 아동보호법(2006 Child care Act)에 의거하여 교육표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서 모든 보호·교육 기관과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inspection) (Ofsted, 2015a)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아동 요구에의 대응, 아동 안녕에 대한 기여, 지도력과 운영 관리의 효과성의 세 영역으로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전반적 질적 수준을 파악
 -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개선 요구, 부적절의 4단계로 평가
 - Ofsted에서는 점수와 기관의 장단점 등을 기록한 평가 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부모에게 결과 보고서 송부 의무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모든 어린이집 평가로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 비교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
-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평가체계 확립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
- 변별력 없는 점수 대신에 등급화로 부모에게 상대적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간의 불필요한 고득점 경쟁 요인 완화

□ 주요 내용

- 의무평가제 도입
 - 기존의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
 - 유보통합 일정을 고려하여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는 시점 결정
- 평가지표와 측정방식 개선
 - 운영환경·보육프로그램 등 공급자 관리위주의 구조 평가체계를 아동, 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결과 평가체계로 보완
 - 현장관찰 시 서류 검토를 최소화하고 면담과 관찰에 중점
 - 현장관찰은 불시 방문 원칙 적용
 -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활용 극대화로 지표 수 감소 기대
- 운영·평가에 부모참여 보장(부모 참여평가 도입)
 - 평가 과정에 부모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설문 형태로 수요자인 부모의 평가를 반영
 - 부모대상 설문 항목에 원장·교사의 인성, 아동학대 관련 지표 등을 포함
 - 아이사랑보육포탈을 통하여 부모가 상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참여를 독려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운영위원회 등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 연계

- 전체 평가 중 부모 관련 평가의 적정 비중 모색

○ 평가결과는 등급화 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개 및 활용

- 평가결과로 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등급 부여 사유를 명시한 종합평가서 작성 공개

- 최하위 등급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및 컨설팅과 연계

- 지속적 상위 등급 어린이집에 평가 주기 차등 적용 강구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부모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 생산체계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정부간 역할 분담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의무평가 실시 및 관련 조항 변경(법 제 30조 및 시행규칙 31조, 32조 32조의 2, 32조의 3)

- 평가인증 항목에 부모 참여 관련 조항 추가(시행규칙 31조)

- 평가인증 정보 공개 사항 변경(시행규칙 34조의 4)

7.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육교직원 인력 현황

○ 보육교사는 전공과 관계없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 부여, 인터넷을 통한 자격 취득 등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양성과정으로 인해 보육교사 공급 과잉 및 일부 교육훈련과정과 지식, 역량이 부족한 교사 양성

- 3급은 최하 고졸 학력에 1년 양성과정 수료, 2급은 대학 졸업, 1급은 경력에 의한 승급
 - 2급 양성 대학은 전문대 이상으로 사이버 및 학점은행제 포함으로 대리수강 등 부실자격 취득, 다양한 학과 전공 및 대면수업 부족 등으로 보육교사의 정체성과 자질 형성 부족 우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8만여 명에게 지원하나 지원 수준 미흡, 대체인력 불충분 및 관리 체계 미흡으로 전문성 강화에 애로
- 교육비 지원 수준 미비로 인한 대규모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등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보수교육체계 미흡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4.30)으로 보수교육의 대면교육 강화
 - 교육 신청제 및 관리 미비로 교육이 전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수당 상향조정 등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노동 강도나 근로시간에 비하여 낮은 임금수준 등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우수인력의 현장 이탈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 야기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30만원, 0~2세 영아반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지급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나(제17조) 그간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배치 지원 미흡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두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영유아보육법 제17조)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보조교사 배치 권고
 - 담임교사 198,941명 대비 영아반 보조교사 2,247명, 누리과정 8,264명(주당 30시간 이상 4,623명, 30시간 미만 3,641명) 배치(보건복지부, 2015a)

- 대체교사 인력 연 500명 수준에 불과하여 수요 미충족
 - 보육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 시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 아이돌보미 인력 현황

○ 아이돌보미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

- 90시간의 교육 이수(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하고 활동 가능하며, 보육교육 이수(집합과정 20시간 격년, 개별과정 10시간 매년 이수) 필수
-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은 2014년 기준 38개소이고, 이중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 여성일력개발센터 14개소, 새일센터 5개소, 산학협력단과 YMCA 및 YWCA 4개소 등

○ 아이돌보미의 업무와 근로자성 변화

- 법 13조 6항 개정으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이용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에 변화
- 2013년 6월 고용노동부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9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4대 보험을 지급(고용보험법 제10조26)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를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27)

○ 아이돌보미는 파견 지정기관(2014년 213개소)과 파견 근로자 형태로 계약은 맺으나 사실상 특수고용 형태로 실적별로 급여를 받는 체계

- 시간제(6,000원/1시간, 기본단가), 종합형(7,800원/1시간), 영아종일제(6,000원/1시간), 보육교사형(7,200원/1시간)
- 2014년 시간제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활동시간은 95시간, 월평균 임금은 686,196원, 종일돌봄 아이돌보미는 월평균 167시간 활동에 인건비는 934,067원 수준(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 2014년 아이돌보미로 등록된 활동자 수는 17,008명이고 이중 12,000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나. 외국사례

- 영유아교사 통합이 이루어진 국가들의 경우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학력 수준의 상향 조정, 현장 실습의 강조 등 자격취득 조건 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경향(김은영 외, 2014)
 - 덴마크, 핀란드 등 교사 역할과 대상연령에 따라 학력기준 등 자격체계가 다른 국가 존재(OECD, 2013a)
 - 대체로 영유아 교사의 임금 수준은 낮고, 보육교사 급여가 유치원교사 급여보다 낮은 수준(OECD, 2015a)
 -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된 호주의 경우 부처와 평가 통합 이후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Australia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 보조인력 배치로 성인 1인당 아동 수를 낮추는 추세(OECD, 2015a)
- 외국의 가정내 보육(in home care)은 각국마다 배경과 특성 상이
 - 프랑스에서는 3세미만 연령대를 대상으로 개별 보육을 받도록 하고, 개별보육사를 등록·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Securite Sociale, 2015)
 - － 1인의 가정 내 고용자도 근로자로서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
 - 호주에서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시설보육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승인된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보육모 파견을 제도적으로 도입(서문희·이혜민(편), 2013)
 - 일본에서는 대기아동 해소 차원에서 아동의 집으로 보육모를 파견하는 형태의 재택보육을 정부와 비영리 영역에서 추진(日本 内閣部 新制度施行準備室, 2014)
 - － 이외에 영리 베이비시터도 시터회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
 - 영국에서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자율등록 대상으로 세액공제제도와 연계(Ofsted, 2015b)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보육교직원과 아이돌봄 인력의 자질을 질을 높여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양성 체계와 교직원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향후 교사 자격 기준 등 유보통합 시 대비

□ 주요 내용

○ 보육교직원 인력 관련

- 보육 수요에 변화에 따른 적정 공급 수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직원 양성을 위하여 보육교사 및 원장 자격 검정 체계 재설계 검토
 - 2급 보육교사 자격부여 시 자격 국가시험 실시(실시시기, 시험 관리 조직, 시험과목 및 횟수, 난이도 조절 등 준비 필요, 유보통합추진단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통합과 연계)
 - 3급 보육교사 보조교사로 직무 재정립(농어촌 지역 보육인력 수급 문제로 3급 교사의 직무 실질적 제한 가능성 확보 대책)
 - 교사-원감-원장으로 이어지는 보육인력 자격체계를 구축하여 원장 자격 취득경로를 교사 경력으로 단일화
 - 양성기관 입소 조건인 고졸 이상의 최저학력 기준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보육교직원 자격, 경력, 교육 및 이력 관리체계 구축으로 전문성 제고 및 유지 관리

- 보육교사 자격과 교육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자격, 경력에 맞는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수교육 명령제 도입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단기적으로 0~2세아 담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2015년 기준 월 17만원)를 단계적 인상 추진하여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과 동일한 수준 지급
 - 교사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격과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정비
- 3~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를 보조교사 채용에 사용토록 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영아반에도 유아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조교사 배치
 - 유아 누리과정 운영비로 보조교사 배치를 제도화
 - 영아반에도 2개반당 주당 2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교사 추가 배치 추진
- 대체교사 지원 확대를 통해 법정 연가 보장 및 보육서비스 공백 방지

○ 아이돌보미 인력 관련

-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형태로라도 고용하여 일정한 고정급 보장이 필요(근로자로서의 보호와 사회보장을 담보)
 - 사업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종일제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발전
 - 근로자로서의 최소 기준 급여 하한선(최소 60만원)을 정하고 그 수준만큼의 파견(주당 15시간)을 의무화하고 이외는 실적 중심으로 추가하는 급여 체계 마련
 - 서울시 보육반장제도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법 적용을 최소화
- 아이돌봄사업 기관에서 단순하게 가정과 아이돌보미 연계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사고용인 보호법 필요
 - 고용은 아이돌보미와 가정간의 계약을 통한 가사고용인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고용은 최소 한 달 단위 등으로 추진
 - 비용 지원은 이용자 보조금 지원 방식(바우처)으로 전환

8. 누리과정 확대 및 유보통합 추진

가. 배경 및 필요성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를 제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세수 부족 등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당면
- 누리과정이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소관 문제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법적 논란 지속

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교육 통합 추진 모형을 개발하고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2016년까지 부처 통합을 목표로 13개 요소별 통합방안을 모색 중
- 유·보통합 모형은 선개선-후통합의 단계적 통합을 지향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고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국무조정실·한국개발연구원, 2013)
 - 첫 단계로 정보통합 단계로 정보공시, 서비스 평가, 재무회계규칙 통합
 - 두 번째 단계로 운영 및 규제의 통합 단계로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와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시간(유치원 기본 3~5시간, 어린이집 기본 12시간) 조정, 가격규제, 비용 지원체계, 시설기준 정비, 교사자격 기준 체계적 정비
 - 세 번째 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에 대한 격차 해소, 주무부처 및 관련 법률을 통합, 정부재정 통합
- 2016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요소별 통합이 낮은 단계에서라도 추진된다는 전제에서, 이후 과제로 통합 요소별 통합 수준 정도 강화 방안 모색

다. 외국사례

- 선진 각국이 유아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최소 1년 이상 동안 무상 교육 실시(OECD, 2015a)
 - 영국의 경우 4, 5세아 주당 15시간 무상교육 실시
 -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취학 전 1년 예비초등학교 운영
- 유보통합은 OECD/UNESCO 등에서 인적자원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각국마다 그 양상이 다르고 통합 경로도 다양(국무조정실·한국개발연구원, 2013)
 - 기관과 부처 완전 통합 국가는 스웨덴으로 1968년 유아학교와 보육기관을 통합해 복지부로 일원화한 후, 1996년 교육부로 이관
 - 영국과 뉴질랜드는 교육부로 일원화했으나 다양한 형태의 기관을 유지한 채, 교육과정, 교사자격, 재원지원을 통합
 - 호주의 경우 연령 중복 이원화이나 교육부로 부처 통합하여 공통 교육보육 내용과 평가 적용
 -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0~2세 복지, 3~5 교육)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선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책임 수행을 강화
 - 모든 영유아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기관 간 정부 지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 해소
 -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초 제공

□ 주요 내용

○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추진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표준교육보육 비용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
 - 2016년부터 매년 2만원씩 올려서 2020년 32만원으로 조정(방과후 과정비 별도)
 - 만 5세아 기준 사립유치원 표준교육비는 2013년 기준 연 4,941,000원으로 산정되었고(서문희 외, 2013a), 2014년 기준 월 표준보육비는 50인 규모가 328,700원으로(서문희 외, 2013b) 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논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누리과정비 의무지출 지정 합의 및 관련 법 조항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정성 검토

○ 기 통합이 추진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소 통합의 수준 정도 향상

- 통합정보공시, 서비스 평가, 아이행복카드 등 통합이 이루어진 부분은 통합 수준 제고를 단계적으로 추진
- 재무회계, 운영시간 및 편성, 가격규제, 비용 지원체계, 설치 및 설비 기준 통합 수준 제고 단계적 추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양성체계 기준 일원화 및 기 자격취득자 일원화된 기준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수 추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격차 단계적 해소

9.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학(원)생 보육여건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학업중인 대학원생과 직업훈련 중인 사람들도 취업모와 유사한 보육서비스의 요구를 갖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이 없다가 최근 이들을 우

선순위 1순위자로 적용할 것을 발표

○ 2015년 5월 보건복지부는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생을 취업부모와 같은 우선순위를 부과

□ 대학원생들의 활동의 장은 대학이므로, 대학교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학업·연구활동과 육아의 양립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은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의 적용 대상에 포함 필요

○ 현재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적용자는 교·직원에 한정

나.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의 한 종료로서, 의무설치대상자가 모두 136개 학교이며, 그 중 26개 미이행 대학과 43개 수당지급 대학이 있음

○ 2015년부터 이행수단으로의 보육수당이 폐지됨(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최소 69개 대학에서 향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표 6-3> 학교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A=B+C)	이 행(B)				미이행(C)
		계	설치	위탁	수당	
학 교	136	110	47	20	43	26
	11.3%	80.9%	34.6%	14.7%	31.6%	19.1%

자료 : 보건복지부(2015b).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2015.4.29.일자 보도자료.

○ 대학의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의 주요 이유는 보육대상 아동의 부족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대학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도 효과

－ 어린이집 미설치 이유로 ‘보육대상 아동 부족’ 39%, ‘사업장 특성상’ 26.8%, 사업자 비용부담 24.4% 등이 조사됨(보건복지부, 2015b)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 존재
-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평균 52.8%, 국가기관 83.6%, 지자체 64.3%, 기업 47.8%, 학교 34.6% 등(보건복지부, 2015b)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단독 직장어린이집을 기준으로 7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무상지원으로는 시설전환비 3억원, 교재교구비 3천만원(교체비용) 또는 5천만원(신규설치)까지 지원⁴²⁾
 - 무상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최대 9억원 지원 가능(교재교구비 별도), 시설 전환비는 소요비용의 80%, 교재교구비는 소요비용의 60~80%
 - 공동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은 별도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운영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⁴³⁾
 - 보육교사, 보육교시설의 장 및 취사부 1인당 월 800,000원, 2014년 1월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월 1,200,000원 지원(보육현원 20명 이상에 한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0만원(1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520만원(100인 이상 어린이집) 추가 지원

다. 외국사례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캠퍼스 내에 만 8주에서 만 8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유아교육·아동보육센터 보유⁴⁴⁾

42) 근로복지공단. '여성고용 촉진시설지원'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용자' 안내
https://www.kcomwel.or.kr/empl/wome/loan_idx02.jsp

43)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4&smenu=3>

44) Stanford University, On-Site Child Care. <https://cardinalatwork.stanford.edu/>

- 5개는 종일제로 운영 중이고 3개는 파트타임으로 이용 가능
-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과 센터마다 다른데, 주 5일 종일 보육서비스 기준으로 만8주 아동은 월 \$2,039이상, 만5세의 아동은 \$1,473 이상
-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이 있으며, 보육료 보조는 교직원에게만 지원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Auckland) 캠퍼스 내에 6개의 보육센터 보유⁴⁵⁾
 - 만 3개월부터 만 5세까지 이용할 수 있음.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센터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의 아동들도 이용 가능
 -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에 따라 상이
 - 5일 종일보육을 기준으로 1주당 비용은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학생 자녀는 \$221, 교직원 자녀는 \$297, 지역주민 자녀는 \$330임
 - 만 3~5세 아동의 경우 학생 자녀는 \$109, 교직원 자녀는 \$171, 지역주민 자녀는 \$216임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대학(원)생들의 학업과 육아의 병행 지원

□ 주요 내용

- 대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설치 미이행 및 수당지급 대학에 정책 홍보와 어린이집 설치 장려
 - 2016년부터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 이행강

45) University of Auckland, Early childhood centres. <https://www.auckland.ac.nz/en/>

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제44조의2, 제44조의3)

○ 대학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지원

- 이용아동대상자가 많지 않은 대학은 장기무상임대, 지역사회 아동 이용을 조건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예로 서울신학대학교는 캠퍼스 내 건물을 장기무상임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중. 교직원 자녀 이용 비율을 제한

○ 대학이 어린이집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운영비 일부 지원

- 2015년 4월부터 국가·지자체·대학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주된 근로자가 아닌 주체가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단체에 참여 가능(고용노동부 예규 제87호)
- 위 경우는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참여에 제한되므로, 이외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에 타 재원으로 설치비 융자 또는 운영비 재정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 대학원생을 대학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자로 개방

- 대학원생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교직원 다음으로 대학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시간제보육 특성화

- 대학(원)생들은 직장인들처럼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및 연구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시간제’어린이집을 신청, 일정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원)생들 이용 지원
-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임

-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중 일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

<표 6-4> 2015년 시간제보육료 지원기준

구분	보육료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기타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주: 2015년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d), 2015 복지사업안내, p. 254.

○ 양질의 보육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형’ 어린이집 설치 장려

- 대학의 특성상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구형 어린이집 참여를 장려하여, 대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동시에 보육서비스 모델 개발에 기여
-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구형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연구형어린이집 설치 계획

제3절 돌봄 지원 체계 확충

1. 방과후 돌봄 지원 체계 강화

1-1.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질 제고 및 대폭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초등 1~2학년들이 희망하는 학생 대상 돌봄교실 확대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 악화 및 학교현장 어려움 등 문제 발생

- 이에 2015년부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대상 내
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방향을 재정립

- 다만, 취학 이후에도 보육의 역할이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는 초등 1~2학년 대상
돌봄교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

- 이에 국고 지원을 통한 시설 및 인력확충을 전제로 초등 1~2학년 돌봄참여 회
망학생을 연차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초등 1~2학년 돌봄교실 확충에 대한 학부모 의견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이 아닌 경우 취학 이후에도 보육의 역할이 지속
강화될 필요가 있는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여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 필요

- 학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학교
가 기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필요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국고 지원을 통한 시설 및 인력확충에 따라 초등 1~2학년 희망하는 학생 수용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학년 이상)를 운영하여 돌봄수요 충족

- 질 높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참여 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1~2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확충 여건 조성

- 돌봄기능 강화·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형성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부모 신뢰도가 높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돌봄교실 확충 추진 필요
- 겸용교실 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교실로 개선 및 희망하는 학생 추가 수용을 위한 신규 교사(校舍) 확충
- 학교현장에서 돌봄교실을 확보할 유휴교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병설 유치원의 시설과 유사한 돌봄교실 전용 교사(校舍) 확충
- 전문성을 갖춘 돌봄교실 전담인력 확충
-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시간제 전담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기존 겸용교실에 근무하던 시간제 전담사의 무기직 전환, 신규 구축시설에 대해서는 무기직 채용

○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질 관리

-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위한 놀이중심의 무상프로그램 운영 강화
 - 저학년의 경우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규교육과정 이후 과도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로감을 갖지 않도록 구성
- 대학생, 학부모, 퇴직교원, 기업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에 대한 교육기부 활성화
- 지역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돌봄서비스 기관의 학교내 운영 허용 등 활성화
-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교육활동 및 돌봄활동)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4~6학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계층,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문체험,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2.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로 분절적·단편적인 돌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돌봄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 미흡 및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초등돌봄교실(교육부)

- 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돌봄수요의 충족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고
- 2014년 초등 1~2학년 희망하는 모든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5,938교, 10,966교실, 약 22만 1천명 참여)
- 초등돌봄교실이 대폭 활성화되어 증가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임

○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습·정서·급식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
- 18세 미만의 맞벌이 가정 등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저소득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4,061개소, 약 10만 9천명 이용)
- 2004년 이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질 제고에 따라 이용아동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

○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파산자, 차상위계층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이 이용(250개소, 약 10,000명 이용)
- 2005년 시범 실시 후 2006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한 종합적 방과후서비스를 지원

나. 외국사례

□ 미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 시간대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after school program)을 집중적으로 제공
- 방과후학교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체계는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와 방과후학교 연맹(After School Alliance)⁴⁶⁾, 위스콘신주의 방과후학교 네트워크(WAN) 등(변종임 외, 2009)

□ 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지침(Swedish Education Act)이 있고, 국가적 수준에서 분리된 교육청이 있음
- 방과후 돌봄서비스로 교육법에 근거한 방과후활동(Care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취학 및 취학 아동 보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공교육에서의 돌봄(Public Child Care)'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12세까지 돌봄활동을 국가가 책임(1998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충북교육청, 2008)

□ 핀란드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 모든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
- 1~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활동이 참여하고, 3~6학년 학생들은 주로 학교 밖 문화센터, 스포츠클럽, NGO 등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이용

46) www.afterschoolalliance.org

-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방과후학교의 지원체계의 주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충북교육청, 2008)

□ 일본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 일본의 방과후학교는 교육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문부과학성이 ‘방과후어린이플랜’이라는 명칭으로, 후생노동성이 ‘방과후아동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연계하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양애경, 2011)
- 방과후 활동은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에 나타나는 활동은 아니지만, 5일제 수업제 속에서 교육과정 외의 중요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여가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협동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출발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 대상 지역돌봄기관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의 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전담 실행기관 가칭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센터’에서 예산 관리 및 조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

여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하위분과를 신설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의 방과후 돌봄 인력의 임금, 강사로 단가, 교육 및 연수 내용 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을 하나의 통합 예산으로 운용하고, 돌봄정책협의회의 주관부처인 교육부를 예산운영 부처로 지정하고, 가칭 ‘방과후돌봄지원기금’을 설치·운용
- 통합예산의 주관기관으로 교육지원청과 시군구를 지정하고, 실제 예산의 운용은 가칭 ‘방과후돌봄운영협의회’에서 협의·결정
- 방과후돌봄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지자체 조례 마련
-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행기관으로 가칭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센터’ 설치·운영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연령별 특성화

- 방과후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연령별 특성화 서비스 제공
- 초등학교 1~2학년생은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교 3~6학년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중학생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

○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 단기적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만의 독자적인 DB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부의 NEIS 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통합 DB를 구축·활용
- 포털시스템 활용, 방과후돌봄서비스 리플렛 제작 홍보

○ 방과후 돌봄서비스 포털서비스 DB 구축

- 방과후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안내, 지역 내 방과후 돌봄기관의 정원과 현원, 수요조사 결과와 공급 현황, 운영 현황, 인력, 만족도 조사 등 포함

○ 이용자 지원방식의 도입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구매력을 높여주는 이용권(voucher) 제도를 도입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가구소득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유도

2. 출퇴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가.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맞벌이 부모, 한부모 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위해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
 -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이용 접근성, 이용 요금, 연간 정부지원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은 소득유형에 따라 차이가 큼
- 따라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은 2010년 6,535개소에서 2014년 8,644개소, 이용 아동수도 2010년 31,371명에서 2014년 41,655명으로 증가 추세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유치원 방과후과정(교육과정 이후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 운영률은 2010년 98.1%에서 2014년 97.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용률은 54.8%에서 67.5%로 증가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의하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제서비스 이용 가구수가 2010년 27,339가구에서 2014년 49,989가구로 증가
 - 이용자 중 맞벌이 가정은 2014년 기준 55.2%, 한부모 가정은 13.5%

□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하원 시간과 부모 출퇴근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양육 공백 발생

○ 맞벌이 부모 중 일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혈연·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등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영유아 중 32.7%는 모의 출근시간이 등원시간보다 이르고, 49.2%는 모의 퇴근시간보다 영유아 자녀의 하원이 빠름

〈표 6-5〉 모의 퇴근시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모의 퇴근시간								전체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14:00까지	1.7	3.9	—	—	—	2.9	9.1	—	1.7
14:01~15:00	16.9	1.0	2.9	4.4	7.6	4.4	—	12.5	5.1
15:01~16:00	33.9	18.4	10.9	10.5	12.1	7.4	18.2	33.3	15.4
16:01~17:00	33.9	53.4	23.9	13.2	33.3	30.9	30.3	8.3	29.4
17:01~17:30	5.1	10.7	16.7	11.4	13.6	2.9	6.1	8.3	10.7
17:31~18:00	6.8	5.8	34.1	16.7	1.5	16.2	21.2	25.0	16.7
18:01~19:00	—	5.8	10.9	43.9	24.2	17.6	3.0	8.3	16.9
19:01이후	1.7	1.0	0.7	—	7.6	17.6	12.1	4.2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	(26)	(31)	(72)	(39)	(83)	(194)	(117)	(590)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발간예정). (원자료: 서문희 외, 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표 6-6〉 모의 퇴근시간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시간

단위: %(명)

구분	모의 퇴근시간								전체
	14:00 까지	14:01~ 15:00	15:01~ 16:00	16:01~ 17:00	17:01~ 17:30	17:31~ 18:00	18:01~ 19:00	19:01 이후	
14:00까지	—	—	1.5	2.3	—	6.1	3.0	—	1.9
14:01~15:00	28.1	9.1	6.1	6.8	22.0	16.3	3.0	7.7	12.1
15:01~16:00	21.9	36.4	18.2	11.4	14.6	12.2	15.2	30.8	18.9
16:01~17:00	31.3	31.8	30.3	47.7	19.5	32.7	42.4	15.4	32.6
17:01~17:30	12.5	11.4	6.1	4.5	19.5	10.2	12.1	15.4	10.6
17:31~18:00	6.3	6.8	22.7	11.4	14.6	14.3	12.1	—	13.0
18:01~19:00	—	4.5	15.2	15.9	2.4	4.1	6.1	30.8	8.7
19:01이후	—	—	—	—	7.3	4.1	6.1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8)	(11)	(16)	(30)	(14)	(39)	(73)	(72)	(273)

자료: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발간예정). (원자료: 서문희 외, 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 영유아는 35.1%에 달하며, 이중 약 35%는 부모 출근 후부터 어린이집 등원 전까지, 또는 하원 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개인양육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이용(양미선 외, 2014)
-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

○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지원현황(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 서비스 제공기관은 2009년 203개소에서 2013년 216개소까지 늘어나다가 2014년 213개소로 감소
-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2011년 53,827명에서 2013년 70,994명, 2014년 75,62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시간대별 이용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녁(17:00~21:00) 시간대가 높고, 다음으로 오후(12:00~17:00), 오전(08:00~12:00) 순
- 오전 시간대는 2008년 2.9%에서 2014년 17.6%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저녁·심야 시간대는 2008년 43.9%에서 2014년 36.7%로 일부 감소

○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

-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이용 접근성, 이용 요금, 연간 정부지원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은 소득유형에 따라 차이가 큼
- 소득유형에 따른 항목별 만족도 차이를 보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한 이용 접근성은 가형이 5점 만점에 4.3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형 4.19점, 라형 4.16점, 나형 4.14점 순
 - 이용요금은 가형 4.31점, 라형 3.84점, 나형 3.72점, 다형 3.57점 순으로 가형이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연간 정부지원시간 또한 가형이 3.38점, 나형 3.31점, 라형 3.18점, 다형 2.89점 순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맞벌이 부모,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에 대응
-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취업 한부모 가구의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
- 영유아 취업모의 고용 유지 및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을 증진

□ 주요 내용

- 맞벌이 부모 등이 출퇴근 시간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
 - 서울, 경기 등 맞벌이 가구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확대
 - 출·퇴근시간대에 활동이 가능한 시간제돌보미를 확보하여 집중 배치
- 시간제돌보미 확보 위해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
 - 1인당 월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시간당 활동수당(2015년 기준, 시간당 6천 원)을 인상
 - 2014년 기준 시간제돌보미 월평균 활동시간은 95시간, 임금은 평균 68,619원
- 저소득 실 수요층의 이용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별 본인부담 비율을 합리화하고 정부지원시간을 확대
 - ‘나’형과 ‘다’형 본인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층의 이용 유도
 - 본인부담 비율 가형(50% 이하) 25%, 나형(50~70% 이하) 55%, 다형(70~100% 이하) 75%, 라형(100% 초과) 100%
 - 정부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정부지원시간을 차등 지원

-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률 증대를 위한 실수요층 대상의 홍보를 강화
 -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종합지원센터, e-유치원, 시도교육청 등의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3. 아이돌봄 서비스 표준화·인력관리 등 민간시장 질 관리

가.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 욕구 증대로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 꾸준히 발생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자격 및 운영기준을 제도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민간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질 확보 곤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또는 베이비시터)는 돌봄서비스만 제공하기보다 가사도우미를 병행하는 형태가 많아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박지순 외, 2011)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기준 및 인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서비스의 질 확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국민권익위원회, 2013), 민간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자격관리 조항 신설 등 인력 관리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중

나. 현황 및 문제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시장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일반 계층 및 맞벌이가정은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친인척 또는 민간서비스에 의존
 - 비영리단체(예:사)한가연 아가야, YMCA아가야 등), 직업소개업체 등을 중

심으로 민간 서비스 시장이 확대

-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업체,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자료가 부재
 - 2013년 6월말 기준 전국 9,290개 유·무료 아이돌보미 소개업체 운영 파악
- 민간 돌봄서비스 소개업체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업체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후 소개업을 영위해야 하나 미등록자가 상당수 차지하여 민간시장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

□ 민간 돌봄 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 달리, 민간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질 확보에 어려움 발생
 - 아이돌봄지원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아이돌보미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돌봄서비스는 동법에서 제외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는 운영주체, 제공자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범위, 제공 방식, 품질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 존재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또는 베이비시터)는 돌봄서비스만 제공하기보다 가사도우미를 병행하는 형태가 많아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
 - 비영리단체의 경우, 돌봄서비스 운영기준 및 교육체계 등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임
 - 한국 YMC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연계하여 온라인 베이비시터 양성 과정을 운영

다. 외국사례

□ 영국

- 가정보육모(childminder), 내니 및 오페어(Au Pair) 등의 민간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김소영 외, 2013)

-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베이비시터, 내니 등)은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자율 등록하여 관리
- 교육기준청(Ofsted) 등록 시 공공책임보험 보육, 소아응급처치 자격증 보유, 아동보육과 관련된 일에 적합한 핵심기술과 지식,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없음 등을 증명

□ 홍콩

- 필리핀 가사도우미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제도화(김동호 외, 2015)
- 정부가 매년 베이비시터의 최저임금과 식비, 숙박, 휴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외국인 가사도우미 직업훈련은 NGO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정부가 재교에 필요한 재원과 훈련수당을 지원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정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및 운영방식 관리·감독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계층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
-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로 가정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주요 내용

-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
- 민간 아이돌보미의 質 제고를 위한 민간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

-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적용하거나 공공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표준교육과정을 별도 개발하고, 가정 내 고용된 외국인 아이돌보미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
 - 아이돌보미 교육시간은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이고,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 단계별 이해 및 지도방법, 실습 등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됨⁴⁷⁾
- 서비스 제공기관(공공, 민간)에 관계없이 유사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일 수준의 아이돌보미 자격체계를 마련함
 - 민간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거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업체 및 돌보미 등록 또는 신고제를 운영함
 - 아이돌보미의 건강 및 신원 등 기본정보 관리, 자격유지 적격요건 판정,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등), 외국인 불법체류 여부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업체 및 돌보미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관리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양성화함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함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가 공공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보미 선발 및 교육, 서비스 범위, 품질관리, 표준 단가 등의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함

4.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개방형 공간운영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아파트내에 놀이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엄마와 아기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설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

4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com.go.kr>

○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 비오는 날 등은 실외놀이터 이용이 제한적이며 실내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음

– 키즈카페나 베이비카페 등은 이런 수요를 반영한 상업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핵가족 하에서 부모가 육아부담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엄마가 육아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내 공간을 설치하여 전업주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필요 있음

○ 육아나눔터에서 이웃과 더불어 육아부담을 나누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육아정보의 공유, 쉼터 기능 등을 할 수 있게 됨

○ 이웃과 더불어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조성되고 아파트단지내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분양을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실내놀이터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퇴계원 힐스테이트, 광진구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등)

○ 아파트에 설치되는 주민공유시설이 종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임(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동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설치규정은 있지만 이는 실외놀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취학 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아파트에 설치된 ‘아이두레터’는 미취학아동들이 보호자와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육아세대를 위한 쉼터기능을 하는 곳임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용시설로 육아세대를 위한 육아나눔터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육아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 공간을 통해 이웃과 육아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함
- 핵가족 생활 속에서 젊은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공동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주요 내용

-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용시설로 육아세대를 위한 육아나눔터 공간 설치를 장려
 - 신규분양아파트에는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육아나눔터 공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아파트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경우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설치를 권장
- 아파트 내에 주민공유시설의 종류에 육아나눔터를 추가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 육아나눔터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호자와 자녀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임. 엄마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 이용
 - 공간이 조성되고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아기체조, 만들기, 음악 등)의 운영도 가능하며 이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육아나눔터의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차원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함

□ 제도 개선 사항

- 육아나눔터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새로운 시설이므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법적 설치기준 필요
 - 육아나눔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별도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 설치면적기준, 소방안전기준, 피난기준 등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제 7 장

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 제1절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 제2절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 제3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7

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을 위한 < 실천과제 <

제1절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1. 근로자의 이용권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의 불안정성(근로관계의 종료)에 기인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 존재
- 현행 제도 하에서도 근로자가 휴가·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보완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권 강화

□ 주요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때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이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재원은 건강보험이나 조세로 이관하고, 급여 수급 대상을 자영자와 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
- 건강보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 고용관계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근로자에

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에 관한 안내 서비스를 시기에 맞게 제공

2. 기업의 수용성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서 지속
-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관행과 문화 때문
-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낮고 대체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휴가·휴직 사용률이 대기업보다 낮은 실정
- 2014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언제든지 마음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응답한 비율 ▲(300인 이상) 63.1% ▲(100~299인) 55.2% ▲(10~99인) 44.0% ▲(5~9인) 42.6% (김영옥 외, 2014a)

<표 7-1> 기업규모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현황, 2014

(단위: %)

사업장 규모	여성피보험자 대비 출산휴가자 비율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출산 후 1년 이내 사용) 비율	남성피보험자 대비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10인 미만	1.2	53.9	0.03
10인~29인	1.5	54.7	0.03
30인~99인	1.5	56.8	0.03
100인~299인	2.0	66.0	0.04
300인 이상	3.0	84.8	0.09

자료: 김영옥 외(2014a).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큰 편 (김영옥 외, 2014a)

<표 7-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자 비중

(단위: 명, %)

구분	남 성		여 성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2011년	835 (59.6%)	567 (40.4%)	30,553 (53.9%)	26,181 (46.1%)
2012년	937 (52.3%)	853 (47.7%)	32,607 (52.4%)	29,663 (47.6%)
2013년	1,090 (47.5%)	1,203 (52.5%)	34,582 (51.4%)	32,726 (48.6%)
2014년	1,604 (46.9%)	1,817 (53.1%)	38,062 (51.9%)	35,345 (48.1%)

자료: 김영옥 외(2014a).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 업종·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주요 내용

- 사업장별 최초 육아휴직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 남성,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최초 육아휴직 사용자를 우대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취약 업종·지역·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배정

3. 장시간 근로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장시간 근로 국가에 해당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5년 2,341시간, 2010년 2,120시간, 2011년 2,111시간, 2012년 2,092시간, 2013년 2,071시간, 2014년 2,057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OECD Stat.)
-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OECD 중 28위)
 - 시간당 생산성(2012년 기준): 한국(30.4\$), 미국(65.1\$), 일본(40.3\$), 독일(59.2\$), OECD 평균(46.6\$)(호경업, 2015)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장시간근로개선 여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나. 정책방안

- 과제 목표
 - 2020년까지 연간 실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추진
- 주요 내용
 -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제도 개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고려
 - (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개선, 임금직무체계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4.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가. 배경 및 필요성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필요
 -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지배적으로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
- 임금체계 개편 없이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억제 및 명예퇴직 등 증가 우려
 - 100인 이상 호봉제 임금체계 비중 68.3%(고용노동부, 2014)
- 고령사회(2017년), 초고령 사회(2026년) 진입 예상, 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연 공급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장기 근속자의 임금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

나. 정책방안

- 과제 목표
 -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개편
 - － 컨설팅 및 발굴을 통해 연공성을 완화한 사업장 증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 조성
- 주요 내용
 -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통해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 노·사, 전문가 및 국민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
 - － 일반 국민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 내용을 지속 홍보

-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례집 발간, 카드뉴스 및 기획기사 게재
- 중점관리사업장 지정·운영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지원 실시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임금 실무 연구회 등 민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 마련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감대 확산 체계 마련

□ 추진 시 고려사항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간 이해 대립, 장기화될 경우 임금체계 개편에 어려움 발생할 가능성
 - 사업장별 임금체계·수준, 노사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각 부처 산하공공기관의 선도기관 선정 및 도입 지원
 - 지속적 선도기관 관리, 공공기관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진행상황 관리

5. 공공부문 정시퇴근 문화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초과근무수당을 보수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불필요한 대기성·관행적 초과 근무 야기
- (인식실태) 2012년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일반직의 29.6%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의 원인으로는 74.3%가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인사혁신처, 2013)

나. 정책방안

□ 과제 목표

- 대기성·관행적 초과근무를 줄이고, 근무시간 중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주요 내용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 직전 3년 평균 실적 기준으로 부처 연간 초과근무 총량 설정, 일정 수준(10~30%) 유보하여 과별 배분하고, 동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 관리
 - 초과근무시간 부족 시 유보분(10%) 범위 내 추가 배분(연 1회)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2014년 시범기관⁴⁸⁾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분석 및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분석 후 추가 확대 등 검토
-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확인(반기)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분석

6.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6-1. 기업관리자 대상 일-가정양립교육 제도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인 직장문화로 인해 여전히 사용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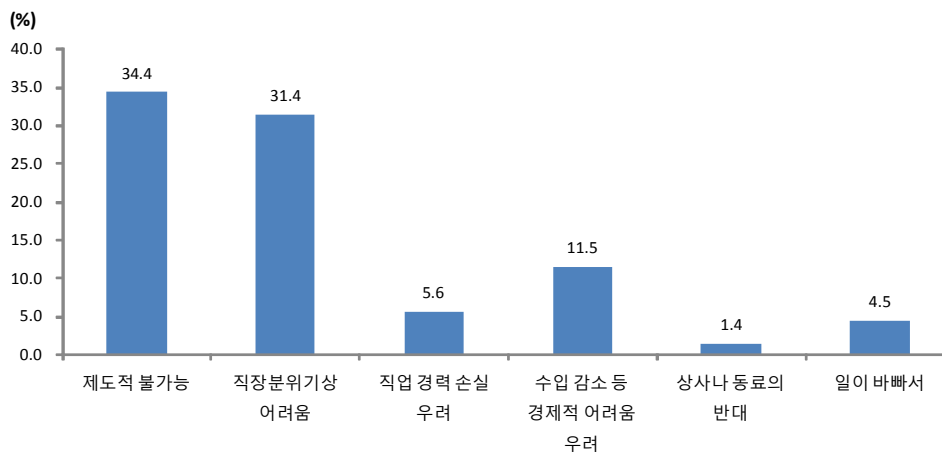
48) 舊 안행부(~11.18일)/고용부·여가부·관세청·보훈처(본부)

-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과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수적
 - 이를 위해 기업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업 내 지지자로서의 역할 강조 중요
 -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해 증진 및 기업의 조치 강조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조직 내 제도사용의 어려움, 직장문화를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홍승아 외, 2014b: 68)
 -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서’(34.4%)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직장 분위기상 어려워서’(31.4%)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
 - 다음으로 ‘수입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려되어’(11.5%), ‘직업경력에 손실이 될까봐’(5.6%) 등의 순

[그림 7-1]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미이용 사유, 2014



자료 : 홍승아 외(2014b),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p.68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기업의 일가정양립 수용 문화 확산
- 기업 중간관리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태도 변화를 통한 기업문화 변화
-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의 원활한 지원

□ 주요 내용

- 중간관리자 대상 성평등한 일가정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중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제도 이용을 지도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에 대한 성평등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제도이용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이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인력관리 등 기업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일가정양립 교육 제도화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법’을 개정하여 기업 임직원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 교육실적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점검하며, 사업체 근로감독 시 제도의 이행실적과 더불어 교육실적을 감독·관리

6-2. 1社-1프로그램 실천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매우 중요

- 이와 관련,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업 특성 및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

나. 외국사례

□ 영국 사례(홍승아 외, 2014a: 77~80)

- 영국의 프라임 타이머스(Prime Timers)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시 일주일을 각각 2.5일씩 근무할 수 있는 2명의 지원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나누기 프로그램을 실천
 - 특히 일자리나누기는 소규모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
- 영국의 PI Costing에서는 직원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시도함으로써 직원채용 문제 해결
 - 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해서 집에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방식을 변화
 - 재택근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20% 이상의 효율성 제고
- 영국의 BT 글로벌 파트너즈에서는 고위간부급 인사채용 시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유치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간 근무방식으로 일하며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끄고 가족과 업무외적인 관심사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기업 특성에 따른 일가정양립 실천문화 확산
- 기업별 일가정양립 사례 발굴을 통한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기업의 일가정양립 참여 및 실천율 제고

□ 주요 내용

○ 1사-1프로그램 일가정양립 실천문화 확산

- 기업별로 기업환경 및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욕구는 다를 것이므로 기업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천하도록 유도

○ 기업별 일가정양립 문화 사례집 제작

- 기업별 일가정양립 문화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타기업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별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 및 확산 캠페인

- 기업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을 노력하도록 유도

6-3. 공공부문 선도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가. 배경 및 필요성

- 일가정양립을 실천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중요

○ 이를 통해 일가정양립 직장문화의 모델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 확산
- 민간부문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의 모범사례 제시

□ 주요 내용

- 공공기관에서의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실태를 제시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제도의 시행과 문화 조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대중매체나 리플렛의 형태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과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
-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제도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활용)
 - 현재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있는 내용 외 평가지표에 향후 보다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 지표를 보다 확대 편성하고 평가 강화(예, 유연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결과를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로 활용
- 정부 업무보고 자료에 일가정양립 문화 및 제도 관련 정보 공개
 -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정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일가정양립 문화 및 제도 관련 정보 작성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

6-4. 공공부문 전 사업장 가족친화기업 인증 의무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경영확산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
 - 사회인식 제고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착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444개소만 참여하여 여전히 참여 확대 필요
 -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하여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표 7-3>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누적계	1,363	258	702	403
2008	9	3	0	6
2009	14	5	3	6
2010	23	7	6	10
2011	86	24	22	40
2012	101	23	29	49
2013	279	84	111	84
2014	444	77	257	110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http://ffm.mogef.go.kr> 에서 2015.10.1 인출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확산을 통한 공공기관 등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 확산
- 민간부문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의 모범사례 제시

□ 주요 내용

- 가족친화제도 시행 확산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의무화
 - 가족친화제도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중요한 요건은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증의무화를 적용시켜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강조
 - 기업 참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제도 기준 개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반영
 -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 중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소개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직원교육 프로그램에 가족친화인증제도 교육내용을 포함
-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직원 등 대상별 교육 및 안내 확대
-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통하여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족친화인증제도 위상 제고 및 홍보 강화

-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기관)의 홍보 및 인력 채용과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위상 제고 및 제도 인지율 제고

제2절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1. 중소기업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수요가 발생하게 됨
- 대체인력의 특성이 육아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서 비롯되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수요가 모든 조건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육아휴직을 발생시키는 기관의 다양한 조건들이 대체인력의 수요에 차별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기관 특성과 각 기관에서의 육아휴직자가 갖는 업무의 특성 그리고 육아휴직자 직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대체인력을 구인하고 또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측면에서도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인력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체인력은 대부분 사업체가 구인공고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서 부담이 큼
 - 육아휴직자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도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지원이 육아휴직률을 따라가지 못한 실정
 - 육아휴직자는 2011년 58,138명, 2013년 69,616명, 2014년 76,833명 등으로 증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 지원 비율은 2011년 4.4%, 2013년 5.3%, 2014년 6.6%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정부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단위 고용센터 등을 통해 직종별 인력풀을 구축·운영하여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필요
 - 대체인력자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기존 업무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필요
 - 「대체인력뱅크」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휴직자를 대체할 적합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노동시장에서의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에 따른 대체인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인력규모가 크지 않아 육아휴직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운영에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주요 내용

- 중앙인력뱅크 운영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수도권에 설치하고, 지역별 대체인력뱅크제 구축
 - 2014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전국적 기업수요 발굴,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대체인력 충원 서비스 강화
 - 종합대체인력뱅크와 지역대체인력뱅크를 구분하여 종합대체인력뱅크는 수도권에 1개소를 두고, 지역대체인력뱅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업지원사업과 모성보호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운영
- (대체인력 수요처 발굴) 운영기관 회원사 DB, 사업주단체, 직종·지역별 협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대체인력수요 파악
 -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수요 파악
 - 대체인력운영기관이 사업주단체 및 산업별, 지역별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대체인력 수요처 발굴
- (대체인력자 직무역량교육) 대체근로 희망 구직자 풀을 구성하여 직장적응, 직무감각 회복 및 대체직무 전문교육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대체인력 풀에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뱅크 등록 자격기준을 제시한 후 자격기준에 달한 구직자만 등록
 - ‘일반 사무회계직무’와 ‘자격증 필요직무’ 등 직무를 구분하여 풀을 구축하여 운영
 - ‘일반사무회계 직무’는 지역별로 모집, 교육, 관리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새롭게 구성에 대체인력을 적시에 연계
 - 대체인력자 자격기준에 달하는 구직자에 대해 각종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수급자격을 부여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체인력자의 직무역량 강화
- 워크넷 전산망을 사용하는 전국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

로일하기 센터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확대

- 전국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에 대체인력뱅크제 홍보

2.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지원기금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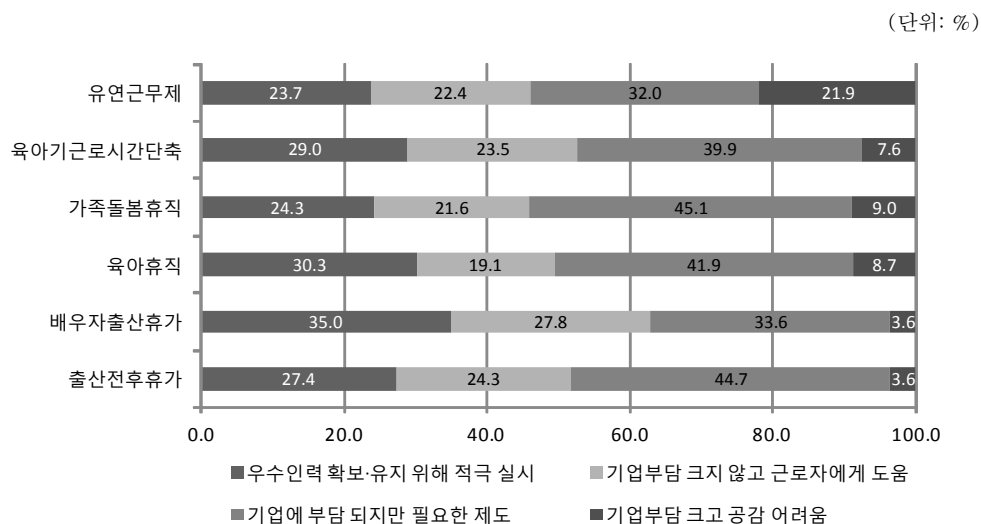
가.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참여하거나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곤란
-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컨설팅이 동시에 제공 필요
- 재정지원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제 등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기업의 50%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위 6개 제도 중 유연근무제도를 제외한 5개 제도에 대해 ‘기업에 부담되지만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여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
 - 반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정도에 불과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에 비해 제도의 적극적 실시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그림 7-2]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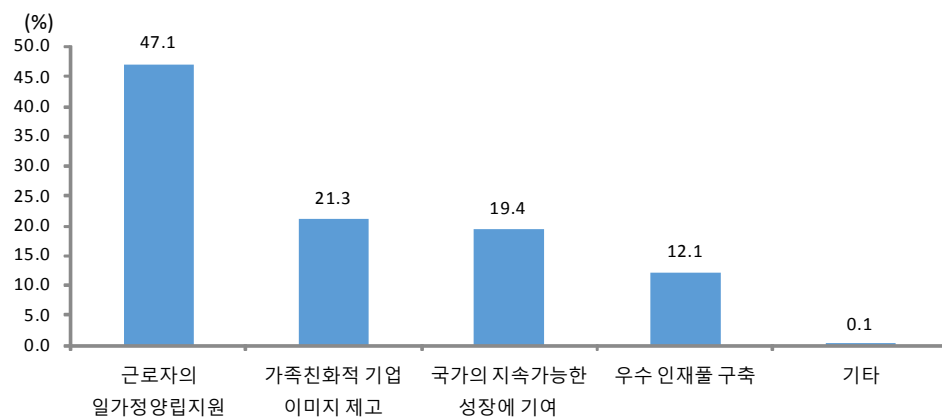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4).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일·가정 양립제도의 운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 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19.4%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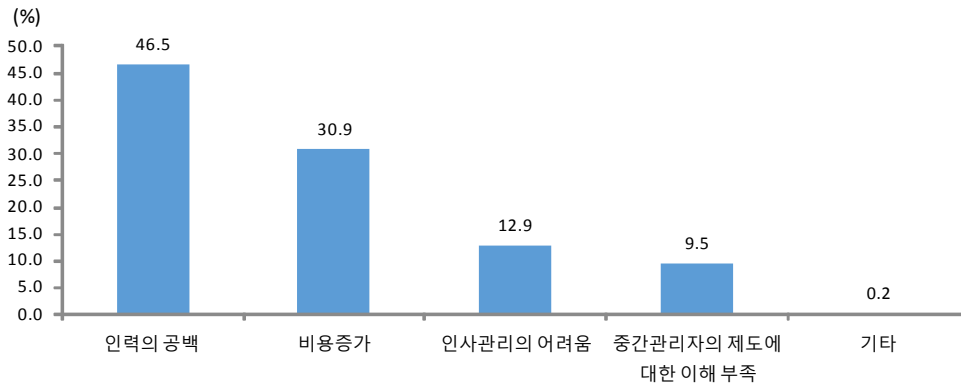
[그림 7-3] 기업이 인식하는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긍정적 효과, 2013



자료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10).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기업들이 지적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력의 공백’이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급여 및 대체인력 등 비용 증가’ 30.9%, ‘인사 관리의 어려움’ 12.9% 순

[그림 7-4] 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의 어려움, 2013



주: 비용증가는 급여지급,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11).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요인은 비용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지는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실제 실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홍승아 외, 2012: 140)

<표 7-4> 기업규모별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기업 규모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10인 미만	5.6	17.3
10-30인 미만	13.9	30.7
30-100인 미만	42.8	51.0
100-300인 미만	68.7	71.0
300인 이상	88.2	90.2

자료: 김영옥 외(2013),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p. 44, 52.

다. 외국사례

- 외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제도의 초기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
- 영국 “The Partnership Fund”, “The Challenge Fund”
 - 영국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시행이 어떠한 혜택과 편익을 줄 수 있는지를 홍보하고 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기금 프로젝트를 진행
 - 주요한 성과(Nelson.et.al. 2004; 홍승아 외, 2012: 141에서 재인용)
 - － 기업들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정책의 혜택과 편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 － 참여기업의 일·가정 양립정책 도입과 시행
 - － 기업내 조직문화의 개선, 지속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이 가능한 문화의 확산
 - － 제도의 시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록과 자녀양육 지원, 근로자 상담 등을 지원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일·가정 양립 기금(가칭)’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행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활성화
- 주요 내용
 - ‘일·가정 양립 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취지) 일·가정 양립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일·가정 양립제도 경영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후 일가정양립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확산

- (관련 법률 개정) 중소기업 대상 일가정양립기금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관련법 제·개정
- (기금 조성) 다양한 방법 검토 후 확정
 - 중진기금 내 일가정양립 계정 신설 방안
 - 영국과 같이 기업지원과 정부지원의 혼합 형태로 하는 방안
 - 독일과 같이 공익재단, 유럽연합 사회기금, 독일 상공회의소, 연방사용자 협회 등 사용자 단체와 독일기술자중앙협회, 독일노동조합연합회 등 근로자 단체가 함께 조달하는 방안 등 검토
- (시행)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근로자 구성 및 기업 특성상 일가정양립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선정
 - 기업 컨설팅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제도 파악
 - 기업 컨설팅과 연계하여 기업별 필요로 하는 제도 특성과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 (평가) 기금지원 및 제도시행 이후의 기업의 변화와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금제도의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확대

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전형적인 M자형 패턴의 우리나라 여성경제참가율 제고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특히, 영유아를 둔 중산층 취업모에 대한 자녀 보육지원이 필수

- 중산층 취업모의 경우 미취학자녀 여부가 여성경제활동 참여에 주된 변수(여유진 외, 2013: 178)
- 우리나라 중산층 기혼여성 취업모의 95.6%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시급
- 취업 기혼여성의 95.6%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 4.4%만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나. 현황 및 문제점

-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 등 자녀보육 지원정책은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으나, 실수요자인 중산층 취업모의 이용에는 실효성 미흡
-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계층에 우선 이용을 배려하고, 평균 10.6개월 대기(유해미 외, 2014: 89), 아이돌봄서비스 등 월평균 대기는 종일제 552가구(여성가족부, 2014: 4)
- 취업모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6%인 692개소(2014년 말 기준)이며, 이중 중소기업(537만개소)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은 89개소에 불과(직장보육지원센터 내부자료)
- 대기업 의무사업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보육수당 금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가 예상되나, 중소기업은 기존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만으로는 확충 한계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90%, 15억 한도) 및 운영비 등 지원
 -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2012년 2개소에서 2013년 10개소, 2014년 20개소로 증가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부담 해소 및 일·가정 양립지원
- 영유아 자녀를 둔 중산층 취업모에 대한 보육지원으로 여성고용을 및 출산을 제고

□ 주요 내용

- 다양한 지원방안 확대 및 설치모델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
 -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장소 부족·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추진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관부처 및 민간 포함)
 - 기존의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컨소시엄형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각종 설치규제 완화
- 중소기업친화형 보육인프라 다양화 및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의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입소순위 부여 등 최근 맞벌이 부모를 위한 고용친화적 보육지원체제로 변경 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차별적으로 우선지원방안 마련
 - 영유아보육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이용 순위 조정, 중소기업 보육지원체계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개편,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사업 등 필요한 규정 신설 또는 개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주체들의 부지나 건물 제공, 비용지원, 규제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완화, 각종 인센티브 마련
 - 대기업 직장, 법인, 민간어린이집 등과 위탁체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친화형 어린이집 지정 및 이용 지원

- 정규 시설보육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이돌보미, 시간연장, 야간연장, 방과후 보육서비스 연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직장보육 지원 플랫폼 구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중소기업 친화형 보육인프라 다양화 및 확대 사업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 및 조직체계 설립
 - 설치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 공동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다양한 지원주체 연계 및 설치장소 확보, 어린이집 설치-운영 토털 상담 및 지원, 중소기업 직장맘 교육 및 상담, 중소기업친화형 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등 중소기업 토털 지원서비스 기관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 전문 설치·운영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 매뉴얼 관리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사업 일괄 수행, 중소기업 직장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지원
-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 이용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실태 분석과 만족도 조사로 보육지원의 효과성 및 질적인 수준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로 매년 실시

제3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1.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남성의 저조한 육아참여는 남녀근로자의 일가족양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와 배우자출산휴가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자녀 1인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의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한계를 규정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는 달리 수급권이 가족이 아니라 부와 모의 개인에게 각각 부여
 - 현행 제도는 성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본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 가능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아빠의 달’ 도입
-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
 - 2014년에 3,42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4.5%에 불과
 - 2002년에 2.1%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
 -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4%가 남성이고, 유럽에서 비교적 남성 비율이 낮은 독일도 20% 수준(International Leave Policy Network, 2015)
 -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낮아 고용유지와 승진을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여야하는 직장문화와 관련

<표 7-5>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단위: %)

소득감소	직장내 경쟁력 저하	동료들의 업무부담	부정적 시선	직장 복귀	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자료 : 김영옥 외(2014b).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표 7-6>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분위기

(단위: %)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은 가능하나 부담을 느낌	여성은 자유로우나 남성은 아님	남성은 자유로우나 여성은 아님	남녀모두 어렵다
18.6	37.7	32.0	0.3	11.4

자료: 김영옥 외(2014b).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다. 외국사례

□ 각국의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전체 휴가 기간 중에 남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가장 중요

○ 부모휴가의 수급권이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부모휴가가 가족단위로 운영되어 ‘아버지 할당제’ 방식으로 적용

○ 선진국 대부분 부성휴가(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추세

<표 7-7> 주요국의 전체 출산관련 휴가기간 및 아빠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비교

(단위: 개월)

	전체 휴가 기간			아빠만 사용 가능 기간	
	전체	유급	66%이상	전체	66%이상
오스트리아	24	4.7	×	12	×
호주	24	24	1.9	×	×
벨기에	35.7	35.7	3.7*	4.5	0.5
캐나다	12	11.6	×	×	×
(퀘벡)	12.8	12.8	11.2	1.2	1.2
덴마크	18.6	11.2	11.2*	7.9	7.9*
핀란드	38.1	38.1	11.1*	2.1	2.1*
프랑스	72.5	9.8 or 36.5	3.8*	36.5	0.5*
독일	36	24+4	12+2*	×	×
그리스(민간)	19.9	12	6	4	2일
아이슬란드	15	9	9*	7	3
아일랜드	17.7	6	×	4.3	×
이탈리아	13.7+1	13.7+1	3.7	6.0	×
일본	24+2	24+2	13.9*	12+2	6
네덜란드	14.8	14.8	2.8	6	×
뉴질랜드	12.5	3.3	3.3	0.5	0.5
노르웨이	37.5	37	13*	3.7	3.3
포르투갈	36+1	12+1	6+1	4	0.9
스페인	72.5	5.1	5.1*	36	0.5*
스웨덴	36.5	16.4	13.4	2.5	2.5

<표 7-7> 계속

(단위: 개월)

	전체 휴가 기간			아빠만 사용 가능 기간	
	전체	유급	66%이상	전체	66%이상
영국	20.8	3.3	3.3*	×	×
한국	27(+5일)	27	3(+3일)*	12(+5일)	3일

주: 2014년 4월 현재 양부모 가족이 자녀 한명 당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휴가기간(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를 모두 합친 것임). *=상한선 있음. +는 보너스

자료: International Leave Policy Network(2015)으로부터 필자가 재구성

<표 7-8> 주요국의 부성휴가제도 비교

(단위: 주)

	기간			특이사항
	전체	유급	66%이상	
벨기에 OB	2	2	2*	3
캐나다 (퀘벡)	5	5	5*	1
덴마크	2	2	2*	
핀란드	9	9	9	2, 3
프랑스	2	2	2*	3
그리스(민간부문)	2일	2일	2일	
이탈리아 OB	1일	1일	1일	
네덜란드	2일	2일	2일	3
뉴질랜드	2	×	×	3
노르웨이	2	×	×	
스페인	2.1	2.1	2.1	3, 4
스웨덴	2	2	2*	3
영국	2	2	×	3
한국	5일	3일	3일	

주: 1) 2014년 4월 현재 상황. *=상한선 있음. 특이사항 1=기간 줄이고 급여 올리는 옵션. 2= 2회이상의 블록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3=특정한 자녀연령 이하이면 아무 때나 사용가능. 4=쌍둥이 출산이나 대가족이면 기간 연장.

2) 핀란드: 70% 소득대체이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대체율 인하하여 적용; 아이슬란드: 모성,부성,부모 휴가를 법으로 구분하지 않음; 이탈리아: 모성휴가에서 이들을 부성휴가로 이전해 줄 수 있음. 엄마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아빠가 3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자료: International Leave Policy Network(2015)으로부터 필자가 재구성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 주요 내용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득대체율 제고

- 실질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급여액수를 연동

-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 10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27.8%, 2013년 38%, 2014년 48.2%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실정
- 2014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전년도 3.3%에 비해 상승

○ 사업장별 1호 육아휴직자 우대

- 개별 사업장에서 성별, (비)정규직별 육아휴직 선도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성별, 정규·비정규직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별로 각각 최초 사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사업주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적용

○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부성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2.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 문제 해결, 육아휴직자의 업무부담 완화, 그리고 조직에서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통해 조직과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

○ 2013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육아휴직제도 보완 요구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인상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김영옥 외, 2013)

-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22.6%, 대체인력 채용 지원서비스 강화 15.7%, 대체인력·복귀인력 교육비용 지원 12.4% 등

나. 현황 및 문제점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휴가·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사업주의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제도사용이 저해되는 경향 존재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제도 시행
 - 신규인력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 지급 중
- 육아휴직 도입 사업체 중 36.2%가 시행에 어려움을 경험
 - 2013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도입 사업체 중 36.2%가 육아휴직 시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연속성 결여(55.9%), 인력부재(55.9%), 대체인력 물색곤란(33.6%) 등에 기인(복수응답)(김영옥 외, 2013)
-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사업체 인지도는 50%, 실제 지원받은 기업 비율은 6% 수준
-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상대적으로 휴직 이용이 많은 여성근로자 채용을 기피 가능

다. 외국사례

- 일본의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 등 조성금 제도(정형옥·안태운, 2013: 33에서 재인용)
- 일본은 2002년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한 직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으로서 임기를 정한 직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
-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에 따른 조성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 육아휴직취득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현직 등에 복귀하는 것을 정하여 대체요원을 확보하고, 휴직 종료 후에 현직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

라.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노동시장에서의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로에 따른 대체인력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근로자 개인차원에서는 경력유지를 지원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주요 내용

- 대체인력 활용 시 유발되는 제비용을 계상한 후 출산율과 고용율 제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결정
 - － 전체 사업체에 보편적 기준으로 채용장려금 제시를 위해 현행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1인당 매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으로 역량있는 대체인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및 채용장려금 적정수준 제시
 - －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채용장려금 지급
 - －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에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최소기간(최소 1개월)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사업체 규모와 산업별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 사업체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에서의 장애요인 검토 및 현황 파악
 - － 보편적 채용장려금과의 차등 지급액 가이드라인 제시
- 직위와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예: 대체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 추가 지원)
 - －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을 반영한 채용 장려금 차등 지급액 산출
 - － 채용장려금과의 차등 지급액 가이드라인 제시
 - － 전문직위 및 관리직위 비정규직(계약직) 채용시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지원 수준’에 준하여 지급

3.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제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음
- 2014년 출산휴가 사용자는 88,756명으로 급여의 사회보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에 2만 여명이었던데 비하여 4배 이상 증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 등은 제도 이용에서 배제
 - 제도적 사각지대로 법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 등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데, 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
 -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 직후에 퇴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지라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제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8.8만명(2014년 기준) 중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66.8%(5.9만명)(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1년 이내 고용보험을 상실한 비율은 2011년 14.7%, 2012년 14.6%, 2013년 13.2%
- 육아휴직자의 20%는 출산 1년 이후에 사용
-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출산직전이나 직후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 201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근로유형별 육아휴직 제공 사업체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여성 100%, 남성 12.2%,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 15.5%, 남성 1.8%(김영옥 외, 2012)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 제고
-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 제고를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활용도 제고

□ 주요 내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주 축소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공무원과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모성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와 월 60시간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근로자는 실제로 임금근로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모성보호가 필요함
-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이병희, 2015)
 -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2014년 8월 현재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의 25%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수혜자는 2014년 7월 현재까지 누적실적 182만명
- 신규가입자 우대
-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느끼는 추가 부담을 낮추어 사회보험 가입 동기 강화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요건을 대폭 완화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면 현행보다 그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수급요건을 실업급여에 비해 대폭 완화하여 비정규직의 수혜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 장기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 건강보험으로 이관함으로써 자영업 중 사 여성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육아기 단축근로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가능
- 2011년 9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고, 2012년 8월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⁴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육아휴직 급여 기준보다(통상임금 40%) 상향하여 통상임금 60%를(상한 150/하한 5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2014.10.1)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단축기

49) 사업주는 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②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③ 고용센터에 14일 이상 구인노력해도 대체인력채용불가 ④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2).

간 동안 지원금을 현재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
(대기업은 월 10만원→20만원)(2015.7.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는 2014년 1,116명으로 2013년 736명
대비 51.6% 증가

<표 7-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및 급여 총액, 2011~2014

(단위: 명, %)

연도	구분	인원(명)		금액(백만원)	
			남성		남성
2011		39	2(5.1%)	18	0.9(5.0%)
2012		437	22(5.0%)	733	50(6.8%)
2013		736	44(6.0%)	1,567	102(6.5%)
2014		1,116	84(7.5%)	2,554	238(9.3%)

주: 2011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됨.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개월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
용 가능

○ 2011~2013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500명에 대한 실태조
사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했다’
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다’ 26.2%,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였다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다’ 23.6% 순(김영옥 외b, 2014: 206)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한 이유
에 대해 ‘육아휴직보다 소득측면에서 유리해서’(32.6%), ‘경력을 지속할 수
있어서’(32.6%) 등 순으로 제도로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갖는 장점
을 제시(김영옥 외, 2014b: 207~208)

<표 7-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방법

(단위: %)

전체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용 이후 직장으로 복귀하였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100.0% (500명)	26.2%	23.6%	50.2%

자료: 김영옥 외(2014b),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p. 207.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제도 시행 연한이 짧고 개별 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여 제도 확산이 더딘 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평균 사용기간은 8.11개월(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23.82시간), 근로시간 단축형태는 88.6%가 시간단축형(주5일 근무하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미만으로 줄이는 형태)이고, 11.4%가 요일제(하루 8시간을 일하되 정해진 요일에만 근무)(김영옥 외, 2014b: 209~21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남녀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15.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담을 느끼거나 눈치가 보인다’ 또는 ‘신청이 어렵다’라고 응답(김영옥 외, 2014b: 217)

– 자신이 회사에서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인 경우가 80.2%(김영옥 외, 2014b: 22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도입률이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낮은 수준(김영옥 외, 2014a: 151)

–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71.1%인 반면, 단축제를 알고 있는 비율은 50.2%

–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41.2%인 반면, 단축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22.2%

○ 1일 2~4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동료들에게 업무가 쏠리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감이 제도 이용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이나 기존 인력관리 시스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기피

-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한 동료직원의 업무량 증가’(41.4%), ‘단축된 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

움’(17.1%) 순(김영옥 외, 2014a: 96)

-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입에 수반되는 제 비용을 덜어주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

나. 외국사례

- 유럽국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휴직을 병행하는 것으로 ‘시간제 육아휴직’으로 불리며 육아휴직의 한 유형으로 분류
- 유럽의 경우 육아휴직제도 자체의 도입률 뿐만 아니라 운영 상의 유연성도 높아, 많은 국가에서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운용
- 스웨덴은 관대하면서 유연한 육아휴직체계(flexible parental leave scheme)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녀 당 480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수료 때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상의 유연성도 높아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⁵⁰⁾
 - 벨기에의 경우, 전일제 육아휴직이 4개월간 주어지고 소정근로시간의 50%를 8개월 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의 80%를 20개월간 일할 수 있음⁵¹⁾

<표 7-11> 유럽 15개국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여부

도입(10개국)	부분도입(2개국)	비도입(3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자료: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 pp. 7-8.

- 적지 않은 국가에서 육아휴직과 별도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단축노동권을 부여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7: 6~8)

50) European Union. 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51) European Union. 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Belgium: leader in pre-school education.”

- 스웨덴의 경우 급여의 삭감 없이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수료 때까지 근무시간의 25% 단축 가능
- 핀란드는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는 자녀가 4세 전까지(장애 등 특별한 경우에는 7세) 단축노동권 부여
- 포르투갈은 자녀가 3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12세까지 단축근무가 가능
- 영국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와 무관하게 2003년부터 단축 또는 유연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
 - “Child-friendly working hours”로서 신청자격은 26주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이면서, 17세 미만(장애자녀인 경우 18세)의 자녀 및 가족의 돌봄 필요가 발생한 근로자
 - 최장 1년간 단시간 근로, 탄력근무 및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추가비용 부담 발생, 추가인력 충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Maternity Action, 2012)

다.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의 확산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양육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일·가정양립 실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통한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
- 주요 내용
 -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홍보 강화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을 대상으로 한 (가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매뉴얼”과 체험사례집 등을 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중소기업용 또는 특정 업종 맞춤형 등으로 특화

－ 기존의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대체인력 1인당 월 30~60만원) 제도 등

○ 기업의 수용성 제고

－ 사업장 맞춤형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 그에 따른 임금과 부가급여의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사업체별로 다양하게 운용

－ 1호 육아휴직자 배출 부서 및 사업장에 대한 포상, 장려금 제공 등 유효한 인센티브를 개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근로자수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

－ 모범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 제공

-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학습의 장 마련
- 사업장 내 제도 연구회, 상담창구의 설치 사례, 노조의 협력사례, 관리직 의식 교육사례 등

○ 단축근무 맞춤형으로 대체인력 서비스의 특화

－ 전일제 대체인력뿐 아니라 시간제 대체인력의 확보하여 제공

○ 제도 활용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모니터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현행보다 2배 연장

-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면 단축근무 기간을 2배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하면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

－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줄여가도록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그림 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방안

육아휴직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추가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추가
<기준>		<연장>

자료: 고용노동부(2015.8.7),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브로셔).

5. 육아휴직제도 중장기 개선 검토

가.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제도 활용률이 낮아서 혜택이 사실상 정규직 여성으로 편중
 - 남성근로자는 소득대체율이 낮고 직장문화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수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원직 복귀 및 장기적인 고용유지율이 낮아서 여성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편
-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실업급여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바, 급여의 수급대상을 비정규직, 남성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재원의 안정성 도모 필요
 - 급여의 수급자격을 관대하게 설계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요건을 완화해야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이외에 조세 등을 통한 다른 재원의 유입 필요

-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고용보험기금 내에서 모성보호·일가족양립사업은 실업급여사업과 분리 필요
- 자영업자와 무직자(전업주부)에게도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틀 내에서 곤란
 - 휴직제도를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고 기존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육아휴직제도는 자영업자나 무직자가 사회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현되기 곤란
 - 출산급여는 현행 건강보험으로 이관한다면 정책의 현금급여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적용 곤란
 - － 육아비용을 부모의 근로이력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아동수당과 유사
- 모성보호, 일가족양립, 양육비지원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틀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나. 정책방안

- 정책 목표
 - 휴직기간과 급여수준 연계
 - 고용보험기금 이외 재원 마련(예로 부모보험 등)
- 주요 내용
 - 연구 추진, 공청회 등 의견수렴 등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검토

제 8 장

결론

제1절 정책 관리 방안

제2절 결론

제1절 정책 관리 방안

1. 과제 분류 및 관리

가. 배경 및 필요성

- 결혼 및 출산에는 고용, 주거, 일-가정양립, 교육 등 많은 영역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은 여러 부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들로 구성됨
 - 일부 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 저출산현상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인구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저출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기간 내에 완수되기 어려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존재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나. 관리 방안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우선순위 등에 의거하여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관리
 - 핵심과제는 영향력, 대상 규모, 시급성 등이 큰 과제로 설정하며, 이외 과제들은 일반과제로 구분
 -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성(outcome)의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일반과제는 투입-과정-성과의 흐름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핵심과제 관리는 전문평가기관 분석 및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수행 부처(기관)에 환류(feedback) 등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
 - 일반과제 관리는 전문평가기관이 투입-과정-성과의 단계별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수행기관에 환류(feedback) 등 일련의 과정에 의거하여 추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중장기과제와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중장기과제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 완수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과제들로 설정하고, 단기과제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 완수할 과제들로 설정
 - 중장기과제의 선정기준은 사회공감대 형성 필요, 재원 마련 곤란, 사회구조적 개혁 필요 등을 고려
 - 중장기과제들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에 전체 추진 단계들을 제시하여 향후에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함
-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개 이상의 부처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협업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실적 등을 제출하고, 평가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합동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별도 관리(관련 부처 간 공동 책임 부여)

2. 효과성 평가지표 설정 방안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영역별 전략, 세부전략, 정책과제 등의 단계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지표를 도출하도록 함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의 종합적인 효과성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를 설정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효과성지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가임여성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조, 연령별 구조 등에 따라 출생아수가 감소하여도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통계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생아수 규모도 효과성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는 합계출산율이기보다 출생아수 규모이기 때문임
- 만혼화 대응 관련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적정한 시기에 하도록 유도하고 비혼 대신 결혼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초혼연령과 결혼률을 대표적인 효과성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핵심 정책과제로서 고용, 주거, 결혼문화 등과 관련한 정책들의 효과성은 대표적으로 청년고용률, 신혼부부 주거지원 수혜율, 결혼비용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주된 목적은 임신율 억제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임신이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정책의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임신소모율로 측정이 가능함
 -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효과성은 임신·출산 표준의료비 본인 부담률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효과성은 다양한가족 중 정책수혜율, 아동이 행

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은 아동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도록 함

□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종합적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들 과제들의 효과성은 유배우출산율로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핵심과제들로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효과성은 사교육비 규모로 측정하며,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돌봄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은 돌봄 및 보육서비스 이용 만족도로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정착시키는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종합적으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제고하여 출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은 취업여성의 출산율로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핵심과제로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효과성은 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율로, 중소기업 실천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의 효과성은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건수 및 비율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의 효과성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육아휴직자 비중으로 측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표 8-1〉 출산을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 방안

구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비고 (자료 출처)
결혼·출산지원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통계청
1.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초혼연령, 초혼률		통계청
-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청년고용률	통계청
- 결혼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수혜율	국토부
-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평균 결혼비용	통계청

〈표 8-1〉 계속

구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비고 (자료 출처)
2.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소모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조사)
-임신·출산지원 강화			임신·출산 표준의료비 본인 부담율	복지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다양한가족(가구) 중 정책수혜가구 비중	복지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아동 삶의 만족도	복지부
3.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 조성		유배우 출산율		통계청 자료 이용 산출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사교육비	교육부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돌봄/보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복지부
-돌봄지원체계 확충				
4.일-가정 양립 실천 정착		취업여성 출산율		통계청 자료 이용 산출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 확산			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 유지율	고용부
-중소기업 실천 여건 확충			중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건수/비율	여가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고용부

제2절 결론

□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시행함

○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기본계획 실행 직전인 2005년 1.08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수치적으로 0.03명 증가한데 그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 간 저출산대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1·2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향후 발전방

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출산율 회복이 미래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은 실시함

○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 변동과 관련한 미래사회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서 노동력, 경제성장, 사회보장의 세 측면에서 출산율 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구축하여 편익을 추정함

－ 합계출산율이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인구대체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2030년대와 2040년대 노동력 부족 수준을 완화시키고 2050년대부터는 공급부족에서 공급초과로 전환하는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됨

－ 출산율 회복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폭을 5~10% 수준 완화시키는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됨

－ 출산율 회복은 국민연금 재정의 당기 수지적자 시작연도와 적립기금 고갈시기를 각각 1년씩 연장하는 편익을 발생하며, 고갈시기 이후 연도에 적자폭을 크게 시키는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남(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 출산율 회복 시 적립기금 고갈 시기 이후 연도에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편익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간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매년 저출산대책에의 투자 대비 편익(국민연금 재정 안정, 잠재경제성장률 둔화폭 5~10% 완화, 노동력 부족 해소 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남

• 보육,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투자는 당장의 고용률을 높이는 등 현재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편익은 더욱 증가할 것임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데 그쳤으나, 이를 인구학적으로 분해해보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기여를 유배우율의

부적(-) 기여가 상쇄한 것으로 평가됨

○ 유배우율의 부적 기여는 만혼과 비혼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그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임

－ 만혼비혼을 가치관의 변화로만 간주하고 그 원인으로서는 청년고용 불안정,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등에 대한 대책 미흡

○ 유배우출산율은 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아 출산율을 반등세로 전환하는데 기여는 하지 못한 실정

－ 저출산 현상은 자발적으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난임, 생식보건 문제, 동거 등을 이유로 한 출산 포기 등 비자발적으로 원인에도 기인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였음

－ 자녀양육의 고비용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나 그간의 대책은 단순한 비용 지원에만 한정되어 왔음

－ 보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한데다가 여전히 보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경력단절과 출산 축소포기를 유발하는 일가정양립 곤란문제는 그간 도입한 많은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없는데 기인함

□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출산율을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함

○ 사회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취업→주거→결혼 간의 연계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함

－ 교육-취업 간 연계 강화 및 취업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부터 취업 준비 및 고용 불안정 기간 단축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청년기부터 신혼기까지 주거 마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함

－ 고비용 결혼문화관행을 개선하는 등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

건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난임, 건강·사회문화적 이유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중절, 양육에 대한 차별·장애·불안전 등을 해소하여 비자발적인 임신·출산 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만혼화 등으로 인한 난임 발생, 임신 후 건강문제로 인한 자연유산·사산 발생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을 보다 강화하도록 함
- 미혼모, 동거 등의 경우 사회문화적 차별 및 자녀양육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거나 출산 후 영아 유기, 입양 등을 선택하는 경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함
- 자녀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영위토록 함

○ 획일적인 지원 중심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돌봄 및 교육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미취학기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높은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 등으로 정규 교육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어, 자녀교육비 증가, 입직연령 상승 등 부작용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맞벌이가족 등의 이용 상 불이익, 길어진 대기시간, 시설보육 의존성 증가(가정양육의 중요성 훼손), 보육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취학전 자녀에 편중되어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경력 단절, 사교육비 증가, 아동안전문제 증가, 추가 출산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여 돌봄지원체계를 확충하도록 함

○ 초기 제도 도입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일가정양립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여 실질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정착’하는 전략이 필요함

- 휴가·휴직급여의 사회보험화 및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여의 비현실성, 광범위한 사각지대, 장시간 근무관행 지속 등 여건이 미흡하므로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함
- 공공부문과 대기업 종사 여성들에게만 한정되고,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남성 등은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소기업 실천 여건을 강화하고 남성의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일가정양립 프로그램 보급 및 중장기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함

□ 이들 전략과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여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도록 함

- 영향력이 크고 대상이 많고 시급성이 큰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도록 함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 예산 부담이 큰 과제(재원 마련이 단기간 어려운 과제 등), 사회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하여 실시가 필요한 과제, 여러 부처가 분산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협업과제로 추진하도록 함

- 강은영·진미정·옥선화 (2010).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요인 탐색: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2), pp. 135-144.
- 경찰청(2014). 2013 교통사고통계.
- 고용노동부(2014). 2014년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 고용노동부(2015.8.27).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브로셔).
- 고은경(2013.11.10). 갤러리아, 난임휴가 등 일가정양립지원 확대. 한국일보 18면.
- 곽인숙(2013.3.31). “난임휴직” 아니면 아직도 화장실서 주사 놓았을 것. 노컷뉴스.
- 관계부처 합동(2015). 2013~2014년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5만 7천명 정규직 전환. 2015. 7.14일자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충북교육청(2008). 방과후학교 국제화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충북교육청.
- 교육부(201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18.일자 보도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교육통계연보.
- _____ (2014). 2014 교육통계연보.
- 국가인권위원회(2015.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결정문)
- 국무조정실·한국개발연구원(201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모델(안) 개발 관한 연구.
- 국민권익위원회(2013).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2013.5.15.일자 보도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향 보고서.
- 국토교통부(2014). 2014년 주거실태조사.
- _____ (2015a).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2015.1.27.일자 보도자료.
- _____ (2015b).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잠정 연기. 2015.6.16.일자 보도자료.
- _____ (2015c).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
- 국회예산정책처(2012a).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
- _____ (2012b).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2013).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중소기업 사업영역

-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권혜진(2015.9.2). 자녀 결혼비용, 아들 8천만원 이상·딸 6천만원 이하. 연합뉴스.
- 김난주·강민정·박건표·전병유·강문정(2014).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동규(2015.3.12). 서민층도 집 산다...2월 디딤돌·공유형모기지 대출실적 증가. 연합뉴스.
- 김동호·박현영·정선언·김민상·김기환(2015.7.14.). 직장어린이집 인센티브 늘리고.. 홍콩처럼 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중앙일보.
- 김두철 외(2013). 리스크와 보험. 문영사.
- 김명희·권혁찬·백수진·박춘선·이경훈·문한나·홍성규(2013).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조운주(2013). 민간베이비시터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a). 2012년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종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b).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암·오수영·홍성연·나성훈·이승미·강운단·김중운·심순섭(2013). 취약지역 산모를 위한 안정적 진료 및 분만 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대한산부인과학회.
- 김영옥·김태홍·홍승아(2012). 201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김종숙·배호중(2013). 201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김종숙·배호중(2014a). 2014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이택면·강민정·임희정·나성은(2014b).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용태 외(1993). 근로자주택의 공급효과 분석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미·김은영(2011). 모자동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와 의료기관 요인. 대한간호협회지 41(5), pp. 593-602.
- 김은설·장혜진·김문정·Susan Walker(2011). 영유아기 자녀부모특성별 부모교육 강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김길숙·이연주(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관련 치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자·장혜경·최인희·김소영·선보영(201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곤·박홍용 (2015.9.29). 잠재성장률 갉아먹는 중소기업정책금융. 서울경제.
- 김종진(201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쟁점, 과제: 서울시 '좋은 일자리'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3. 4). 국회의원 이상규의원실.
- 김주일·성지미·안주엽·황준욱·김우진(2013).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지은(2014).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서울: 주택산업연구원.
- 김태현·차우규·조영태·유종열·김혜환·오세라·심은영·임재한·김아영(2011).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교원대학교.
- 김현철·윤유진(2012). 외국의 사교육 현황 분석: 미국, 중국, 일본, 핀란드를 중심으로. 사교육 정책중점연구소.
- 김형수·박재승(201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건축계획요소 및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2(4), pp. 3-14.
- 김형준(2005). 규모별 임금격차와 자발적 실업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재정포럼 10(1), pp. 35-45.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이미정·이택면·김은자·선보영·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효정(2013.11.18). 학력? 나이? 토익? 이제 스펙 필요 없다. 주간조선.
- 김희숙(2014). 당뇨병 임신 발생률 증가에 따른 국가모자보건학적 대책.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1), pp. 118-124.
- 김희연·김군수·신기동·송승현(2015). 아이행복 부모교육에 달려있다. 이슈 & 진단 174. 경기개발연구원.
- 남우근(2012).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 남원석(2009). 전후일본 주택정책의 성격변화: 복지체제론이 관점에서. 주택연구 17(4), pp. 153-181.
- 노동부(2003). 노동백서. 서울: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2014). 2014 임금보고서: 국제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서울: 노사정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_____ (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_____ (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_____ (2014. 12. 18).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대책.
- 류호섭·이화룡·최병관·정주성·정진주·신나민·석민철·유서령·정동렬·이재형·노란·조일환·이성식·우상범(2011). 유휴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 교육부.
- 박복순(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한부모가정학 1, pp. 41-73.
- 박재현(2015.7.16). SK 건설, 모성보호제도 전면 확대.. 난임휴가제 등 도입. 경향신문.
- 박준오(2014).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 결혼 차수를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 박지순·김주희·이정현·손향미·조아란(2011). 가사사용인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변용찬·김동희·이선희(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종임·조순옥·양병찬·권영숙·박효진·노희준(2009).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2013). 2012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3차년도.
- 보건복지부(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_____ (2014). 2014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_____ (2015a). 2014 보육통계.
- _____ (2015b).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 2015.4.29.일자 보도자료.
- _____ (2015c).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2015.11.20. 일자 정책브리핑 자료.
- _____ (2015d). 2015 복지사업안내.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a).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여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b).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편)(2013). 호주의 보육 유아교육 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대학교병원·보건복지부(2012).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울연구원(2014). 해외출장노트, 네덜란드의 부모교육. <https://www.si.re.kr/node/49990> 에서 2015.10.1 인출
- 손정순(2012).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 안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2012. 12). 안산: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안산시비정규직노

- 동자지원센터.
- 송현숙(2014.11.19). 어렸을 때 충분히 놀았던 학생일수록 “지금도 행복해요”. 경향신문.
- 양미선·서문희·김정민(2014).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2014.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발간예정)
- 양애경(2011). 일본 방과후학교 사례탐방 국외연수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가족친화지수 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 여성가족부(2014).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안)(2015~2019). _____(2015). 201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2014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여유진·김수정·김은지·최준영(2013).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예지은·진현·조현국·이민훈·박준·이동원·백성욱(2010). 대한민국 위킹맘 실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771호.
- 오호영(2014).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 KRIVET Issue Brief 제49호.
- 우석진(2008). 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 經濟의 分析. 제14권 제3호.
- 유성운·노진호(2015.2.10). 스펙비용·등록금 1년 2200만원...알바 수입은 월 52만원. 중앙일보.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윤상현·조득환(2010). 성서1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 은석(2015).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35호 제2권.
- 이강아·그레이스정·이현아·최인숙(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병희(2015).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5.5.15.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 (2009a).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서문희·박세경·윤홍식·진미정(2009b).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심층분석: 저출산원인과 정책방향.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경희 (편) (2010). 저출산의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2012). 결혼-출산간의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윤홍식·오상훈(2012).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이지혜·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박지연·안이수·김근영(2013).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3). 가족변화에 대응한 육아 출산지원방안 연구 : 출산의 고령화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인사혁신처(2013).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임성은(2009).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2, pp. 83-103.
- 임인택(2013.9.5.).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여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겨레신문.
- 장혜경·홍승아·김혜영·정경자·김보영(2006). 주요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13.8.12), 대기업, 회사관련 자격증, 도전정신 갖춘 인재 선호 (2012년 주요 대기업 신규 채용과 스펙 연관성조사 보도자료).
- 정경희·남상호·정은자·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형욱·안태운(2013). 경기도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조덕희(2012). 중소기업 고용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향후 정책과제. 서울: 산업연구원
- 조진일·장명림·최형주·김은설·박희원(2014).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중소기업중앙회(2014). 2014 중소기업 위상지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진미정·김엘림·이현아(2012).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 연구센터.
- 채창균(2014.4.30). 4년제 대졸과 전문대졸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비교. KRIVET Issue Brief 제50호.
- 천현숙·김영표·정희남·김혜승·하수정·김진범·윤윤정·오민준·김태한 외(2012).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1). 국토연구원

- 천현숙·박천규·이운상(2015). 세대간·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청년위원회(2014). 스펙초월 채용에 대해 알고 싶은 11가지. 서울: 청년위원회
- 최은영·황성온·황우상(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1a).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_____(2011b). 2010 인구주택총조사.
 _____(2012).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012.12.21.일자 보도자료.
 _____(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 통계청.
 _____(2014). 2014년 사회조사(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결과. 2014.11.27.일자 보도자료.
 _____(2015).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5.2.26.일자 보도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관련 통계. 내부 자료
- 한국은행(각 년도). 기업경영분석결과.
- 현대경제연구원(2014).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희망자녀수는 2.11명, 합계출산율은 1.18명.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14-6(통권 557호). 2014.02.11.
- 호경업(2015.1.1.).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노동생산성 높아자] 한국 노동생산성, OECD 34개국 중 28위... 투자 기피 주요인. 2015.1.1. 조선비즈.
- 홍승아·장혜경·문미경·이인선·정재훈(2012).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홍승아·김소영·이아름·정재훈(2014a). 주요국의 일가정양립 문화 및 가족친화경영 성과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홍승아·최인희·이아름(2014b). 남성의 일가정양립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황나미·채수미·박승미·장인순·김지연(2014). 2013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나미(2015). 모자 건강보호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제224호. pp. 61-72.

日本 企劃委員會(2005). 少子化社會に關する國際意識調査

日本 內閣府(2010). 平成 22年 日本 少子化白書

日本 內閣部 新制度施行準備室(2014).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07.3.28) 国住備 第160号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要綱(2015.4.9) 第19号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2015). The NQF

Snapshot Q3 2015. November 2015.

<https://files.acecqua.gov.au/files/Reports/2015/NQF%20에서> 2015.9.1. 인출

Australian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Long Day Car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Funding Guideline

Baker, D., Motoko A., Gerald, K., Wiseman, A. W.(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1), pp.1-17.

Bennett, J., and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Bray, M. and Kwok, P.(2003). Demand for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conceptual considerations, and socio-economic patterns patterns in Hong Ko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6), 611-620.

Bray, M.(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Fundamentals of educational planning, 61. Paris: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_____(2009). Confronting the shadow education system: What government policies for what private tutoring? Paris: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Canadian Fertility and Andrology Society(2010).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in Canada: 2010 results from the Canadian ART Register.

Chung, S.H., Kim, H.R., Choi, Y.S., Bae, C.W. (2013). Trends of Breastfeeding Rate in Korea (1994-2012): Comparison with OECD and Othe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8(11), pp. 1573-1580.

Gut, G. F. and Monell, J.(2008). PRIVATE tutoring. *Independent School* 2008, 67(4), pp.26-36.

Heymann, J., McNeill, K. (2012). Families at work: What we know about conditions globally. Policy Brief.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xpert Group Meeting. UCLA World Policy Analysis Centre)

HR Daily Advisor(2008.7.3). Family and Medical Leave: Can an Employee Use Intermittent FMLA Leave for Fertility Treatments? <http://hrdailyadvisor.blr.com/2008/07/03/family-and-medical-leave-can-an-employee-use-intermittent>

- fmla-leave-for-fertility-treatments에서 2015.09.29 인출
- IBFAN(2011). State of the code by country. <http://ibfan.org/art/Blue-SOC-2011.pdf>에서 2015. 10. 13. 인출.
- Institut de la statistique du Quebec(2015). Rapport annuel 2014 Conseil de gestion de l'assurance parentale.
- International Leave Policy Network (2015)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search 2014. 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에서 2015. 4. 1. 인출
- Jamieson, L., and Simpson, R. (2013). Living alone: Globalization, identity and belonging. England: Palgrave Macmillan.
- Lee, Y.M., Song, K.H., Kim, Y.M., Kang, J.S., Chang, J.Y., Seol, H.J., Choi, Y.S., Bae, C.W. (2010). Complete rooming-in care of newborn infant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4(5), pp. 634-638.
- Maternity Action(2012), "Child-friendly working hours," Maternity Action information sheet, Feb 2012.
- Moss, P. (ed.). (2013).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3.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OECD(2012). Inequality in labour income-what are its drives and how can it be reduced?. Paris: OECD. <http://www.oecd.org/tax/public-finance/49417273.pdf>에서 2015.10.1. 인출
- _____(2013a). Starting strong III: Quality Toolbox for early education and care.
- _____(2013b).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_____(201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preliminary data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eptember 2014
- _____(2015a).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15b), Early years inspection handbook.
- _____(2015c),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Ofsted(2015a). Early years inspection handbook. Reference no: 150068. August 2015.
- _____(2015b). Become a childminder or child care provider.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zations/ofsted>에서 2015.11.12. 인출.

Securite Sociale(2015). Guide des Prestations 2015.

<https://www.caf.fr/sites/files/caf/771/actu-guidepf/2015-05-guide0Sp20%에>
서 2015.11.12. 인출.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012). 2010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National Summary Report.

Sohby, H.(2012). The de-facto privatiz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Egypt: a study of private tutoring in technical and general schools,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2(1), pp. 47-67.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7). Parental leave in European companies: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 Time 2004-2005. pp. 6-8.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Wanda K. Nicholson, Kevin D. Frick, And Neil R. Powe,(2000), Economic Burden of Hospitalizations for Preterm Labor in the United States, *Obstetrics & Gynecology*, 96(1), pp.95-100.

WHO(2012). Born Too Soon: The Global Action Report on Preterm Bir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UNICEF(2015)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Revised, updated and expanded for integrated care.

http://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bfhi_trainingcourse/en/
에서 2015. 10. 13. 인출

<국내 웹사이트>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혼인통계, 출생통계, 경제활동인구통계). <http://kosis.kr/>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http://www.index.go.kr>.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4&smenu=3>
에서 2015.9.1. 인출

근로복지공단. '여성고용 촉진시설지원'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용자' 안내
https://www.kcomwel.or.kr/empl/wome/loan_idx02.jsp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ffm.mogef.go.kr> 에서 2015.9.1 인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에서 2015. 10. 10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주택도시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한국교육개발원, 졸업자취업통계시스템. <http://swiss.kedi.re.kr>에서 2015. 9. 21 인출.

LH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
http://apply.lh.or.kr/LH/index.html?gv_url=GUD::CLCC_GUD_0150.xfdl&gv_menuId=1020406&gv_param=LCC:Y#GUD::CLCC_GUD_0130:1020404 에서
 2015.9.1. 인출

LH공사, 신혼부부전세임대 분양가이드.
http://apply.lh.or.kr/LH/index.html?gv_url=GUD::CLCC_GUD_0150.xfdl&gv_menuId=1020406&gv_param=LCC:Y#MN::CLCC_MN_0010: 에서 2015.9.1 인출.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해외 웹사이트>

싱가포르 Housing & Development Board.
<http://www.hdb.gov.sg/cs/infoweb/homepage> 에서 2015.10.1. 인출

미국 Department of Labor(2015.7).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28f.htm> 에서 2015.10.3. 인출

일본 도시재생기구.
 Urban Renaissance Agency. <http://www.ur-net.go.jp/kinkyo/> 에서 2015.10.1. 인출

일본 동경도 이타바시구. 신혼 자녀양육세대 안내.
http://www.city.itabashi.tokyo.jp/c_oshirase/002/002763.html 에서 2015.9.1.인출

일본 에치젠시. 신혼부부 정주화 지원사업.
<http://www.city.echizen.lg.jp/office/070/020/teijyu/shinkonteijuukasien.html> 에
 서 2015.9.1. 인출

일본 카미시로로쵸. 자녀양육세대지원·출산장려를 위한 주택건설조성금 교부 사업
<http://www.kamishihoro.jp/page/00000192> 에서 2015.9.1. 인출

일본 타가미시. 신혼·자녀양육세대 개인주택취득자금 이자보조.
<http://www.town.tagami.niigata.jp/living/kr/Kr30.html> 에서 2015.9.1. 인출

일본 타카하기시. 신혼가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

- <http://www.city.takahagi.ibaraki.jp/index.php?code=1580> 에서 2015.9.1. 인출
- 싱가포르 통계청, <http://www.singstat.gov.sg>
- 홍콩 통계청, <http://www.censtatd.gov.hk>
- 포르투갈 통계청, <http://www.ine.pt>
-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http://www.asrm.org/?vs=1> 에서 2015.10.1 인출
- A guide to family life education in Singapore.
<http://www.aitong.moe.edu.sg/wbn/slot/u1150/A%20guide%20to%20family%20life%20education%20in%20singapore.pdf> 에서 2015.9.29. 인출
- European Union, 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에서 2015.10.1. 인출
- European Union, 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Belgium: leader in pre-school education,”
http://europa.eu/epic/countries/belgium/index-2013_en.htm에서 2015.10.1.인출
- Fertility Law Canada. <http://www.fertilitylawcanada.com> 에서 2015.9.29 인출
- Head Start. <http://eclkc.ohs.acf.hhs.gov/hslc>에서 2015.9.29 인출
- Healthy Families America.
http://www.healthyfamiliesamerica.org/about_us/index.shtml에서 2015.9.29. 인출
- Shelter: The housing and homelessness charity.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housing_benefit_and_local_housing_allowance/what_is_housing_benefit/housing_benefit_if_you_are_under_35 에서 2015.9.1. 인출
- Stanford University. On-Site Child Care. <https://cardinalatwork.stanford.edu/> 에서 2015. 9.30 인출.
- text4baby. <https://www.text4baby.org/>에서 2015.9.29 인출
- University of Auckland. Early childhood centres.
<https://www.auckland.ac.nz/en/> 에서 2015. 9. 30 인출.
- Zero to Three. <http://www.zerotothree.org/>에서 2015.9.29 인출
- Afterschool Alliance. www.afterschoolalliance.org
- OECD Stat. <http://stats.oecd.org/>